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of communication, healing, and integration
the 9th international symposium




The Commonality of Korean's Living Culture and Unification

2012. 5. 19 (Sat) 9:30 ~ 18:00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02호 102 College of Law in Konkuk University

주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후원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건국대학교

프로그램

·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생활문화의 공통성과 생활문화 통일

* : 2012년 5월 19일(토) 9:30 ~ 18:00

* 장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102호

* : 김진환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9:30~10:00]

개회식 [10:00~10:20]

개회사: 김성민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장, 한국

1 [10:20~12:00] 코리언의 생활문화 비교 분석

사회: 김기덕 /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국

남북한 생활문화 비교 분석

: 정진아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한국

토론: 김병욱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한국

코리언 디아스포라 생활문화: 비교의 의의와 실제

발표: 김진환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국

토론: 조경희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

[12:00~13:00]

2부 [13:00~16:00] 라운드테이블 - 코리언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모색

사회: 정진아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한국

재중 조선족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발표자: 허영길 / 연변박물관 연구관원, 근현대문화부 주임, 중국

재일조선인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 김봉양 / 코리아NGO센터 도쿄사무국 사무국장, 일본

고려인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발표자: 김발레라 / 우스리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부회장, 러시아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발표자: 한정미 / 통일부 하나원, 언어문화적응 교육 담당, 한국

한국인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발표자: 정승안 / 동명대 자율전공학부 교수, 한국

[16:00~16:20]

3부 [16:20~18:00] 독일 통일 사례와 코리안의 문화통합 방향

: 신동훈 /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

독일통일과 동독인정체성

발표: 이동기 / 서울대 평화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한국

토론: 이기식 /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한국

남북한 생활문화의 현실과 통합 방향

발표자: 전영선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한국

토론자: 전연숙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팀장, 한국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of communication, healing, and integration
the 9th international symposium

The Commonality of Korean's Living Culture and Unification

Date : 2012. 5. 19 (Sat) 9:30 ~ 18:00

Venue : 102 College of Law in Konkuk University

[Program]

Registration [9:30~10:00]

Opening Ceremony [10:00~10:20]

Opening speech : Sungmin Kim / Director, Research Center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Panel I [10:20~12:00]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s living culture

Moderator : Giduck Kim /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 contents,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and North Korean's living culture

Presenter : Jina Chung / HK Professor, Research Center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Discussant : Byeonguk Kim / Post-Doct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South Korea

Korean diaspora's living culture: The significance and actuality of comparative study

Presenter : Jinhwan Kim / HK Research Professor, Research Center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Discussant : Kyunghee Cho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ungkonghoe University,
South Korea

Lunch [12:00~13:00]

Panel II [13:00~16:00] Korean's living culture and seeking for common living culture

Moderator : Jina Chung / HK Professor,

Korean diaspora in China's living culture and Commonality

Presenter : Yongji Xu / Research Librarian, Modern Heritage Department, Yanbian Museum, China

Korean diaspora in Japan's living culture and Commonality

Presenter : Boongang Kim / The secretary general at Tokyo office, Korea NGO Center, Japan

Korean diaspora in Russia's living culture and Commonality

Presenter : Valeriya Kim / Vice-President, National Cultural Autonomy of Koreans in Ussurisk, Russia

North Korean Refugees's living culture and Commonality

Presenter : Jeongmee Han / An assignment doctor for the speech and the enculturation education,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Ministry of Unikorea, South Korea

South Korean's living culture and Commonality

Presenter : Seungan Jung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free majors, Tongmyong University, South Korea

Coffee Break [16:00~16:20]

Panel III [16:20~18:00] A case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cultural integration

Moderator : Donghun Shin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The East German Identity in Unified Germany

Presenter : Dongki Lee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Discussant : Kishik Lee / Professor, Department of German, Korea University, South Korea

The state of South and North Korean's living culture and cultural integration

Presenter : Youngsun Jeon / HK Research Professor, Research Center of The Humanities for Unification, Konkuk University, South Korea

Discussant : Yونسuk Jeon / Manager of Research Center, North Korean Refugees Foundation, South Korea

이 발표집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NRF-2009-361-A00008)

레

- 1 발표 남북한 생활문화 비교 분석.....11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한국)
- 제2 발표 코리언 디아스포라 생활문화: 비교의 의의와 실제.....27
/ 김진환(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 3 발표 재중 조선족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47
/ 허영길(연변박물관 연구관원, 근현대문화부 주임, 중국)
- 제4 발표 재일조선인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53
/ 김봉양(코리아NGO센터 도쿄사무국 사무국장, 일본)
- 제5 발표 재러 고려인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57
/ 김발레라(우스리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부회장, 러시아)
- 제6 발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63
/ 한정미(통일부 하나원, 언어문화적응 교육 담당)
- 제7 발표 한국인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71
/ 정승안(동명대 자율전공학부 교수, 한국)
- 제8 발표 독일통일과 동독인정체성.....79
/ 이동기(서울대 평화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국)
- 제9 발표 남북한 생활문화의 현실과 통합 방향.....87
/ 전영선(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국)

1 [10:20~12:00] 코리언의 생활문화 비교 분석

: 김기덕 /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국

생활문화 비교 분석

: 정진아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한국

토론 : 김병욱 /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한국

코리언 디아스포라 생활문화 : 비교의 의의와 실제

발표 : 김진환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국

토론 : 조경희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

남북한 주민의 생활문화 비교 분석

정진아*

1. 머리말

19세기 후반의 정치경제적 변동으로 인한 이산, 20세기 초 일제 식민지배로 강제이산이 이루어지면서 코리언(Korean)의 생활문화는 다양하게 변용되기 시작하였다.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문화 역시 20세기 초 일본의 자본주의 이식,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사회주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하게 변용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남북에 체제를 달리하는 분단정권이 수립되고 남북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되면서 남북 주민의 생활문화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생기게 되었다. 비록 역사와 생활을 같이하면서 내재된 모태적 생활문화가 폭넓게 공유되고 있지만 분단 이후의 생활 속에서 생활문화의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문화는 분단과 전쟁, 압축적 근대화와 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 생활문화 등의 복합적인 영향 아래 변용되어 갔다.

그동안 남북한 주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적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식생활, 주생활, 의생활, 세시풍속, 전승놀이 등 주로 한국인들이 향유해온 민속 원형을 조사하고 복원하는데 중심이 있었다. 둘째는 현대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이다. 현대인이 누리고 있는 현대적 생활문화의 특징을 포착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남북한 현대인의 문화 현상의 특징을 스케치하듯이 그려내고 있다. 셋째는 전통적 생활양식이 현대 남북한 주민의 생활문화 속에 얼마나 유지·존재되어왔는가 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현대인의 생활문화 속에서 전통문화의 원형 혹은 유제를 찾고, 전통적 생활문화가 현대적 생활문화로 변용되어가는 맥락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넷째는 남북한 주민의 생활문화 비교 연구이다. 이 연구는 분단 이후 이질화된 생활문화를 문헌자료를 통해 연구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방법은 과거와 현재 남북한 주민들이 향유해온 생활문화의 일단을 보여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들이 향유해온 민속 원형을 복원하거나 현대인이 보여주는 문화 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며, 각 분야별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정을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남북한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문화의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 즉, 현대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생활문화 속에 전통적인 생활문화가 어떻게 전승되고 있고, 근대적 생활문화와 접목되면서 다양하게 변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문화의 변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2011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과 인근 도시에 살고 있는 남한주민 501명, 북한이탈주민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민족정체성과 트라우마, 생활문화와 관련된 97개 항목을 질문지로 만들었고, 조사지역, 출생지, 나이, 성별, 국적, 세대, 학력, 직업, 도농, 결혼유무, 가족형태, 가족구성, 거주기간, 주거형태를 기본 질문으로 하여 설문조사의 내용이 기본 항목들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생활문화 관련 설문은 크게 생활풍습과 생활의식을 묻는 질문으로 대별된다. 생활풍습을 묻는 질문에서는 언어와 의식주와 통과례, 세시의례를 조사하였고, 생활의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친족주의와 남아선호도, 교육관, 결혼관, 직업관 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문화의 추이를 개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다.¹⁾ 이 연구는 서울과 인근 도시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서 있는 도시인들의 생활문

*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화 추이를 일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나 전통적 생활문화를 도시인들에 비해 좀 더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농촌 거주자에게 대한 설문조사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남한주민의 생활문화상을 보여주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문화를 들여다보고자 했으나,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주민의 생활문화를 온전히 보유한 사람들로 판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분석과정에서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이 비교분석의 근본적인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조사는 양적 조사로서 현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의 개략적인 경향성만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생활문화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원조물자의 유입, 소련·미국문화의 영향, 196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사회주의 압축적 근대화,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 및 고립과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남북한 주민의 전통적 생활문화에는 새로운 생활문화적 요소가 스며들었다. 남북한 주민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적 생활문화와는 다른 생활문화를 영위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과연 남북한 주민의 전통적 생활문화가 현재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생활풍습 : 면면히 유지되고 있는 전통 생활풍습

1) 의식주

한복을 입는 날을 묻는 질문에 남한주민들은 ‘특별한 행사’ 때와 ‘명절 때’ 즐겨 입는다고 대답했다. ‘안 입는다’는 응답은 30.5%였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입는다는 비율은 2.6%에 불과하여 한복이 일상복이 아닌 의례적인 옷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한복 입는 날

분류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남한 입국연도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안 입는다	30.5	45.0	62.1	39.0
명절 때	40.1	36.7	27.6	39.0
특별한 행사	40.7	17.4	10.3	19.5
가족모임	3.5	5.5	0.0	7.8
일상적으로	2.6	0.9	0.0	1.3

※비고: 단위 %, 무응답 제외

북한이탈주민들은 절반 가까운 45%의 사람들이 ‘안 입는다’고 대답하여 남한주민보다 한복착용 빈도수가 낮았다. 한복을 입는 사람들은 ‘명절 때’, ‘특별한 행사’ 때 입는다고 답변하였지만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에 비해 결혼식이나 회갑연 등 특별한 행사 때 한복을 입는 비율이 낮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연도²⁾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 입는다’는 답변이 23.1%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2006년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60% 넘게 입지 않는다고 대답한 반면, 남한 사회에 들어 온 기간이 짧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안 입는다’는 답변이 40%가 채 안 되었다. 북한에 있을 때는 한복을 보다 자주 입었지만, 남한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수록 한복을 입지 않는 비율이 급증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 남한입국 과정에서 가족해체 현상이 심해서 특별한 가족행사에서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1) 중복응답의 경우는 본문의 <표> 작성과정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전체 비율이 10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밝혀둔다.
- 2) 여기서 입국연도의 기준을 2006년으로 정한 것은 이때부터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대량 입국하였기 때문이다.

한복을 입는 이유에 대해서 남한주민들은 ‘특별한 행사에서 누구나 입어야 하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 35.7%로 가장 많았고, ‘아름다운 옷이므로(22.6%)’, ‘내가 한민족임을 느낄 수 있어서’ 16.4%의 순이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내가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서(26.7%)’, ‘아름다운 옷이므로(25.0%)’, ‘내가 한민족임을 자랑하고 싶어서(23.3)’, ‘특별한 행사에서 누구나 입어야 하기 때문에(20.0)’의 순으로 대답하였다. 남한주민들이 행사 때 누구나 입어야 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한복을 착용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은 한복을 통해 한민족으로서 의식과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조선옷을 ‘민족옷’으로 규정하고 민족옷 입기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북한이탈주민들도 자연스럽게 한복을 곧 민족옷으로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착용하는 것 같다.³⁾

“밥상에 김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한주민의 29.5%가 ‘매우 그렇다’, 41.9%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하면 71.4%가 ‘그렇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본격적으로 외식문화에 노출되고 다양한 음식문화를 접하며 그것을 향유하는 세대로서 김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대가 되면 다양한 음식문화에 노출되면서 음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즐기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치 선호도가 낮은 것이 김치를 배척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20대가 “밥상에 김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아니다’가 아니라 ‘상관없다’고 대답하였고, 이는 결혼을 하고 집밥으로 돌아오는 나이가 되면 다시 김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한국인 식생활문화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는 연령을 불문하고 여전히 한국인의 밥상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김치선호도가 더욱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90% 가까운 사람들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하였던 것이다. 반면 ‘아니다’, ‘상관없다’는 답변은 남한주민의 절반에 불과하여 식생활에서 높은 김치의존도를 보여주었다.⁵⁾ 2002년 7월 11일 노동신문은 정론 「태양민족의 아리랑」을 통하여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향기로운 김치맛을 알고 조선민족이라면 누구나 조선치마저고리를 사랑하며 평양맹편과 구수한 토장국맛을 좋아 한다”고 강조할 정도로 전통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에서 김치는 전통 음식인 동시에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별이나 결혼 유무는 물론 제3국 체류 기간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제3국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입맛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밥상에 꼭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남한주민

분류	전체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매우 그렇다	29.5	34.9	26.7	20.2	39.2	28.6	29.3
그렇다	41.9	38.1	33.7	51.0	31.4	44.6	56.0
아니다	13.8	14.3	14.9	19.2	14.7	10.7	5.3
상관 없다	14.2	12.7	23.8	9.6	14.7	14.3	8.0

※ 비고: 단위 %, 중복응답, 무응답 제외.

- 3) 민족의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석향, 「북한의 조선옷- 민족옷 개념에 나타난 여성 평중 및 남성 부재 현상」, 『북한연구학회보』 제11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07 참고.
- 4) 김치는 삼국시대 채소절임에서 시작되어 고려시대 국물과 함께 먹는 침채형(沈菜型) 김치가 등장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김치 가짓수가 증가하고 고추와 젓갈이 쓰이는 등 변화과정을 거쳐 한국인 밥상에서 반찬류의 기본으로 정착하였다(김경애, 『한국의 전통음식』,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244~247쪽 ; 한복진, 『우리 생활 100년-음식』, 현암사, 2001, 93쪽). 남북한에는 모두 “김장은 반년의 양식”이라는 말이 있다. 김치는 남북한 주민들이 1월의 동치미에서 11월 배추김치에 이르기까지, 또한 국과 김치, 전 등으로 다양하게 변용하며 일년 내내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중요한 음식으로 기능해왔다(한복선, 『한복선의 우리 음식』, 리스컴, 2010 참고).
- 5) 2002년 북한이탈주민 59명을 대상으로 한 송주은의 조사에서도 김치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나왔다. 59명의 응답자 중에서 58명이 ‘아주 중요하다’, 1명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하였기 때문이다(송주은, 남북한 김치에 대한 기호도 조사 연구,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2002, 141쪽).

<표 3> 밥상에 꼭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북한이탈주민⁶⁾

분류	전체	연령					결혼유무		남한 입국연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혼	결혼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매우 그렇다	55.0	58.5	50.0	57.1	54.5	37.5	52.6	57.7	53.8	77.9
그렇다	33.9	24.4	38.9	39.3	36.4	50.0	33.3	34.6	3.8	10.3
아니다	4.6	7.3	-	3.6	9.1	-	7.0	1.9	30.8	5.9
상관없음	6.4	9.8	11.1	-	-	12.5	7.0	5.8	11.5	5.9

※ 비고: 단위 %, 중복응답, 무응답 제외.

밥상에 김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의 다수가 ‘입맛에 맞으니까(50.3%)’, ‘맛있어서(19.2%)’라고 대답하였고, 북한이탈주민 또한 그러했다(입맛에 맞으니까 70.1%, 맛있어서 7.2%). 이렇게 남북한 주민들은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이라거나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서는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아로새겨진 생활문화로서 김치를 섭취하고 있었다. 다만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입맛에 맞아서’, ‘맛있어서’라는 대답이 다수를 점하면서도 8.4%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남한주민들의 경우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음식문화가 소개되면서 음식문화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체득된 김치 중심의 식생활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고 유지, 전승되고 있었다.

2) 의례 및 세시풍속

“관혼상제를 전통풍속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한주민은 그렇게 해야 한다(‘반드시’ 5.6%, ‘가급적’ 40.3%)는 대답보다 ‘그럴 필요 없다(53.8%)’는 대답이 조금 우세했고, 북한이탈주민은 ‘그렇게 해야 한다(‘반드시’ 22.0%, ‘가급적’ 37.6%)는 대답이 ‘그럴 필요 없다(39.4%)’는 대답보다 우세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약 15% 가량 더 전통풍속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답변에서 두드러졌다.

<표 4> 관혼상제를 전통풍속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남한주민

분류	연령						결혼여부		성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혼	기혼	남성	여성
반드시	7.9	6.9	1.0	6.9	3.6	8.0	7.1	4.7	8.8	3.2
가급적	27.0	28.7	52.9	45.1	48.2	37.3	29.9	46.5	46.1	35.7
그럴 필요 없다	63.5	62.4	46.2	48.0	48.2	53.3	61.4	48.4	44.2	60.4

※ 비고: 단위 %, 중복응답, 무응답 제외.

<표 5> 관혼상제를 전통풍속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북한이탈주민

분류	연령					결혼여부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혼	기혼	남성	여성
반드시	22.0	27.8	10.7	36.4	37.5	24.6	19.2	18.5	24.5
가급적	36.6	33.3	35.7	36.4	37.5	35.1	40.4	37.0	39.6
그럴 필요 없다	41.5	38.9	50.0	27.3	25.0	40.4	38.5	42.9	35.8

※ 비고: 단위 %, 중복응답, 무응답 제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결혼 전보다 결혼 후 관혼상제를 전통풍속에

6) 설문조사 응답자 중 10대는 2명밖에 없으므로 그 응답의 의미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0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로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다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한주민의 경우, 전통적인 관혼상제를 고수할 것인가를 두고 10~20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비중이, 30~60대는 그래야 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10대~20대와 30~50대는 20%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10~20대는 관혼상제를 전통적인 풍습으로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관혼상제를 전통풍속대로 해야 한다는 대답이 우세한 가운데 40대의 응답이 주목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점증하는 가운데 갑자기 40대의 절반이 돌출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40대의 경우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가 시작된 197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전통 풍습에 대한 관념이 크게 남아있지 않고,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불리는 1990년대 전통풍속을 지킬 수 없는 경제적 여건 속에서 가장으로서 생활하면서 전통풍속 고수에 대한 생각도 약화된 것 같다.

“우리 집안에서 출산후 산후조리를 주로 어디에서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남한주민의 경우는 ‘산후조리원(병원)’이 42.1%로 1순위, ‘친정’이 28.1%로 2순위, ‘우리집’이 22.0%로 3순위였다. ‘안 한다’는 응답은 1%에 불과해 산후조리가 한국인의 생활풍습으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은 9.2%가 안한다고 대답했고, 산후조리원(병원)이 40.4%로 1순위, 우리집이 23.9%로 2순위, 친정이 13.8%로 3순위였다. 시댁이라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무했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1순위가 산후조리원(병원)이라는 점은 전통의 훼손일까? 오히려 산후조리 장소의 변화는 전통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최근 젊은 세대들은 산모를 보호하는 산후조리 풍습은 고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 육아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산모들과의 모임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병원)’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모태는 유지하되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변화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산후조리 장소는 달라졌지만 코리언의 생활문화로서 산후조리 풍습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6> 우리 집안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를 주로 어디에서 하는가?

분류	전체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안 한다	1.0	-	1.0	1.0	1.0	1.8	1.3
우리집	22.0	25.4	15.8	18.3	18.6	37.5	25.3
친정	28.1	17.5	28.7	31.7	37.3	28.6	18.7
시댁	2.4	-	1.0	1.0	6.9	1.8	2.7
산후조리원(병원)	42.1	52.4	50.5	44.2	34.3	25.0	42.7

※ 비교: 단위 %, 중복응답, 무응답 제외.

<표 7> (남한에 온 이후) 우리 집안에서 출산 후 산후조리를 할 때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분류	전체	연령					남한 입국연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06년 이전	2006년 이후
안 한다	9.2	9.8	16.7	3.6	9.1	12.5	10.3	9.1
우리 집	23.9	29.3	11.1	35.7	18.2	-	34.5	19.5
친정	13.8	12.2	5.6	7.1	27.3	37.5	13.8	13.0
시댁	-	-	-	-	-	-	-	-
산후조리원(병원)	40.4	34.1	66.7	42.9	27.3	12.5	24.1	48.1

※비교: 단위 %, 무응답 제외

그러나 산후조리원(병원)을 제외하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이 드러난다. 과거 전통적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곳은 ‘우리집’, 시어른과 함께 살 경우는 ‘우리집’이자 ‘시댁’이었다. ‘친정’에 가는 것은 출산후 몸이 안 좋아서 가료를 위해 특별히 가는 경우에 불과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직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출산과 육아에서 친정어머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가

급증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산후조리를 하는 ‘우리집’이 준수되고 있지만, 시택은 전무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우 남편이나 시택 가족과 함께 탈북하는 경우가 드물고, 가족이 있더라도 온전히 보전된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해체된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에서 출산한 이후 혼자 남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택이라는 개념이 서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우리 가족이 쇠는 명절”을 묻는 질문에 남한주민들은 ‘설날’ 97.4%, ‘추석’ 94.2%, ‘정월대보름’ 34.1%, ‘한식’ 7.2%, ‘단오’ 5.6%의 순으로 답변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은 ‘설날’ 86.2%, ‘추석’ 78.0, ‘정월대보름’ 32.1%, ‘한식’ 32.1%, ‘단오’ 26.6%의 순으로 답변하였다. 순서는 동일했지만 비율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남한주민들에게 설날과 추석은 “민족의 대이동”을 거쳐서라도 당연히 가족이 모여서 쇠어야 하는 명절이지만, 제사 풍속이 없고 가족해체 현상이 심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설날과 추석은 가족들이 모여서 쇠는 명절로서의 의미가 남한보다 퇴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 등 남한에서는 간소해진 명절을 많이 쇠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경사회에서 정월대보름은 겨울을 보내고 농사철을 맞이하고 풍년을 비는 축제의 장이었고,⁷⁾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서 나무를 심거나 채소씨를 뿌려 새해 농경을 준비하는 날이었다.⁸⁾ 또한 단오는 예로부터 양기가 가장 센 날이라 하여 한국·중국·일본에서는 으뜸 명절로 여겨졌고,⁹⁾ 농경사회에서는 파종을 하고 모를 낸 후 잠깐 휴식을 취하는 시기여서 이날 하루를 마음껏 즐겼다. 남한에서는 명절이 설날과 추석 중심으로 간소화되어 정월대보름, 한식, 단오는 잘 쇠지 않지만, 북한에서는 지금도 면면히 이 명절들을 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한복은 남북한 주민들이 행사 때나 명절 때 입는 의례복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한주민들은 무의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민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한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김치는 일상적인 식생활문화로 정착하여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밥상의 중심에 있었다. 산후조리는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맞게 장소는 변화하면서도 산후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산후조리 전통의 내용은 유지되고 있었다. 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절기의식과 연관된 명절 쇠기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을 기리고 전통을 향유하는 시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의식주, 의례 및 세시풍속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게 전통적 생활문화를 변용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3. 생활의식 : 가족주의와 민족정체성

1) 가족주의

유교문화권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가 도덕규범의 기초이고, 이러한 규범이 가족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조선시대 이래 한민족의 특성이었다. 효는 우리 민족의 삶의 지표였고 부모 공경과 더불어 봉양 의식은 건재한 것으로 여겨졌다.¹⁰⁾ 효 사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부모 봉양에 대한 남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를 꼭 자녀가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남한주민들의 52.7%가 ‘그렇다’, 46.7%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조금 더 많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82.6%가 ‘그렇다’, 16.5%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여 그렇다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북한사회의 부모 봉양 의식이 강고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7)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민속의 세계 5-세시풍속·전승놀이』, 2001, 83쪽.

8) 위의 책, 74쪽.

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민속의 세계 5-세시풍속·전승놀이』, 2001, 180쪽.

10) 박명희 외, 『한국의 생활문화-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주)교문사, 2003, 50쪽.

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부모를 꼭 자녀가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10대와 20대, 60대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25.5%, 35.6%, 48.0%에 불과한 데 반해 304050대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각각 57.7%, 54.9%, 53.6%로 급상승했다. 남한주민보다 적기는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30대와 40대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20대 7.3, 50대 9.1%)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16.7%, 25%). 이들은 실제로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도의적, 사회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연령대로서 이들의 부양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한 사회의 가족적 유대는 중심축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부모를 꼭 자녀가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소득수준별 답변이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아져서 남한에서는 300만원 미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40%정도인 데 비해 300만원 이상의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약 60%에 이르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도 소득이 많을수록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부모 봉양의 책임을 주위에 전가하고자 하는 비도덕적인 인물 군상들일까?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누구와 그 책임을 나누어지고자 하는 것일까?

<표 8> 부모 봉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 남한주민

분류	전체	소득수준					
		100 미만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 이상
자녀	48.9	65.2	55.3	51.9	35.7	25.8	39.2
국가	26.7	4.3	21.1	21.0	40.0	35.5	37.3
사회	19.6	26.1	19.7	19.8	18.6	38.7	19.6

※ 비고: 단위 %, 중복응답, 무응답 제외.

<표 9> 부모 봉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 북한이탈주민

분류	전체	소득수준			
		100 미만	100-200	200-300	300 이상
자녀	30.3	47.2	15.4	22.2	-
국가	52.3	44.4	69.2	44.4	100
사회	16.5	8.3	15.4	33.3	-

※ 비고: 단위 %, 중복응답, 무응답 제외

남한주민 중 소득 300만원 미만의 사람들이 주로 ‘자녀’가 봉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부모 봉양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가가 부모 봉양의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한주민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통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국가가 공적 기관으로서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서 개인의 고통과 부담이 고스란히 가족들의 몫으로 전가되는 남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사회의 책임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부모 봉양을 ‘복지’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남한주민의 30대~50대, 북한이탈주민의 30~40대 등 부모 봉양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이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지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국가의 역할, 즉 사회복지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효사상을 다른 민족과는 다른 미덕으로 강조하고 있는 남북한 정부가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효사상이 한국의 전통미덕으로서 유지·온존되기 위해서는 도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개인과 가족에

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부담을 나누어지는 ‘사회적 돌봄’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효’라는 전통 미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다져야 하는 것이다.¹¹⁾ 전통의 계승은 개인적인 도덕관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대사회에 알맞은 국가, 사회 시스템 속에서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봉양의식은 낮아지고 있었지만, 명절과 더불어 부모님 생신과 가족행사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식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꼭 모여야 할 때를 선택하라는 질문에 남한주민들은 ‘부모님 생신’ 75.4%, ‘추석’ 72.1%, ‘음력설’ 70.3%, ‘가족 내 특별행사’ 66.5%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은 ‘부모님 생신’ 61.5%, ‘음력설’ 46.8, ‘추석’ 42.2%, ‘가족 내 특별행사’ 23.9%의 순으로 응답하여 명절보다 부모님 생신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남북한 주민들의 가족주의가 아직도 강고하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수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는 가족해체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주민들에 비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호하는 성별을 묻는 질문에 남한주민들은 ‘아들’이라는 대답이 11.4%, ‘딸’ 16.8%, ‘상관없다’는 대답이 70.9%를 접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은 ‘아들’이라는 대답이 27.5%, ‘딸’이라는 대답이 34.9%, ‘상관없다’는 대답이 36.7%을 접했다. 남한주민들에게서는 아들 딸 상관없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아들보다 딸을 선호하는 의식이 생겨나고 있었다.¹²⁾ 부모 자식의 관계가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며 봉양하는 규범과 의무 중심의 전근대적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돈독한 관계와 돌봄이라는 근대적인 관계로 전환하면서 부모에게 살갑게 대하고 돌보는데 세심한 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계가족 중심의 가부장제가 완연하였던 가족법이 1990년 양성평등 원리에 의하여 대폭 개정된 제도적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¹³⁾ 최근의 연구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도 사회경제적인 성취에서 점차 육아를 통한 정서적인 혜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⁴⁾

<표 10>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호하는 성별은 무엇인가? : 남한주민

	전체	연령						결혼여부		가족형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혼	기혼	독신	핵가족	2대가족	3대가족
아들	11.4	11.1	7.9	11.5	8.8	12.5	18.7	9.8	12.3	11.1	11.1	14.5	9.8
딸	16.8	36.5	20.8	14.4	16.7	10.7	2.7	24.5	12.3	11.1	18.8	13.2	7.3
상관없다	70.9	52.4	70.3	74.0	73.5	73.2	77.3	65.2	74.1	77.8	69.0	72.4	80.5

※ 비교: 단위 %, 무응답 제외.

연령별로 본다면 40대를 경계로 40대 이하는 딸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강고하게 남아있던 남아선호사상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고 장년층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미혼은 압도적으로 딸을 선호하지만 기혼은 아들과 딸의 선호도가 동일하고, 2대가족이나 3

11) 돌봄이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가정 내의 개인적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됨으로써 ‘공적 영역’으로서의 사회·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돌봄의 문제가 간과되고 있고, 복지국가를 회구하는 현대인의 사고방식과도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이성원, 현대적 효 개념에서 돌봄의 의미와 특성 연구, 『효학연구』 제14호, 2011).

12)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아동패널 2008년 조사」에 따르면 부모 모두 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노골적인 아들 선호의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13) 1958년 제정된 가족법의 제정 경위와 주된 쟁점에 대해서는 이상욱, 「가족법 제정의 경위와 주된 쟁점」, 『가족법연구』 제14호, 2000을, 1990년 개정된 가족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는 김수주, 「개정 가족법의 개정 경위와 과제」, 『가족법연구』 제4호, 1990을 참고할 것.

14) 남정은·정정희, 「저출산 시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양육관에 대한 내용분석」, 『아동교육』 제21권 제1호, 2012 참고.

대가족 구성일 경우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들을 선호하는 전통적 가족구조 속에서 의식도 봉건적인 관념에 간히게 뒹을 보여준다. 그러나 농촌에서조차 모든 연령대에서 남아선호사상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¹⁵⁾ 남한주민의 남아선호사상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표 11>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호하는 성별은 무엇인가? : 북한이탈주민

분류	전체	연령				성별		결혼여부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여	미혼	기혼
아들	27.5	31.7	16.7	35.7	18.2	38.9	15.1	29.8	25.0
딸	34.9	39.0	44.4	25.0	45.5	29.6	39.6	28.1	42.3
상관없다	36.7	29.3	38.9	39.3	36.4	31.5	43.4	42.1	30.8

※ 비고: 단위 %, 무응답 제외.

북한이탈주민이 아들보다는 딸을 선호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남북한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북한이 가부장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부장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을수록 남아선호도가 높게 나타나야 할 것이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 조사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남성의 경우 ‘아들’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상관없다’, ‘딸’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들을 선호하는 비율이 딸을 선호하는 비율보다 약 10% 높아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은 아직도 ‘아들’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우에는 ‘상관없다’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딸’, ‘아들’의 순서로 나타났고, 딸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아들을 선호한다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미혼보다 기혼자들이 딸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는 1990년대 북한 사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가족 내 역할이 달라진 현상과 관련이 깊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계획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었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경제난을 겪으면서 장마당 등에서 경제활동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고,¹⁶⁾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줄면서 남아선호도 역시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게 각각 해외동포 및 북한이탈주민/남한주민과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상관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지만,¹⁷⁾ 그 대답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주민들은 재미동포와의 결혼에 대해서 22.4%, 재일동포에 대해서 28.2%, 재중동포에 대해서 30.7%,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38.3%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재미동포><재일동포><재중동포><북한이탈주민> 순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표 12> 해외동포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I)

15) 외, 가족/친족 구조의 해체와 재구성 II : 농촌지역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10호, 2000, 9쪽 참고.
 16)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해서는 이미경, 「경제난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변화와 한계」,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여성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6 ; 김석향, 「일상생활에서 본 북한의 성평등 실태와 여성인권의 문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여성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6 참고.
 17) 해외동포의 사례는 아니지만 대학생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국제결혼 일반에 대해서는 61.0%가 찬성하였지만 국제결혼에 대한 ‘나의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찬성이 34.6%로 급감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이 질문 역시 해외동포 및 북한이탈주민/남한주민과의 결혼에 대한 ‘나의 태도’를 물을 때는 ‘상관없다’는 대답이 급감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양성은, 「국제결혼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 2008.12, 44쪽 참고).

분류	동포별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중동포	북한이탈주민
절대 반대	2.8	6.0	4.4	7.8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19.6	22.2	26.3	31.5
상관없다	76.8	71.3	68.7	60.1

※비고: 단위 %, 무응답 제외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리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대 세습, 선군정치, 식량난, 핵개발 등으로 인해 북한을 비정상국가로 보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괴리감 또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50대까지의 반응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관없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전체 통계의 추이와 비슷하였지만, 60대 이상의 반응은 특이한 점이 있었다.

<표 13> 해외동포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Ⅱ)

분류	동포별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중동포	북한이탈주민
	60대 이상	60대 이상	60대 이상	60대 이상
절대 반대	8.0	9.3	6.7	5.3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32.0	32.0	40.0	30.7
상관없다	60.0	57.3	52.0	62.7

※비고: 단위 %, 무응답 제외

전체 응답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이질감을 갖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60대 이상은 전체 응답과 달리 북한이탈주민을 결혼 상대로서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60대는 이데올로기적인 보수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코리언으로서의 생활문화적 공통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한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2대가족 또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결혼이 해외동포들보다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미혼보다 기혼자들이 해외동포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결혼에 반대하는 비율이 8~9% 정도 높았다. 기혼자들은 결혼생활에서 사고방식과 생활문화의 차이까지 불거지면 결혼생활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북한이탈주민과의 결혼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해외동포에 대해서는 남녀차가 2~3%에 불과했지만 북한이탈주민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그 격차가 10%이상 벌어진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국제결혼 및 해외동포와의 결혼에서 배우자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¹⁸⁾ 남한주민들에 비해 훨씬 가부장적인 생활풍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남성과의 결혼을 꺼리는 점, 남성이 주로 생계부양자가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남성과의 결혼이 갖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한 응답인 것 같다.

<표 14> 결혼상대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가? : 북한이탈주민

분류	전체	연령	성별
----	----	----	----

18)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의 국적은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에 비해 선진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호하고 국제결혼을 선호하는 남성들이 배우자의 인종적 유사성을 강조하는 반면, 여성들은 인종적 유사성보다는 백인 선호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배우자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강조하였다는 점(김두섭,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2006, 38쪽 ; 양성은, 위의 논문 참고)은 해외동포와의 결혼문제를 다루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여
북한이탈주민	30.3	19.5	22.2	50.0	27.3	42.6	18.9
남한주민	23.9	24.4	33.3	14.3	18.2	13.0	32.1
재중동포	0.9	-	5.6	-	-	1.9	-
재일동포	0.9	2.4	-	-	-	1.9	-
재미동포	0.9	2.4	-	-	-	1.9	-
상관없다	42.2	51.2	38.9	32.1	54.5	38.9	47.2

※비고: 단위 %, 무응답 제외

“결혼상대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상관없다’, ‘북한이탈주민’, ‘남한주민’의 순으로 답하였다. 결혼상대자로서 해외동포 즉 ‘재중동포’, ‘재일동포’, ‘재미동포’를 선택한 비율은 1% 미만으로 해외동포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았다. 결혼 배우자에 대한 선호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성과 여성은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배우자의 1순위로 ‘북한이탈주민’을 꼽았다. 이어서 ‘상관없다’, ‘남한주민’의 순으로 답하였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상관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남한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순이었다.

‘남한주민’에 대한 선호도에서 성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한 사회 적응력과 관련된다. 북한이탈주민 남성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남녀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다. 북한의 가족법 제18조에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남존여비 사상을 “착취사회의 반동적 윤리도덕”, “근절되어야 할 봉건유교사상의 잔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과 달리 북한사회에서 남녀의 차별은 확연하고,19)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장사하는 것은 ‘얼굴 깎이는 일’로 간주되어 장사는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 되었다. 또한 북한의 문화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 남성들로서는 남한 여성이 간간하고 다루기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결혼상대자로 선호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역할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적 성역할과 관련하여 특히 경직된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0) 이러한 선호도는 실제 결혼 현황에도 반영되어, 2011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8,2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북한 이후 결혼한 남성 중에서 10.2%가 남한 여성과 결혼한 반면 탈북여성의 32.7%가 남한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21)

2) 교육관

다음으로는 남북한 주민들의 교육관을 살펴보기 위해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이유,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 아이의 미래, 민족교육에 대한 생각과 민족교육에서 더 보강되어야 할 내용 등을 질문했다.

먼저 아이를 교육기관에 맡기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남한주민들은 1순위로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변하였다. 2순위가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3순위가 ‘교육이 필요해서’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1순위가 ‘안 맡겨서 모르겠다’, 2순위가 ‘교육이 필요해서’, 3순위가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변하였다. ‘안 맡겨서 모르겠다’는 답변을 제외하고는 ‘교육이 필요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이 필요해서’라는 답변이 ‘안 맡겨서 모르겠다’는 답변보다 많았다. 이는 북한이

19)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 간 동일임금 지급원칙’에도 불구하고 직종별 임금 격차와 기능별 차급 지급으로 인해 남녀 간 임금 차이가 구조적·성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제분야의 남녀 차별에 대해서는 김원홍, ‘북한여성의 실태 및 향후 대북정책 방향’, 『서울평양학회보』 2011년 상반기호, 서울평양학회, 2011 참고.

20) 한샘·남석민·김윤경,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가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1호, 북한연구학회, 2011, 202쪽.

21) 「탈북 여성 신붓감으로 호감」, 『중앙일보』 2012년 2월 6일자.

탈주민 여성들의 교육열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남북한 주민들은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동일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사회의 지도층’,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순서로 대답하였다. 이는 자신은 현실적인 문제에 안주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자신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한국인들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부모들이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모두 감내할 테니 자녀들은 자신들이 닦아놓은 사회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기 꿈을 실현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²²⁾ 그러나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녀들 역시 기득권을 획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식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순위를 점하고 있는 ‘사회 지도층’, 3순위를 점하고 있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대답은 자녀들의 이상과 꿈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와 더불어 경제적 성공과 권력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의 이중적인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은 아이들이 경제적 성공과 권력을 얻기를 바라는 욕구가 남한주민에 비해 훨씬 강했다. 이는 남한사회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돈과 권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남한사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15>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는가?

분류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돈을 많이 버는 사람	11.2	22.9
유명인	1.6	11.0
사회의 지도층	14.8	27.5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69.5	34.9

※비교 단위 %, 무응답 제외

한편,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남한주민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67.3%로 대부분 70% 중반대가 넘는 재외 코리언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20, 30대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53.5%와 52.9%로 평균을 밑도는 아주 저조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학교 교육 경험에서 갖 벗어난 세대들이 기성 교육에 대한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학교교육을 신뢰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주로 불신한다(‘매우 불신한다’ 20.2%, ‘불신한다’ 41.3%)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답변은 탈북후의 사후적인 것이므로 남한입국 후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해지면서 학교 교육 또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들은 민족교육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남한주민 84.4%, 북한이탈주민 75.3%).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상당했다(남한주민 28.9, 북한이탈주민 40.4%). 모든 연령대가 민족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족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남한주민의 경우 ‘역사(60.3%)’와 ‘민속예절(22.6%)’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역사(45.9%)’, ‘언어(22.0)’와 ‘민속예절(2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 다 역사와 민속예절을 중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남북한 주민의 답변을 비교하면 언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16> 민족교육에서 더 보강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2) 주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도시인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에서도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현실적인 뒷바라지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다(이홍균·박종일·하홍규, 『한국인의 삶을 읽다-창원시를 중심으로』, 나남, 2010, 13~15쪽 참고).

분류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역사	60.3	45.9
예술	6.6	5.5
민속예절	22.6	22.0
언어	8.0	22.0

※비고: 단위 %, 중복응답, 무응답 제외

남한은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언어와 민족교육의 연계성을 높지 않게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은 언어를 민족의 중요한 징표로 보고 민족교육에서도 언어교육을 강조한다. 김일성 주석은 1966년 “남조선에서 쓰는 말은 민족적 특성이 없어져 가고 있어 우리 말 같지 않으며 민족어가 없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우리말의 민족적 특성을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표준어로서 ‘문화어’ 제정을 지시하였고, 이후 ‘말다듬기 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말’ 사용을 강조하였다.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는 문화적 침략으로 인식하고 배척하였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의 언어가 상당히 이질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언어 이질화가 소통의 어려움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는 ‘순수한 우리말’을 썼는데, 남한에 왔더니 사용하는 말이 온통 국적이 불분명한 외래어 투성이어서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어렵고, 그로 인해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²³⁾

3) 직업관

남북한 주민들의 직업관은 어떠할까를 살펴보기 위해 직업에 대한 자부심,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집단), 직업선택의 기준, 성공에 대한 생각 등을 질문하였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75.3%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답변하여 자기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기본 문항별로 검토한 결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남한주민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고, 북한이탈주민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직업별로 나누어보면 남한주민은 자영업자·노동자·학생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낮고 공무원·전문직의 자부심이 높았고, 북한이탈주민은 자영업자·회사원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낮고 공무원·전문직·노동자·학생의 자부심이 높았다. 둘 다 공무원과 전문직의 자부심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남한주민이 노동자를 급여가 낮고 험한 일을 하는 존재로 이해한다면 사회주의 사회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은 노동자를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직업으로, 자영업자나 회사원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직업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고령자일수록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현황과도 관련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 정착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4명 중 3명이 월소득 150만원 이하였다. 취업을 해도 대부분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서 연령이 높아지면 취업도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가장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 또한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²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집단)은 남한주민의 경우 ‘부모(51.9)’, ‘국가정책(16.2)’, ‘친구(14.2)’의 순이었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국가정책(33.9)’, ‘친구(22.9)’, ‘부모(21.1%)’의 순으로

23) , 「새터민 언어 문제의 본질과 그 해결 방안」 『북한의 언어와 문학』(경인문화사, 2006), 68쪽 참고. 그러나 김석향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한 어려움의 본질은 언어의 이질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대의 성별과 연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다. 가령 젊은 여성이 툭 부러지게 대답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다. 이런 대화의 방식이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소외감이나 열등감이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언어 환경을 언어의 이질화로 보고 있는 것이다.

24) 탈북자 세 명 중 한 명 한 달 100만원 못벌어, 『매일경제』 2012년 1월 14일자.

국가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부모의 판단과 권유가 직업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은 모든 코리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지만 유독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국가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고, 남한주민들의 경우에도 국가정책을 직업선택에서 차순위의 영향력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표 17>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 남한주민

분류	전체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선생님	6.8	9.5	3.0	10.6	6.9	5.4	5.3
친구	14.2	9.5	17.8	10.6	20.6	10.7	12.0
부모	51.9	52.4	55.4	53.8	40.2	50.0	61.3
형제	4.6	1.6	2.0	5.8	5.9	10.7	2.7
국가정책	16.2	23.8	18.8	11.5	15.7	16.1	13.3

※ 비고: 단위 %, 중복응답, 무응답 제외.

<표 18>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 북한이탈주민

분류	전체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선생님	10.1	19.5	5.6	3.6	-	12.5
친구	22.9	24.4	44.4	14.3	27.3	-
부모	21.1	24.4	16.7	10.7	27.3	12.5
형제	9.2	4.9		10.7	18.2	37.5
국가정책	33.9	26.8	27.8	60.7	18.2	25.0

※ 비고: 단위 %, 중복응답, 무응답 제외.

이는 직업과 관련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한은 경제발전에 국가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각 산업분야의 성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FTA 체결은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고, IT산업 성공신화의 뒤에는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다. 그러므로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때 국가의 정책방향은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에서 국가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이들의 직업생활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묻는 질문에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1순위로 ‘자아실현’, 2순위로 ‘안정성’, 3순위로 ‘보수’를 꼽았다. 그 다음은 ‘사회적 기여도’, ‘명예’의 순이었다. 재외 코리언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의 답변은 상당히 예외적인 것이다. 재외 코리언들은 대부분 ‘보수’를 직업 선택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갖는 이상적인 직업관과 현실 인식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직업은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이상적인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2순위인 안정성이 1순위에 육박하는 비율을 점하고, 3순위인 ‘보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안정성과 보수가 뒷받침되는 선에서 자아실현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전선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남한주민의 40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30대 이후의 답변은 이러한 현실적인 면모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남한주민의 경우는 40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30대부터 안정성이 직업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한주민의 경우 30대까지 자아실현을 최우선시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30대부터 안정성에 대한 회귀가 강한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불안정한 사회진출을 반증하고 있다.

<표 19>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 남한주민

분류	전체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아실현	33.7	42.9	46.5	32.7	31.4	30.4	16.0
보수	20.2	14.3	10.9	25.0	27.5	14.3	25.3
안정성	33.3	28.6	28.7	26.9	32.4	37.5	50.7
사회적 명예	2.6	6.3	5.0	1.9	1.0	1.8	-
사회적 기여도	7.2	6.3	6.9	7.7	6.9	8.9	6.7

* 비고: 단위 %, 중복응답, 무응답 제외.

<표 20>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 북한이탈주민

분류	전체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자아실현	34.9	46.3	33.3	21.4	18.2
보수	14.7	2.4	11.1	28.6	36.4
안정성	32.1	24.4	38.9	35.7	36.4
사회적 명예	5.5	7.3	5.6	7.1	
사회적 기여도	11.9	19.5	11.1	7.1	9.1

* 비고: 단위 %, 중복응답, 무응답 제외.

4. 맺음말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의식주, 의례 및 세시풍속에서 남북한 주민들은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게 전통적 생활문화를 변용시켜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한복은 의례복으로 변화했지만 행사 때나 명절 때 입는 빈도가 높았고, 김치는 일상적인 식생활문화로 정착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밥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산후조리는 현대인의 삶의 방식에 맞게 장소는 변화하면서도 산후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산후조리 전통의 내용은 면면히 유지되고 있었다. 산업사회로 변모하면서 절기의식과 연관된 명절 쇠기는 사라져가고 있지만 명절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조상을 기리고 전통을 향유하는 시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농업사회에서 한국인의 일상 속에 녹아들었던 명절은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설날, 추석 중심으로 간소화되면서도 가족주의적 가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가족해체 현상으로 인해 명절과 절기에 맞추어 가족들이 모이는 빈도는 남한주민에 비해 훨씬 낮았다.

근대적 생활환경에 맞추어 형식은 바뀌었지만 그 내용적 핵심은 전승되고 있는 생활풍습과 달리 생활의식의 영역에서는 전근대적인 생활의식이 근대적 생활의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충돌 지점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남북한의 가족주의는 분단, 전쟁, 자본주의·사회주의 압축적 근대화 속에 국가주의에 충실히 순응하여 성공신화를 달성하는 최소단위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남북한 주민들은 부모 봉양에서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자아실현'과 성공한 사람의 기준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을 1순위로 뽑는 등 국가주의를 극복하고 개인과 사회의 의미를 찾아가려는 의식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등 사회제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의식은 가족을 단위로 둔,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와 공공성을 중시하는 근대적 시민의식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남북한 주민은 모두 강한 민족정체성, 강한 가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한주민이 국가정체성이 강한데 반해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귀속성

은 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2년 조사에 의하면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보다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정착에 실패한 북한이탈주민의 일부는 다시 대한민국을 떠나 영국이나 캐나다 등지로 유랑생활을 떠나고 있다.²⁶⁾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내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같은 언어, 비슷한 생활풍습, 같은 핏줄을 통해 느끼고 있다. 그러나 언어, 풍습 중심의 민족정체성 인식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사회 문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북한주민으로서의 경험과 습속을 부정할 때 사회갈등은 높아지고, 북한주민의 경험과 습속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할 때 사회통합의 길은 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에게 갖는 편견과 경계의식에서 벗어나 이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민족적 연대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갖는 습속과 문화를 모태문화는 공유하지만 다양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가족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났으면서도 각자 개성을 갖는 존재들이고, 남북한의 주민들은 형제와 같은 유사성과 차이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갖는 '가족유사성'과 '남북한의 지역별 특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하는 통일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생활문화에 대한 심층연구와 질적조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향후 이 연구는 질적조사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탈주민, 북한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한편, 남북한 생활문화의 비교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5) 대다수 우울증 않는다, 『동아일보』 2012년 4월 2일자.

26) 「정착 실패한 새터민 일부 다시 떠나...영국·캐나다서 유랑생활」, 『한국경제신문』 2012년 4월 3일자.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 : 비교의 의의와 실제

김진환*

1. 머리말

일제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민족 이산도, 한반도 분단도 없었다. 이 흔들릴 수 없는 진실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귀향¹⁾’이나 한반도 분단 극복 모두 일제 식민지배 청산의 일환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한마디로 지금도 ‘계속되는 식민주의²⁾’로 고통 받는 주체, 일제 식민지배 청산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는 한반도 주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모두 포괄한 ‘코리언’이다.³⁾

그런데 코리언이 만들어 갈 ‘민족통일’은 당연히 ‘제도의 통일’을 넘어서는 ‘사람의 통일’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남북한이 정치경제제도 통합을 합의한다면 형식적으로는 통일이 완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 독일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동서독 주민의 갈등을 떠올려보면 통일은 형식적으로는 제도와 제도의 만남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바깥에 거주하고 있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통일의 주체로 세울 경우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국과 남북한의 제도를 합친다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민족통일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통일, 민족 구성원끼리의 자유로운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언의 가치관, 정서,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작업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코리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 좀 더 구체적으로는 코리언의 가치관, 정서, 생활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야 이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통일의 전망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의 ‘민족공통성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현실 진단으로부터 출발했다. 민족통일이 ‘제도의 통일’을 넘어 남한 주민, 북한 주민,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자유롭게 만나고 깊이 있게 소통하는 ‘사람의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가치관, 정서, 생활문화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남, 북, 해외의 민족 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들의 가치관, 정서, 생활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바로 민족공통성 프로젝트였고, 일본, 러시아,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코리언 디아스포라 설문조사도 이러한 민족공통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먼저 재일조선인 설문조사는 2011년 10월~12월 일본 현지에서 이루어졌다. 조사를 위한 사전 작업은 두 단계로 진행됐는데, 먼저 2011년 3월 일본 현지를 방문해 조사 파트너를 알아보고, 현지 재일조선인에게 설문조사 진행 방법, 설문지 문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으로 2011년 8월~9월 일본 현지 파트너와 설문지 문항, 조사 방법 등을 협의했다. 재일조선인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NGO센터’ 도쿄 사무국이 일본 현지 파트너였으며, 이 단체 사무국장이 책임을 맡아 10여 명의 조사인력과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

* 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1) 이 글에서 말하는 ‘귀향’은 단순히 재일조선인, 재중 조선족, 재러 고려인 등이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국해서 거주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일제 식민지배로 강제 이산된 민족 구성원이나 그 후손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간에 본래 살던, 또는 자신의 뿌리가 있는 한반도에 국적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2) ‘계속되는 식민주의’는 재일조선인 작가 서경식이 일본 안에 현존하는 민족차별,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일본인의 태도 등을 비판할 때 자주 쓰는 개념이다. 서경식 지음, 권혁태 옮김, 『언어의 감옥에서: 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이 글에서는 ‘계속되는 식민주의’를 일본 내 민족차별,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일본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코리언끼리도 뜻을 모으지 못한 탓에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한반도의 관계가 단절되고, 한반도 분단 같은 일제 식민지배의 결과들도 청산되지 않은 상태까지 포괄해서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했다.
3) 코리언에는 한반도 주민과 코리언 디아스포라 외에 일본, 북미, 남미, 유럽 등 세계 곳곳에 산재해 있는 자발적 이주민까지 포함된다.

다. 조사 대상은 주로 도쿄, 오사카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1945년 이전에 일본으로 이주한 ‘올드 커머’(old comer)와 그 후손들-으로, 전체 유효 응답지 314부 중 291부는 직접 대면조사를 했고, 23부는 엑셀 파일 형태의 설문지를 응답자에게 보내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다음으로 재러 고려인 설문조사는 러시아의 연해주(296명)와 사할린(30명)에 거주하는 한인 총 326명을 대상으로, 201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에 걸친 직접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전에 2011년 4월 예비조사, 5월 설문문항 검토 과정을 거쳤는데, 이 시기에 현지 파트너인 우수리스크 고려민족문화자치회 김발레라 부회장을 비롯한 실무자들과 협의해 현지 사정에 맞게 문항 내용 일부를 조정했다.

끝으로 재중 조선족 설문조사는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25일까지 중국 연변의 8개 현, 시(연길, 용정, 도문, 훈춘, 화룡, 왕청, 안도, 돈화)에 거주하는 조선족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설문목적과 내용을 습득한 20명이 직접 대면조사 방식으로 수행했다. 회수한 설문지 300부 중 정확한 답변을 알 수 없는 3부를 제외한 297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글의 목적은 크게 ‘정체성과 분단통일외식’, ‘정서와 트라우마’, ‘생활문화’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문항 중에서, 생활문화와 관련된 20여 개 문항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코리언 디아스포라 생활문화의 실상을 비교해서 소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코리언 디아스포라 생활문화의 의의와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현지에서 만들어 온 다양한 생활문화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관심 있는 이들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가 한국인들의 현재 생활문화와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보고, 같은 점에 열광하고 다른 점에 실망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인 양적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대략 이러한 시각이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의 ‘평균적’ 시각이었는데 이견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은 민족 내 ‘다수’(majority)인 한국인들의 생활문화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가 동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이러한 시각이나 인식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아래에서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겠다.

2. 코리언 디아스포라 생활문화 비교의 의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사회’ 정착이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작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란 어떠한 사회인지에 대한 성찰은 여전히 부족하다. 심지어 한국 사회에는 타민족에 가하고 있는 “동질화의 압력”¹⁾을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²⁾ 문제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동질화 압력이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이나 코리언 디아스포라에게도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좀 더 논의해 보자.

1) 오경석의 용어다. 오경석은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 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평한다. “정리하면 한국의 다문화는 강력한 국가 주도성이 관철되고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분리주의적이며 차별적인 접근이 고수되고 있다. 실체론적 문화관에 입각한 동화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다원성 담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들은 동원의 대상일 뿐 참여의 주체가 아닌 셈이다”. 오경석, 『한국 다문화주의의 재모색』, 『인문언어』 제12권 2호, 국제언어인문학회, 2010, 448쪽, 454쪽.

2) 이에 대한 비판을 들어보자. “다문화주의정책은, 이주민을 ‘낮선 이질적 존재’로 간주하여 특별한 관리와 통제를 통해 우리식 단일문화로 동화시키려는 ‘외국인정책’과는 그 격이 사뭇 다른 것이다. 외국인정책은 반드시 인종적 서열화와 사회적 배제라는 술한 인권문제를 야기한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시라. 이주민을 위한 한글 교실을 열고는 다문화정책이란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의 전통양식과 세시풍속을, 한복 입는 법을, 심지어는 장 담그는 법을 가르치며 다문화정책이라고 호들갑을 떠다.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인 동화정책이지, 다문화주의정책이 아니다.” 김형완, ‘위선의 ‘다문화주의’’, 『한겨레』 2012년 4월 24일.

1980년대 이후 급성장한 경제력과 외교력이 한국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 중 하나는 남한이 민족통일의 '우월적 주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나간 것이다. 먼저 북한경제가 1990년대 들어 급격하게 몰락하고 탈북자도 속출하자 북한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동족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남한이 주도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남한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모두 통일에 대한 '남한 중심주의'의 한 측면이다.

또한 대다수 남한 사람들은 탈냉전 이후 본격적으로 만난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시혜의 대상(사할린 한인의 귀향 허가) 또는 저임금 노동이 가능한 잉여 인력(재중 조선족 노동 착취) 정도로 여겨 왔다. 요컨대, 남한 사람들은 '일등 민족'이고, 북한 사람들이나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이등 민족'이라는 인식, 곧 민족에 대한 위계적 사고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남한 사람들이 이러한 위계적 사고에 젖어들면 들수록 민족통일은 남한의 이해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남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느끼는'³⁾ 재일조선인을 '반쪽발이'로 표상하며⁴⁾ 문화적 우월감을 과시하곤 하는데 이 역시 '일등 민족' 의식이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남한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특히 잘 드러나듯, 문화적 우월감 또는 자문화중심주의는 남한 사람들이 가진 '일등 민족' 의식의 중요 요소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의 생활문화나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는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에서 무언가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생활문화를 자신들이 민족 생활문화의 '전형'(典型)이라고 생각하는 남한 생활문화에 맞추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한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에 가하고 있는 동질화 압력을 같은 민족에도 가하려 하는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남한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민족에 대한 위계적 사고'에 '생활문화에 대한 본질주의적 입장'이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코리언 디아스포라 생활문화에 일찌감치 관심을 가져 온 연구자들 중 일부는 아래 인용문처럼 협소한 남한 중심적 인식에 비판적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재외 한인동포의 생활문화는 단순히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가 어느 정도 보존되고 있는가 아니면 현지문화의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 변질되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평면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한 식의 접근은 자칫하면 순수하고 정통한 것의 우월성을 잠정적으로 전제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적응하여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축해 온 그들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해 내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접근은 또한 “한민족 문화”를 주어진 어떤 것으로 상정하는 본질주의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그것이 지니고 있는 유연성, 적응 능력, 확장의 가능성 등을 과소 평가할 위험을 안고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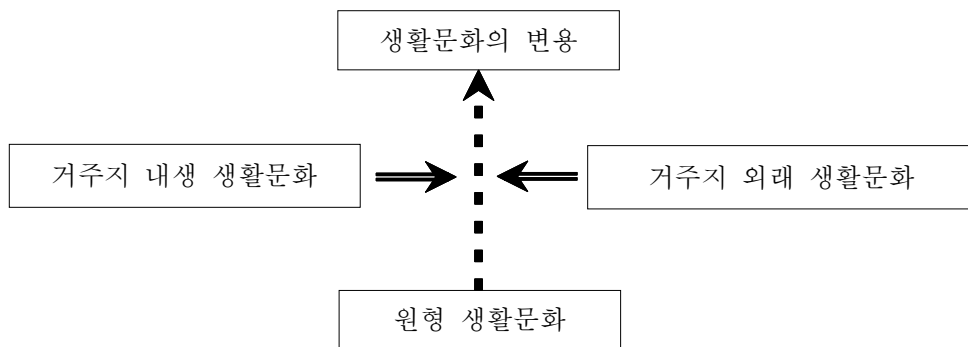
본질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가변성이라는 문화의 속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구조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문화는 한 사회 안에서 통시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어떤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회의 문화와 접촉할 경우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문화가 원형과 달리 변용되기도 되는데, 후자 같은 현상을 문화접변(文化接變, acculturation)이라고 부른다.⁶⁾ 생활문화⁷⁾도 마찬가지로

3) 사람들이 재일조선인에게 갖는 경제적 열등감은 실증적 근거에 따라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력 격차를 의식하면서 막연하게 형성된 측면이 더 크다.
 4)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왔는가」, 『역사비평』 78호, 역사비평사, 2007.
 5) 문옥표, 「관서지역 한인동포 생활문화의 특징」, 한국문화인류학회 편,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2, 17쪽.
 6) 비판사회학회 엮음, 『문화와 사회화』,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한울, 2012, 153~156쪽.
 7) 생활문화는 크게 '광의의 생활문화'와 '협의의 생활문화'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생활문화로는 의식주문화, 가족친족생활문화, 경제생활문화, 여가생활문화, 언어생활문화, 교육문화, 신앙생활문화, 의례와 세시풍속로 범주화 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일상적이지 않지만 생애 과정에서 반드시 향유하게 되는 여러 의례와 세시풍속을 제외한 것이 바로 '협의의 생활문화'에 해당한다.

지역서 사회끼리의 상호 문화교류 같은 자발적 계기뿐 아니라, 식민지배, 강제이산 같은 강제적 계기로 식민모국 또는 거주국 생활문화와 접촉할 경우, 식민지배 이전에 모국에서 향유하던 생활문화, 곧 원형(prototype) 생활문화는 다양하게 변용된다. 특히 강제적 계기에 따른 문화접변의 경우 식민모국이나 거주국 생활문화보다 원형 생활문화의 변동 폭이 더 큰 게 일반적 경향이다.

코리언의 원형 생활문화 또는 모태 생활문화 역시 식민지배, 강제이산, 근대 산업화 등을 계기로 다양하게 변용되어 갔는데, 실제 변용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하나는 코리언이 거주하는 사회의 정치경제구조와 그 영향으로 형성된 생활문화고, 다른 하나는 코리언이 거주하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외래 생활문화다[그림].

[그림 1] 생활문화의 변용



예를 들어 설명하면, ‘식민지 조선(한반도)의 코리언’ 생활문화는 서구의 근대 생활문화가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서구 근대 생활문화와 일본 생활문화의 혼종, 일본이 조선에 이식해놓은 ‘새로운’ 정치경제구조에 따라 창출된 식민지 시대 생활문화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중국 동북 지방 거주 코리언’(재중 조선족)의 생활문화는 개혁개방 이전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형성된 생활문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 끼친 외래 생활문화의 복합적 영향 속에서 변용된다. 여기에 재일조선인과 재중 조선족에게는 모두 남한, 북한과의 문화접촉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밖에도 자본주의 체제와 미국문화가 남한 생활문화에 끼친 영향, 사회주의 체제와 소련문화가 북한 생활문화에 끼친 영향, 199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 확산’과 ‘고난의 행군’(심각한 경제난)이 각각 남북 생활문화에 끼친 영향까지 따져 가다 보면, 코리언 생활문화가 참으로 다양한 조건 속에서, 다양한 계기로 변용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생활문화가 코리언 생활문화로 불린다면 그렇게 불릴 수 있는 ‘본질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 할 경우, 또는 어디에 살던 관계없이 코리언이라면 ‘공통’으로 향유하는 생활문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 할 경우 우리는 필연적으로 민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고유한 민족문화는 민족과 민족을 구분 짓는 결정적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상식을 따르다면 ‘모든’ 코리언에게 공통적인 문화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실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일본의 코리언, 중국의 코리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코리언, 남한의 코리언, 북한의 코리언을 같은 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본질주의 시각에서 코리언을 바라보는 이들은 코리언의 해체를 안타깝게 여기며 민족문화교육을 강조하기도 하는데,⁸⁾ 문제는 거주지 사회체제나 외래문화의 구조적 영향력을 교육만으로 온전히 극복할 수

8) 더 자세한 논의는 김진환, “재일조선인 정체성 연구 현황과 과제”, 『한민족문화연구』 제39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 377~382쪽.

없다는 사실이다. 개념은 현실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추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현실을 반영한 관념적 구성물이라는 성격이 더욱 강하다. 따라서 본질주의 시각에서 정의한 ‘민족 생활문화’ 개념이 여전히 자신을 같은 민족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이들, 타민족에 의해 자신과 구별되는 민족으로 불리는 이들⁹⁾의 실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존 개념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비록 코리언 생활문화가 다양하게 변용되었고 지금도 변용되고 있지만, 코리언은 여전히 자신을 같은 민족의 구성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현실에 주목해, 코리언 생활문화를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가진 생활문화로 정의할 것이다. 가족유사성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고안한 개념으로, 그는 이 개념을 “어떤 일반 용어 아래에서 포섭하는 모든 실재물들에 공통적인 어떤 것을 찾으려는 경향”¹⁰⁾을 비판하는데 활용했다.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문제의식, 그리고 가족유사성에 대해 후기에 했던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길지만 정확한 개념 이해를 위해 그대로 옮겨 본다.

우리는, 이를테면, 모든 놀이들에 공통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하며, 이 공통적 성질이 “놀이”라는 일반 용어를 다양한 놀이들에 적용되는 것을 정당화해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놀이들은 그 구성원들이 가족 유사성들을 지니는 하나의 가족을 형성한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같은 코를 가지고 있고, 다른 이들은 같은 눈썹들은,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같은 걸음걸이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유사성들은 겹친다.¹¹⁾

66. 예를 들어 우리가 “놀이들”이라고 부르는 과정들을 한번 고찰해 보라. 나는 판 위에서 하는 놀이들, 카드놀이들, 공놀이들, 격투 시합들 따위를 뜻하고 있다. 무엇이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적인가?—“그것들에는 무엇인가가 공통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놀이들’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고,—그것들 모두에 공통적인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를 보라.—왜냐하면 당신이 그것들을 주시한다면, 당신은 그 모든 것에 공통적인 어떤 것을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유사성들, 근친성들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우 많이. 이미 말했다시피 : 생각하지 말고, 보라!—예컨대 판 위에서 하는 놀이들을 그 다양한 근친성들과 함께 주시하라. 자, 이번에는 카드놀이들로 넘어가라. 여기서 당신은 첫 번째 부류들과 대응하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지만, 많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사라지고 다른 것들이 등장한다. 이제 우리가 공놀이들로 넘어가면, 어떤 공통적인 것들은 보존되어 남아 있지만, 많은 것이 상실된다.—그것들은 모두 ‘재미있는’가? 장기와 오목을 비교하라. 또는 놀이하는 사람들 사이에 언제나 승패 또는 경쟁이 존재하는가? 파시앙스라는 카드 점치기 놀이를 생각하라. 공놀이들에는 승리와 패배가 존재한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공을 벽에 던지고 다시 붙잡을 때는 이러한 특징은 사라진다. 기량과 운(運)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라. 그리고 장기에서의 기량과 테니스에서의 기량은 얼마나 다른가? 자, 이번에는 율무놀이를 생각해 보라. 여기에 오락의 요소는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다른 성격적 특징들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많고 많은 다른 놀이 집단들을 훑어볼 수 있으며, 유사성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고찰의 결과는, 우리는 서로 겹치고 교차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그물을 본다는 것이다. 큰 점과 작은 점에서의 유사성들을. 67. 나는 이러한 유사성들을 “가족 유사성”이라는 낱말에 의해서 말고는 더 잘 특징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몸집, 용모, 눈 색깔, 걸음걸이, 기질 등등 한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유

9)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구성되며, ‘민족 자의식’은 주관적 측면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주민뿐 아니라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은 다양한 국적과는 연관 없이 높은 민족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거주지의 타민족으로부터도 구별되는 민족으로 불리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하나의 민족이다.

10)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지음, 이영철 옮김, 『청색책·갈색책』, 책세상, 2006, 40쪽.

11) 위의 책, 40~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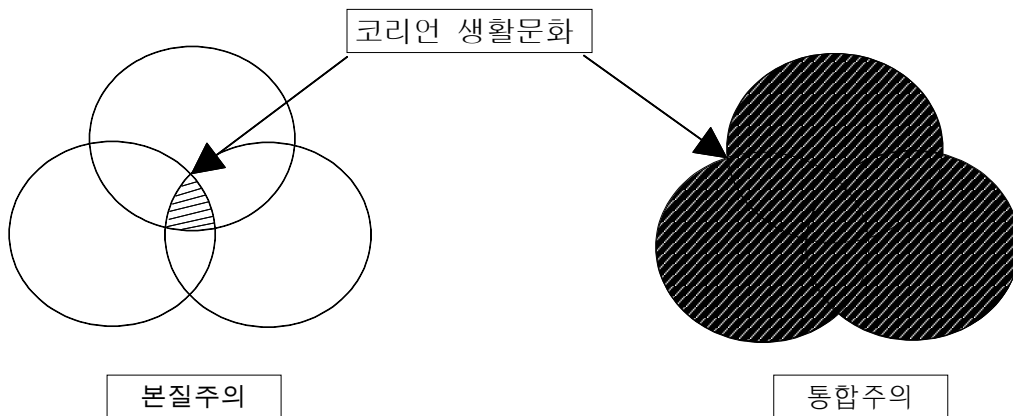
사성들은 그렇게 겹치고 교차하기 때문이다.-그리고 나는 ‘놀이들’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¹²⁾

이러한 가족유사성 개념을 차용하면, 코리언 생활문화는 식민지배 이전 같은 부모(원형 생활문화) 아래에서 태어난 ‘여러’ 자식(변용 생활문화)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거주하는 모든 코리언을 아우르는 생활문화의 공통성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남한,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같은 거주지별로 교차 비교하다보면 어떤 지역끼리는 의식주 양식의 유사성을, 어떤 지역끼리는 언어의 유사성을, 어떤 지역끼리는 교육의식의 유사성을, 어떤 지역끼리는 결혼, 장례 같은 의례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흩어져 살다보면, 심지어 사회체제가 대조적인 곳에서 살다 보면 다른 점이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닮은 점이 쉽게 사라지지도 않는다. 누가 봐도 그 형제자매에게 닮은 점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면 유사성의 완전한 ‘소멸’도 가정해볼 수 있겠지만, 탈냉전 이후 남한과 북한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1990년대 이후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모국의 접촉 활성화, 코리언 디아스포라끼리의 접촉 활성화 등으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가족유사성이 커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리하면 ‘코리언 생활문화’란 일제 식민지배에 따른 강제이산, 한반도 분단으로 코리언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거주지의 사회체제, 내생·외래 생활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가족유사성을 가진 채 변용된 각 지역 생활문화의 총합이다. 달리 말하면 코리언 생활문화란 코리언이라는 민족 집단이 한반도에 살면서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생활문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코리언이 어디에서 살고 있든 간에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생활문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거주지별 생활문화를 원으로 비유할 경우, 코리언 생활문화는 모든 지역의 생활문화가 겹치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겹치는 원(각 지역 생활문화)들의 집합이며([그림 2]),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를 포함한 코리언 생활문화의 지역별 비교는 ‘서로 조금씩 겹치는 부분’을 확인시켜준다.¹³⁾

[그림 2] 코리언 생활문화를 바라보는 두 시각: 본질주의와 통합주의



12) 비트겐슈타인 지음, 이영철 옮김, 『철학적 탐구』, 책세상, 2006, 70~71쪽.

13) 2절의 대부분은 2012년 5월 도서출판 선인에서 출간 예정인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총서 『코리언의 생활문화』에 필자가 기고한 두 편의 글(1장 「코리언 생활문화: 개념, 의의, 연구방법」, 6장 「재일조선인의 생활문화」)에서 발췌한 것이다. 출간 준비 중이라 정확한 인용쪽수를 표시하지 못했다.

3. 코리언 디아스포라 생활문화 비교의 실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생활문화의 실상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생활풍습’과 행위자가 직접 드러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생활의식’이라는 요소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지역별 응답빈도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의 몇몇 영역별 풍습과 의식을 비교해보겠다.

1) 언어

언어생활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그나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다. 코리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에서도 그렇고, 전문 연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언어생활은 이들의 민족정체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 받아 왔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한국인들이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모국어인 한국어(조선어)를 못하거나 안 쓴다는 것은 그들이 곧 민족정체성을 잃어 가는 것이라는 평가¹⁴⁾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실제 어떤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집에서 일상적인 대화에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재일조선인은 일본어 사용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재러 고려인은 절반 가까이가 언어 혼용을 하고 있으며, 조중족은 조선어 사용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1>). 조선어 전용 비율만 놓고 보면, 재일조선인과 재러 고려인의 유사성이 높고, 두 지역 디아스포라와 재중 조중족의 유사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표 1> 집에서 일상적인 대화에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중족	
조선어	1.9	고려말	1.8	조선어	70.0
일본어	81.2	러시아어	53.4	중국어	4.0
섞어서 쓴다	15.6	섞어서 쓴다	43.6	섞어서 쓴다	25.6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한편 일반적으로 언어를 민족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는 이들은 민족교육 강화를 통해 ‘언어의 동질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 지역별로 ‘민족교육 경험’을 확인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교육 유무를 묻는 질문에 재일조선인은 68.5%, 재러 고려인은 19.9%, 재중 조중족은 81.5%가 민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언어 혼용 비율은 재러 고려인이 재일조선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표 1>). 민족교육과 언어생활의 연관성에 대해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좀 더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¹⁵⁾

2) 의식주

한복과 김치는 그동안 한국인들이 조선어와 함께 민족 생활문화의 본질적 요소처럼 생각해 온 지표로,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비교할 때 유독 ‘차별적 향유’를 관념적으로 상상하던 문화요소다. 달리 말해 한국인은

14) 김희정, 「코리언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한국사회학회. 임채완·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06. 강정희,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 조사-오사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86집, 한국어문학회, 2004.

15) 참고로 재일조선인의 경우 민족학교 경험과 언어생활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69로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적으로는 유의확률이 ‘0.050 미만’일 때 종속관계가 성립된다.

갈수록 전통을 상실해가는 코리언 디아스포라보다 자신이 더 많이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과연 현실도 그럴까? 먼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실상부터 확인하고, 한국인들의 상상에 대해 평가해보자.

한복(저고리)을 안 입는다는 비율은 재러 고려인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재일조선인은 절반에 약간 못 미쳤으며, 재중 조선족이 10.1%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세 지역 모두 ‘특별한 행사’에 한복을 입는 비율이 높았다. 설문지 작성 과정의 착오로 재일조선인을 제외한 두 지역만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질문했는데, 재러 고려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 한복을 거의 안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한복 착용 실태는 재일조선인과 재러 고려인이 유사했다. 성별로 본 한복 착용 실태도 두 지역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유사점이 있었다. 이에 비해 재중 조선족은 성별 한복 착용 실태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표 2>).

이어서 한복을 입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재중 조선족이 한복 착용 행위를 가장 높은 빈도로 민족정체성과 연관 짓고 있으며(‘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서’, ‘내가 조선인임을 자랑하고 싶어서’에 응답) 재일조선인도 한복 착용 행위와 민족정체성을 연관 짓는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재중 조선족보다 강도는 덜하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재러 고려인은 ‘특별한 행사에 누구나 입어야 하기 때문에’에 압도적으로 많은 응답을 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이를 드러냈다(<표 3>).

<표 2> 한복을 입는다면 언제 입는지 모두 표기해주세요.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안 입는다	47.1	70.3	26.5	57.1	67.5	48.6	10.1	13.1	7.2
특별한 행사	41.7	16.9	63.9	33.1	24.5	40.5	73.4	71.7	75.0
일상적으로	3.5	1.4	5.4	2.1	.0	1.2	3.4	4.1	2.6
명절*	1.9	1.4	2.4	1.5	5.3	6.9	34.7	37.9	31.6
가족모임	1.0	.0	1.8	.6	1.3	2.9	10.1	13.8	6.6

* 재일조선인은 ‘추석/명절’로 질문

※ 단위 %, 무응답 제외

<표 3> 한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서	19.0	21.7	40.4
내가 조선인임을 자랑하고 싶어서	16.3	4.3	26.6
아름다운 옷이므로	19.0	8.0	12.7
차별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므로	2.7	1.4	1.9
특별한 행사에서 누구나 입어야 하기 때문에	24.5	54.3	18.4

* 재일조선인은 ‘조선인’, 재러 고려인은 ‘고려인’, 재중 조선족은 ‘조선족’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다음으로 실제 김치를 얼마나 자주 먹는지는 질문하지 않았지만, 김치에 대해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아보았다. 먼저 전반적으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김치 선호도는 낮은 편이었고, 그 중에서도 재일조선인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표 4>). 재러 고려인과 재중 조선족은 김치 선호도는 유사했지만, 식탁에 김치가 꼭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다른 대답을 했다. 재러 고려인의 경우 재일조선인과 유사하게 입맛에 맞거나 맛있기 때문에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재중 조선족은 맛있기 때문에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적은 대신,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이니까’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40%에 가까웠다(<표 5>). 재중 조선족의 경우 김치를 먹는 행위를 민족 전통의 고수와 연관 짓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표 4> 식탁에는 반드시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매우 그렇다	12.7	32.3	34.7
그렇다	24.2	54.6	45.5
아니다	40.8	6.4	11.1
상관없음	21.0	6.4	8.8

※ 단위 %, 무응답 제외

<표 5> 김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만 답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입맛에 맞으니까	32.8	39.9	45.0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이니까	10.3	21.9	37.4
몸에 좋은 음식이므로	2.6	3.9	9.7
맛있어서	33.6	23.3	8.0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흥미로운 점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남한 사람 501명 중 한복을 ‘안 입는다’는 응답이 30.5%로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보다는 낮았지만, 재중 조선족보다는 훨씬 높았다. 또한 한국인의 경우 ‘아름다운 옷이므로’ 한복을 입는다는 응답(22.6%)이 코리언 디아스포라에 비해 높았고, 한복 착용 행위와 민족정체성을 연관 지어 사고하는 비율은 18.2%¹⁶⁾로 어느 지역 코리언 디아스포라보다도 낮았다. 또한 김치 선호도¹⁷⁾도 재일조선인에 비해서만 높았을 뿐 재러 고려인이나 재중 조선족보다 낮았고, 김치를 먹는 행위를 민족 전통의 고수와 연관 지어 사고하는 경향 역시 재일조선인에 비해서는 높았지만,¹⁸⁾ 역시 재러 고려인이나 재중 조선족보다는 낮았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보다 한복, 김치를 더 많이 향유하거나 선호할 것이라는 한국인의 관념은 적어도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과 비교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3) 의례와 세시풍속

대표적 의례인 관혼상제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않았지만,¹⁹⁾ 관혼상제 의식의 지역별 차이는 알 수 있다(<표 6>). 전반적으로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관혼상제를 전통풍습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데, 세부적으로 바라보면 지역별로 매우 흥미로운 차이가 보인다. 재일조선인은 가급적 그럴 필요가 없다는 데에도 30% 이상이 응답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의 응답 비율은 각각 재일조선인의 3분의 1, 2분의 1에 불과해 선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그런데 재러 고려인은 가급적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가장 많이 응답함으로써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실정에 맞게 관혼상제를 치러야 한다는 ‘실리주의적’ 의식을 보여준 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데에 비슷하게 응답한 재중 조선족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응답과 ‘가급적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유사할 정도로 재러 고려인에 비해 ‘전통주의적’ 의식을 드러냈다. 응답자의 80% 정도가 전통풍습에 따라야 한다며 유사한 관혼상제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주목할 만한 차이점도 존재하는 것이다.

<표 6> 관혼상제를 전통풍습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6)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서’(16.4)와 ‘내가 한민족임을 자랑하고 싶어서’(3.4)를 합한 비율.
 17) 한국인은 ‘매우 그렇다’에는 29.5%가 응답했고, ‘그렇다’에는 41.9%가 응답했다.
 18) 한국인의 경우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이니까’ 김치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15.8%였다.
 19)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관혼상제로 대표되는 의례와 다양한 세시풍속을 실제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는 이후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해 나갈 것이다.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3.2	18.4	37.0
가급적 그렇게 해야 한다	61.1	70.9	46.1
그럴 필요가 없다	34.1	10.1	16.8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관혼상제, 출산의례, 육아의례 같은 다양한 생애의례 중에 이번 조사에서 유일하게 실태를 확인해 본 출산의례(산후조리)는 재러 고려인과 재중 조선족이 유사했다. 두 지역 모두 ‘우리 집’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시택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등 주로 자기 집이나 시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전통시대의 양상이 보인 것이다(<표 7>).

다만, 이 결과만 놓고 재일조선인보다 재러 고려인이나 재중 조선족이 ‘전통풍습’을 더 잘 따르고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건 무리다. 설문조사에 응한 재일조선인과 고려인조선족의 가족형태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핵가족, 2대가족, 3대가족 순으로 적어보면, 재러 고려인은 37.1%, 25.8%, 25.5%. 재중 조선족은 50.8%, 29.0%, 12.1%, 재일조선인은 54.1%, 15.3%, 3.2%다. 재일조선인이 전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적고, 이는 곧 ‘우리 집’ 산후조리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가족생활 변화가 산후조리의 양상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으며, 추가조사를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검증해갈 필요가 있다.

<표 7> 출산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산후조리를 할 때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특별히 산후관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	4.1	5.5	4.4
우리 집	5.7	42.3	39.4
친정	14.0	8.6	29.0
시택	3.2	15.3	12.5
산후조리원(병원)	1.6	24.2	14.8

* 재일조선인 응답의 전체 총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재일조선인 질문지에만 “출산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 표의 재일조선인 응답 비율은 전체 설문 응답자 314명 중의 비율이다.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명절나기의 경우 재일조선인이 다른 지역과 가장 뚜렷이 구별되는 점은 ‘무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또한 전통적인 설날(旧正月)을 쇠는 사람들도 37.3%에 불과해 고려인조선족과는 차이가 크다(<표 8>).²⁰⁾

일단 재일조선인이 설날을 많이 쇠지 않는다는 통계만 가지고 고려인조선족보다 민족정체성이 약하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건 주의해야 한다. 일본 사회에서는 음력 1월 1일을 쇠지 않고 양력 1월 1일을 쇠는데, 이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지 다민족 가정에서 설날을 쇠는 대답이 단일민족 가정에 비해 절반 정도에 그쳤다.²¹⁾ 요컨대 재일조선인의 설날 쇠기 응답 비율이 고려인조선족에 비해 낮은 데는, 비슷한 가족구성이라 하더라도²²⁾ 양력 설날이 음력 설날을 대체하지 않는 러시아, 중국과의 차이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무엇보다 재일조선인의 설날 쇠기와 민족정체성은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²³⁾ 가족구성과 설날 쇠기는 유의확률 0.000으로 완벽한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20) 재일조선인 조사 때 추석의 경우 설문지에 음력 8월 15일을 가리키는 ‘秋夕’과 일본 사회에서 보통 양력 8월 15일에 지내는 ‘盂’을 병기함으로써 전통명절인 음력 8월 15일을 재일조선인이 얼마나 쇠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타당성이 부족했다.

21) 다민족 가정은 22.4%, 단일민족 가정은 40.9%가 설날을 쇠고 있었다.

22) 응답자 중 다민족 가정 대 단일민족 가정 비율은 재일조선인이 18.7% 대 78.7%, 재러 고려인은 17.5% 대 79.4%, 재중 조선족은 5.4% 대 94.6%였다.

한다.

한편 설날을 쇠는 풍습이 다르다고 해서 재일조선인의 명절나기가 다른 지역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아무런 유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일조선인과 재러 고려인은 정월대보름을 거의 쇠지 않고 있으므로, 정월대보름 쇠기만 놓고 보면, 재러 고려인은 재중 조선족이 아니라 재일조선인과 더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표 8> 우리 가족이 쇠는 전통명절을 모두 표기해주세요.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설날	37.3	87.4	93.9
추석	34.4	63.5	79.8
정월대보름	6.4	9.2	79.5
단오	1.9	15.3	64.3
한식(청명)	1.3	47.5	62.3
무응답	49.0	.9	.3

※ 단위 %

4) 가족주의

가족생활 영역에서는 가족생활의 실태보다는 결혼관, 출산 시 선호 성별, 보육기관에 맡기는 이유, 부모 봉양의식, 가족의례 등 가족의식의 실상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았다.

먼저 족외혼에 대해서는 재일조선인과 재러 고려인이 대단히 유사한 인식을 드러냈고, 둘과 재중조선족의 차이가 컸다. 재일조선인과 재러 고려인이 족외혼에 전반적으로 관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비해, 재중조선족은 절반 가까이 족외혼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절대반대’라는 응답도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에 비해 5배 가까이 높았다(<표 9>).

이러한 결과를 두고 재중 조선족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함께 거주하며 같은 민족끼리 만날 기회가 많은 데 비해, 재일조선인과 재러 고려인은 일본, 러시아 곳곳에 산거하면서 같은 민족끼리 만날 기회가 적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기 쉬운데 <표 10>을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 족외혼이든, 족내혼이든 ‘상관없다’고 대답한 이들 모두 ‘동족 배우자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거의 꼽지 않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재일조선인과 고려인조선족은 차이점을, 재러 고려인과 재중 조선족은 높은 유사점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다. 재일조선인은 ‘더 이상 핏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와 ‘사랑한다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기 때문에’에 비슷한 비율로 응답한 반면, 고려인조선족의 80% 이상은 사랑이 결혼의 제1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표 9> 타민족과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절대반대	3.2	3.1	15.8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다	28.7	35.3	48.1
상관없다	67.2	61.7	36.0

※ 단위 %, 무응답 제외

23) “ 조선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확인한 민족적 자부심과 설날을 쇠는 것은 카이제곱검정 결과 유의확률 0.233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재중 조선족도 유의확률 0.781로 연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비해 재러 고려인은 유의확률 0.010으로 높은 종속관계가 성립됐다.

<표 10> 상관없다고 대답한 분들만 답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더 이상 핏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39.3	4.5	1.9
어차피 이 나라(일본)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11.4	4.0	12.1
사랑한다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기 때문에	35.1	85.1	81.3
동족 배우자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1.9	1.0	4.7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다음으로 출산 시 선호 성별을 조사한 결과, ‘상관없다’는 응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아들을 딸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은 드러났다(<표 11>). 특히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의 남아 선호도가 재일조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므로 두 지역이 유사한 출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남아 선호도가 약간씩 높은 것은 코리언 디아스포라 모두가 지닌 특징적 의식이다.

한편, “아이를 보육 기관에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재일조선인은 ‘돌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은 데 비해, 재러 고려인은 주로 교육, 사회성 양성 같은 기능을 보육기관이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중 조선족은 ‘돌봄 사람이 없어서’와 ‘교육이 필요해서’에 비슷하게 대답했다(<표 12>). 요약하면 재일조선인을 ‘돌봄’을, 재러 고려인은 ‘교육’을 보육기관에 주로 기대하고, 재중 조선족은 ‘돌봄’과 ‘교육’ 모두를 보육기관에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표 11>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호하는 성별은 무엇입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아들	9.9	12.8	7.2	22.4	28.5	16.8	24.9	26.2	23.7
딸	3.2	.7	5.4	8.0	5.3	10.4	15.8	19.3	12.5
상관없다	83.8	87.3	87.3	66.3	60.9	71.1	59.3	54.5	63.8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표 12> 아이를 보육 기관에 맡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돌봄 사람이 없어서	37.3	12.6	25.9
육아가 힘들어서	2.9	.3	1.7
교육이 필요해서	11.5	39.3	31.1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18.5	33.7	14.5
안 맡겨서 모르겠다	18.5	6.4	26.9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부모 봉양의식도 조사해보았다. 먼저 “부모를 꼭 자녀가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재러 고려인은 90% 이상, 재중 조선족은 80% 이상 자녀에게 부모 봉양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재일조선인 사이에서는 자녀만이 부모 봉양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의식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13>). 다음으로 부양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자녀’ 이외에 ‘국가’와 ‘사회’를 꼽은 비율은 부모를 꼭 자녀가 봉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과 비슷했는데, 재일조선인의 경우 ‘사회’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한 반면, 고려인·조선족은 ‘국가’ 책임을 조금 더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재중 조선족의 봉양의식이다. 국가사회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데, 이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재중 조선족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재일조선인이나 재러 고려인보다 약간 더 높은 정도로만 국가의 봉양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녀에게 봉양 책임이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은 재일조선인보다 20% 가까이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연구자들에게 민족정체성과 생활문화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거주 지역 정치경제체도와 생활문화의 관계도 성급히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표 13> 부모를 꼭 자녀가 봉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매우 그렇다	10.5	48.5	32.3
그렇다	58.9	49.1	54.5
그렇지 않다	29.0	1.8	13.1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표 14> 부모 봉양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자녀	62.4	87.7	81.1
국가	5.4	7.1	11.1
사회	20.7	.3	7.7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끝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하고 가족이 꼭 모여야 할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고르세요.” 라는 질문에 재일조선인은 ‘가족 행사’(50.3%), ‘부모님 생신’(30.6%), ‘설날’(29.9%), ‘추석’(22.9%) 순으로 대답함으로써, 명절 이외의 가족 모임에 좀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재러 고려인은 ‘부모님 생신’(82.5%)에 이어 ‘설날’(47.2%), 추석(46.0%), ‘가족 행사’(46.0%) 순으로 명절 모임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차이를 보여줬다. 재중 조선족은 ‘설날’(91.9), ‘부모님 생신’(82.8), ‘가족 행사’(75.4%), ‘추석’(54.9%) 순으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설날을 중시했다. 여러 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일본, 러시아와 달리 음력설(춘절)을 대대적으로 쇠는 중국 현지 생활문화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재일조선인을 제외한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에게는 현지 명절인 ‘노인절’, ‘아동절’을 추가로 선택 항목에 넣었는데, 재러 고려인은 ‘노인절’(17.2%)보다 ‘아동절’(38.0%)을 더 중시했고, 재중 조선족은 반대로 아동절(12.8%)보다 ‘노인절’(39.1%)을 더 중시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났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5) 교육관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재일조선인과 고려인조선족이 큰 차이를 보였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은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재일조선인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목할 점은 재일조선인의 학교 교육 ‘불신’이 고려인조선족에 비해 3배 넘게 강하다는 것이다(<표 15>). 일본의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기초 아래 만들어지고 있는데다,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차별, 배제, 억압 등이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표 15> 학교교육을 신뢰하십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매우 신뢰한다	4.1	3.4	20.2
신뢰한다	53.5	84.4	68.0
불신한다	34.1	9.2	11.1
매우 불신한다	3.5	2.5	.7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한편, 정규 학교뿐 아니라 강습회, 서클 같은 비정규적 교육까지 포함한 ‘민족교육’ 경험 유무를 조사해보았는데, 재일조선인의 68.5%는 민족교육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데 비해, 재러 고려인은 민족교육 경험이 있다는 대답이 19.9%에 불과했고, 재중 조선족은 무려 81.5%가 민족교육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경험 차이는 민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민족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는데, 주목할 점은 민족교육을 비교적 많이 받은 재일조선인이나 재중 조선족은 ‘꼭 받아야 한다’기보다는 ‘기회가 있다면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 많이 서 있고, 이에 비해 재러 고려인은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재일조선인, 재중 조선족의 2배 이상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표 16>). 이러한 조사결과는 코리언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그동안 민족교육 기회가 많지 않았던 재러 고려인이 가장 절실하게 민족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아도 될 것이다.

<표 16> 민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기회가 있다면 받아야 한다	57.0	27.3	65.3
꼭 받아야 한다	28.7	57.4	23.9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	5.7	4.0	7.7
생각해본 적 없다	5.4	10.7	3.0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민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역사’보다 ‘언어’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런데 조선어 전용 비율이 비슷하게 대단히 낮은(<표 1>) 재일조선인과 재러 고려인을 비교해보면 재일조선인은 언어 혼용 비율(15.6%)이 재러 고려인(43.6%)보다 현저히 낮은데도, 재러 고려인보다 언어교육을 덜 필요로 하고 있었다. 반대로 역사교육은 재러 고려인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중시하고 있다(<표 17>). 이러한 현상은 재일조선인이 재러 고려인과 비교할 때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언어’보다 ‘역사’에서 더 확인하려 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준다.

<표 17> 민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역사	28.3	10.4	31.6
예술	.6	5.5	4.4
민속예절	10.8	16.0	21.9
언어	38.2	51.2	42.1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끝으로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에는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까?”, “성공한 사람(명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재일조선인은 아이가 커서 동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가장 많이 원했고, 고려인조선족의 다수는 아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둘 중에서도 특히 재러 고려인의 응답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표 18>), 재일조선인, 재중 조선족에 비해 낙후한 경제생활 조건의 반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생각도 지역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이 뚜렷했다. 재일조선인, 재중 조선족은 사회적 가치를 가장 중요한 성공의 잣대로 보고 있는 데 비해, 재러 고려인은 물질적 부(富)를 가장 중요한 성공의 잣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표 19>).

<표 18>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돈을 많이 버는 사람	21.7	79.8	36.4
유명인(대중적인 스타)	5.4	3.7	17.8
일본 사회*의 지도층	15.6	3.7	24.9
동포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31.5	6.1	20.9

* 재일조선인은 ‘일본 사회’, 재러 고려인은 ‘러시아 사회’, 재중 조선족은 ‘중국 사회’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표 19> 성공한 사람(명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부자가 된 사람	9.2	43.6	13.5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	2.9	16.9	14.8
공부를 많이 한 사람	3.8	19.0	5.4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	45.5	7.7	53.5
남을 위해 헌신한 사람	22.3	5.5	12.8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6) 직업관

이번 조사에는 직업실태와 직업의식 중 재일조선인의 직업관을 직업에 대한 자부심, 직업 선택 요인, 직업선택 시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세 가지 영역의 질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 직업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순으로 직업 자부심이 높았다(<표 20>).

다음으로 직업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재일조선인과 재중 조선족은 ‘자아 실현’이, 재러 고려인은 ‘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표 21>). 특히 흥미로운 점은 재일조선인과 재중 조선족이 사회적 가치를 성공의 잣대로 보면서도(<표 19>), 정작 자신의 직업 선택 기준으로는 ‘자아 실현’이라는 개인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 고려인은 직업 선택 기준으로 ‘보수’를 가장 많이 선택함으로써 일관된 의식을 보여줬다.

끝으로 직업 선택 시 영향을 끼치는 변수에 대해서는 일반적 예상과 부합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의 영향력이 강력한 중국의 정치적 특성이 반영돼, 재중 조선족이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국가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생각과 자아실현이 직업 선택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자아 실현’이라는 생각이 충돌할 경우 재중 조선족의 대응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조사결과 특이점은 친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재일조선인의 경우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에 비해 3배 정도 높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은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 재일조선인의 가족

형태가 세 지역 코리언 디아스포라 중에서 가장 단순하다는 사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이다.

<표 20>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매우 그렇다	9.9	13.2	18.9
그렇다	41.9	62.6	67.0
그렇지 않다	17.8	5.2	7.4
매우 그렇지 않다	7.3	1.2	.3
생각해본 적이 없다	20.1	15.6	6.4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표 21>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자아실현	35.4	48.5	36.4
보수	15.0	27.3	18.9
안정성	22.3	8.0	35.7
사회적 명예	1.9	2.1	2.4
사회적 기여도	9.9	8.0	6.7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표 22>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일조선인	재러 고려인	재중 조선족
선생	4.1	6.4	8.8
친구	30.3	12.0	10.8
부모	29.6	58.0	35.4
형제	4.8	7.4	3.0
국가정책	8.3	8.6	42.1

* 단위 %, 중복응답·무응답 제외

4.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번 조사결과 세 지역 코리언 디아스포라가 모두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의 공통 점은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반면, 두 지역끼리 묶을 수 있는 유사성은 거의 모든 문항에 대한 대답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이 글의 전반부에서 주장한 이론적 명제, 곧 코리언 생활문화란 코리언이라는 민족 집단이 한반도에 살면서 보편적으로 향유하는 생활문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코리언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 간에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생활문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일제 식민지배에 따른 강제이산, 한반도 분단으로 코리언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면서 거주지의 사회체제, 내생외래 생활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가족유사성을 가진 채 변용된 각 지역 생활문화의 총합이라는 이론적 명제를 뒷받침해주는 실제 증거들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지역의 코리언 디아스포라 생활문화를 ‘비교’연구하는 의미는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에 대해 한국인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본질주의적 정의-이는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를 극복하는 대안을 찾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문화에 대한 본질주의적 시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민족이 문화적 공통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라는 정의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타자와 나를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달리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행위양식과 사고방식 같은 ‘문화적 요소’ 또는 ‘종족적 요소’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본질주의적 또는 ‘남한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정의함으로써, 일제 식민지배와 강제이산 같은 공통의 정치적 경험을 하고, 거주 지역에서 여러 민족 사이에 실존하는 정치적 차별을 실감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선민족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타자로부터 규정당한’ 수백 만 명의 민족 구성원을 결과적으로 ‘민족 내부의 타자’로 만들고 말았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언어, 의식주, 가족생활, 명절나기가 과거 전통적 모습과 다르거나 ‘남한 사람들’과 다를 경우 이들을 탈(脫)민족구성원 또는 비(非)민족구성원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코리언 디아스포라를 포함해 전 세계 코리언의 생활문화를 찬찬히 확인해보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지역별로는 공유하고 있는 생활문화의 유사성, 곧 가족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라는 개념을 모든 민족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문화 또는 남한 사람들의 문화가 ‘전형(典型)인 생활문화가 아니라, 가족유사성을 가진 코리언의 생활문화를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 코리언의 생활문화를 원으로 비유할 때 겹치는 부분이 있는 원들의 집합이 바로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인 것이다.

실제 가족의 현실로 비유해보면, 가족 안에는 나와 완전히 같지 않고,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 형제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부모와 형제로 여기는 이상 언젠가 그의 모습이나 생각을 따라할 수도 있는 게 가족이며, 것처럼 ‘개성’이 강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그 가족은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현실을 민족의 현실로 확대하면, 왜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에 민족 생활문화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보고(寶庫)라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분명해진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이 2011년에 수행한 코리언 디아스포라 설문조사는 생활문화의 가족유사성을 확인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나아가 코리언 디아스포라 생활문화가 지닌 민족 생활문화 보고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기에도 모자람이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활용한 설문지는 주로 정체성과 분단통일의식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생활문화와 관련된 문항은 20여 개에 불과했으므로 당연히 생활문화 전반을 포괄해서 논의할 수 없었고, 게다가 생활문화 변용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데 필수적인 참여관찰, 심층면접 같은 질적 조사도 아직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글에서 제시한 이론, 가설 등을 현지에서의 질적 조사를 비롯해 추가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고 검증해갈 것이다. 민족통일은 우리 곁에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은 노력이 쌓이고 쌓일 때 필연적으로 이룩될 것이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 강정희,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 조사-오사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86집, 한국어문학회, 2004.
- 권혁태, 「'재일조선인'과 한국사회-한국사회는 재일조선인을 어떻게 '표상'해왔는가」, 『역사비평』 통권 78호, 역사비평사, 2007.
- 김진환, 「재일조선인 정체성 연구 현황과 과제」, 『한민족문화연구』 제39집, 한민족문화학회, 2012.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지음, 이영철 옮김, 『철학적 탐구』, 책세상, 2006.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지음, 이영철 옮김, 『청색책갈색책』, 책세상, 2006.
- 문옥표, 「관서지역 한인동포 생활문화의 특징」, 한국문화인류학회 편,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2.
- 비판사회학회 엮음, 『문화와 사회화』,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한울, 2012.
- 서경식 지음, 권혁태 옮김, 『언어의 감옥에서: 어느 재일조선인의 초상』, 돌베개, 2011.
- 오경석, 「한국 다문화주의의 재모색」, 『인문언어』 제12권 2호, 국제언어인문학회, 2010.
- 윤인진, 「코리아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한국사회학회, 2003.
- 임채완-전형권, 『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2006.

2 [13:00~16:00] 라운드테이블 - 코리언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모색

: 정진아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한국

조선족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 허영길 / 연변박물관 연구관원, 근현대문화부 주임, 중국

재일조선인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발표자: 김봉양 / 코리아NGO센터 도쿄사무국 사무국장, 일본

재러고려인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발표자: 김발레라 / 우스리스크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부회장, 러시아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발표자: 한정미 / 통일부 하나원, 언어문화적응 교육 담당, 한국

한국인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발표자: 정승안 / 동명대 자율전공학부 교수, 한국

재중조선족의 생활문화와 민족공통의 생활문화

허영길*

1. 들어가는 말

광복 후 조선족은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국민당정부를 타도하는 전장에 뛰어들어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정치참여권, 토지소유권, 공민권과 자치권리를 수여받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조선족들의 생활문화와 특성 및 민족공통성의 생활문화에 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조선족의 생활문화

(1)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당과 정부는 조선족들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으로 인정하였고 소수민족정책에 따라 민족적정체성을 부여하였다. 소수민족정책은 그들에게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과 시험을 민족 언어로 치르게 하며 입학시험에서 가산점수를 주고 있다. 그리고 민족 신문과 방송, 출판, 예술을 지원하는 등 각종 문화 정책을 펼쳐나가는 한편 정치적인 통제를 전제로 한 문화 및 경제적 지원 위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족에게 있어서 국가와 민족은 엄격하게 구분된다. 조선족이 주로 살고 있는 동북 3성과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붙어 있고 중국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국을 자연스레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조선족의 사회적 지위, 생활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선족이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갖는 것은 언어와 문자이다. 즉 한국말과 한글을 가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많은 소수 민족들은 자기의 문자가 없거나 문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언어를 상실하고 동화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 그러나 조선족은 한자와는 전혀 다른 한글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 무한한 민족적 자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조선족들의 저서나 작품은 철저하게 한글 전용으로 되어 있어 민족적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족사회의 문학, 예술, 창작이나 신문, 잡지, 방송, TV프로그램이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의식주에 관련된 문화나 세시풍속 등은 모두 조선족사회에 맞도록 꾸며져 있다.

조선족이 기타 소수민족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또 하나는 교육열이 높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아서 조선족 중에는 문맹이 없고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특히는 중한수교이후 연해도시 진출과 코리아 드림으로 인해 조선족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조선족의 삶의 터전이었던 민족공동체가 붕괴됨에 따라 향, 진의 조선족 중, 소학교의 상당수가 폐교되었고 현 급 이상 도시의 조선족 중, 소학교도 학생원천이 없어 여러 학교가 합병되는 현상이 존재하는 등 전반 민족교육체계가 뒤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2) 조선족생활문화의 특성

1) 생활의례

생활의례는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조선족은 정치적, 경제적인 곤란 속에

* 연구관원

서도 민족의 문화적 전통을 지켜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초기에는 신앙생활을 제외한 어느 정도의 민족문화와 전통을 고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받았으나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민족문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민족분과주의자로 몰려 곤혹을 치르기도 하였다. 그러한 민족문화 말살 과정을 겪으면서 민간의 전통의례나 신앙생활 등을 "미신, 봉건사상, 낡은 사상"으로 매도하고 부정하였다. 그리하여 결혼이나 장례, 제사 등은 신념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지정된 형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민간신앙이나 종교생활 등은 사라지게 되었다.

문화대혁명이 계속되고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되면서 생겨난 호화로운 의례가 되살아나자 정부는 의례의 간소화를 제창하였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례를 없애고 토장을 하지 않으며 잔치를 크게 벌이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세기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의례가 강하게 부활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첫 돌: 신생아가 출생하여 첫 돌이 되면 외가와 친가의 친척들, 부모의 회사, 친구들과 이웃 주민들이 하루 전날 모여서 잔치 준비를 한다.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아이에게 돌 옷을 입히고 상을 받게 한다. 상 위에는 볼펜과 책, 주산, 실타래, 가위, 돈, 팔 찰떡 등을 차려놓고 아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를 보면서 덕담을 하고 아이에게 축하금을 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잔치를 한다. 현재 연길의 경우 전부 호텔이나 예식장에서 첫 돌 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축하금도 수직상승하여 큰 부담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족인구의 감소, 민족공동체의 붕괴로 인해 많은 조선족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와 한국으로 진출하였기에 농촌 마을에서는 어린이 첫 돌을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 결혼: 연애나 중매를 막론하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로 결심하면 먼저 부모의 동의를 받고 난 뒤 신랑 측의 직계가족이 신부 집을 찾아가서 청혼을 한다. 여기서 사돈보기 날짜를 정한다. 사돈보기는 신랑 측에서 떡과 술,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신부 집으로 가서 작은 잔치를 치른다. 결혼식 날 신랑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신부 집으로 가서 대반의 영접을 받고 큰 상을 받는다. 연후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도시의 결혼식은 농촌과 많은 차이가 있다. 결혼식을 치르는 순서는 같으나 호텔이나 예식장에서 치러지고 한복을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사회자와 연예인이 초청되고 사회자가 모든 의식을 진행한다. 그러나 결혼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현재 연길의 경우 신랑 측에서 아파트를 사주고 신부 측에서 자가용을 사주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빈부의 격차가 결혼식에서 나타나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에서 더욱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은 개혁개방 이후 특히는 중한수교이후 연해도시진출, 코리아 드라마와 위장결혼 등으로 많은 조선족 젊은 여성들이 한국으로, 중국의 연해도시로 떠나갔기 때문에 농촌의 대부분 조선족 총각들과 도시의 일부 조선족총각들이 장가를 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였다. 1995년 전후 북한경제의 추락과 자연재해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에 부딪친 북한주민들이 탈북 하여 중국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농촌마을에 들어왔다. 그들 중 대부분의 여자들은 농촌의 조선족 총각과 혼인하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들이 외교공관에 진입하거나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자 중국당국의 삼엄한 조사와 탈북자박송 등으로 인해 남아 있는 아이들은 부모 없이 조부모의 손에서 길러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중국에서는 정식으로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외에는 호적에 올릴 수 없고, 탈북자는 중국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족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무적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현재 일부 조선족 자선단체나 교아원에서 교아가 된 극소수의 탈북자 자녀들을 수용하고 호적을 올려주고 있지만 대부분 탈북자 자녀들은 여전히 무적자로 되고 있다.

㉢ 회갑: 회갑을 맞게 되면 하루 전에 일가친척이 모여들어 음식을 준비하고 자식들은 새 옷을 준비한다. 큰 상을 받을 때 회갑을 맞은 노인 부부가 중앙에 앉고 사돈과 집안어른, 그리고 마을의 어른들과 친구들이 상 앞에 같이 앉는다. 그리고 자식들과 친척, 친구들이 차례로 술을 부어 올리고 절을 한다. 현재 도시의 경우 회갑을 받는 어른과 자식들은 모두 한복을 입고 호텔이나 예식장에서 회갑잔치를 행하고 있으며 농촌의 경우에도 당지의 식당에서 회갑잔치를 행하고 있다.

㉣ 장례: 사망자가 생기면 집안의 어른들이 와서 집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3일장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사망되면 한국과는 달리 병원이나 집에서 직접 납골당에 가져가서 냉동하기에 3일장을 하는 경우가 드물며 이튿날 즉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혹시 자식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3일장을 진행하곤 한다. 일부 마을에서 꽃상여를 준비하여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노인들만 시는 농촌에서 이런 풍기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돈이 있는 집에서는 능원의 묘지를 임대하여 납골함을 묻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골당에 납골함을 두고 청명이나 추석에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일부는 골회를 수장하거나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2) 세시풍속

현재 조선족은 한반도의 각 지역에서 집단이주로 마을을 형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주 당시부터 각 지역별로 많은 세시풍속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을 거치는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은 대부분 사라지고 조선반도의 복합적인 요소와 한족의 관습 등이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회주의적인 명절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서양의 명절까지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중한 수교이후 한국에 다녀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마을에서 옛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종래의 풍습과 어울려 또 혼합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전통적인 명절: 조선족의 전통적인 명절은 신정과 구정, 대보름, 단오, 추석 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한족들도 같이 명절을 보내기에 큰 차이가 없으며 단지 민속적인 행사와 절차만이 다를 뿐이다.

㉠ 조선족의 명절:

㉠ 노인절: 광복 후 조선족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토지를 분배받고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 조선족은 문화대혁명 이래 침체되어 가는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조선족사회의 전통적 미덕인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하여 일제가 항복한 날인 8월 15일을 택하여 노인절로 결정하였다.

㉡ 자치주 창립 기념일: 1952년 9월 3일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탄생하였고 이것을 기념하여 9.3절이라고 하는 조선족의 큰 명절이 되었다. 9.3절에는 주정부의 주도로 경축행사를 치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주민들은 유원지나 공원 등으로 소풍을 가거나 민속놀이를 즐긴다.

㉡ 국가 명절:

㉠ 3.8 부녀절: 3.8부녀절은 가사일과 육아, 농사일에 전념하는 여인들에게 휴식과 오락을 통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한해의 삶을 준비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현재 연길의 경우 해마다 3.8절이 돌아오면 모든 식당과 노래방이 전부 초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3월 한 달을 전부 3.8절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즉 3.8절을 맞이하고 축하하고 보내는 3단계 절차를 행하고 있다. 현재 연길의 경우 3.8부녀절은 음력설과 크리스마스를 초과하여 조선족의 가장 주요한 명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5.1국제노동절: 9일 연휴시기에는 관광고봉기로 인지도가 높았지만 9일 연휴를 취소한 현재 사람들은 이 날을 단지 집안청소를 하는 날로 인정하고 있다.

㉢ 어린이절: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를 한 명밖에 낳지 않는 조선족의 현실에서 자식에 대한 사랑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6월 1일 어린이절이 되면 새 옷으로 단장한 어린이들이 온 가족과 함께 공원이나 유원지에서 마음껏 뛰놀고 놀이터에는 장사진이 펼쳐지고 있고 식당 등은 아예 발 디딜 틈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재 도시에만 존재 할 뿐 어린이가 없는 조선족농촌마을에서는 근절되고 있다.

㉣ 국경절: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그것을 기념하여 국경절을 제정하였다.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실정을 감안하면 전후의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하면 9일간의 연휴가 된다. 이는 중국 국내외의 관광 붐을 일으켰고 한국을 찾는 중국관광객들이 해마다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여 한국 관광업계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㉔ 서양 명절: 서양명절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있는 명절은 크리스마스와 발렌타인(연인절)이다.

3) 의생활문화

개혁개방이전까지 조선족의 의생활문화는 당시의 정치적 영향을 받아 검소한 것을 제창하였다. 남자들은 대개 회색, 남색, 검은색 중산복과 인민복을 선호하였기에 외신은 "남색개미"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여자들은 한복을 입었지만 문화대혁명 후에는 제복으로 바꾸게 되었는바 50년대에는 노동복, 문화대혁명시기에는 군복이 젊은 청년들에게서 많이 유행하였다. 개혁개방이후 경제와 의류산업을 발전시켜 의생활의 다양성을 가져오게 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에 힘입어 도시나 농촌에서 최신 유행의 옷차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현재 연길의 경우 패션유행은 전라북도 전주시보다 반나절이 더 빠르다고 할 정도이다.

4) 식생활문화

조선족의 식생활은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음식문화가 골격을 이루면서 조리방법은 중국의 영향이 컸다. 그 이유는 그들이 출신 지역별로 모여 논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것과 한족들과 이웃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고기, 냉면, 불고기, 김치, 된장, 순대, 찌개, 떡 등 우리 민족이 즐기는 음식이 한국과 같은 반면, 기름기가 있는 볶음 채를 즐기고 물만두, 꼬치구이를 즐겨 먹는 등 습관은 한족이나 기타 민족에게서 본 받은 것이다. 조선족은 특히 개고기를 즐겨 먹는데 연길의 경우 한 해에 개 소비량이 무려 35만 마리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5) 주거문화

주거문화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필수적인 기본 토대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기증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그 중에서도 서민들의 살림집인 민가의 주거문화는 그 시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보물고이다. 19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서민들의 주거를 살펴보면 통 칸 형과 분 칸 형의 형태로 대부분 1-2칸으로 되어 있었다. 즉 대개 5-10평 크기의 집에서 주거하였으며 몇 세대가 비좁은 집에서 생활하였다. 농촌의 주거는 대부분 초가집이었고 도시의 주거는 초가집이거나 벽돌집이었다. 본 세기에 진입하면서 정부에서 새마을운동을 주도하면서 초가집을 허물고 벽돌집을 지어주고 있어 농촌의 조선족들은 현재 거의 전부 면적이 20-30평 크기의 벽돌집에 주거하고 수도물을 마시고 있다. 도시주민들의 주거면적도 크게 늘어나 30평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선호를 받고 있다.

6) 언어의 변화

광복 전에는 조선과 중국의 조선인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는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조선족의 언어는 한어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한국이나 북한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한국의 언어에는 영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조선족언어는 대량의 한어 어휘가 지역과 음식 형식으로 섞여 사용되었다. 그래서 한국이나 북한 사람들은 읽은 줄은 알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단어가 많고 한어 역시 한국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어 한어로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언어의 속성상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것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가 많이 혼용되었으며, 매스컴이 급진적으로 발달한 지금은 사투리가 줄어들고 영어의 혼용이 늘어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조선족 역시 중한수교 이전에는 북한의 표준어인 평양 언어를 기준으로 삼았고 한어가 많이 혼용되어 있었다. 그래서 한국인과 조선족은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족이 급증하고 한국TV위성시청이 보편화됨에 따라 한국 언어의 영향이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7) 신앙생활

개혁개방 이전에는 모든 민간신앙과 종교생활을 "미신, 봉건사상, 낡은 사상"으로 매도하고 부정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는 중한수교 이후 종교 신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신자들은 교회당과 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 조선족마을과 도시에는 교회당이 있어 신자들은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보고 있으며 노인들과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로 주축을 이루고 있다.

8) 경제생활

개혁개방과 중한수교는 조선족에게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기회가 되었다. 현재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이나 해외에서 경제적 재부를 창조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정수를 배우고 있다. 조선족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데는 중국개혁개방정책의 혜택도 있지만 중한수교이후 한국과의 경제, 문화교류 가운데서 얻은 실제이익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여 일하고 있는 조선족은 50만 명에 달한다. 연변의 경우 매년 한국에서 송금해 오는 돈은 1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가정을 희생하고 어렵게 번 돈을 미래지향적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집안장식이나 도박, 사치나 유흥에 탕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다.

9) 친척관계

개혁개방 이전 조선족의 친척관계를 살펴보면 2대 혹은 3대가 한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친척관계도 비교적 화목하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연해도시진출과 코리안 드림으로 인해 많은 조선족이 농촌을 떠난 결과 민족공동체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친척관계도 금전에 좌우되는 경향이 보편적이다. 현재 2대, 3대가 한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늙으면 경로원에 가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핵 가정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친척들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 가서 일하기에 몇 년에 한번 정도 만나는 형편이고, 부모 자식들은 근근이 전화통화로 그리움을 전하고 있다. 비록 음력설이나 어른 생일 같은 행사에 친척들이 모이지만, 노인들과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분위기가 스산하기 그지없다.

3. 민족공동성의 생활문화

개혁개방 이전의 조선족은 폐쇄된 지역공동체 속에서 민족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중한수교 이후 대량적인 한국진출은 조선족들이 자아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되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민족의 동질성을 느끼는 한편 이념 및 문화 차이로 점차 국민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한족 등 기타 민족들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과 건설에 기여한 중국 소수민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한편 한반도의 한민족과는 다른 이중의 정체성을 지닌 해외동포로 문화의 뿌리를 고국에 둔 한겨레임을 인지하게 되며 이중 언어의 우세를 이용해 중한 경제발전과 민족공동성의 생활문화에 중개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민족 언어의 상실은 민족정체성을 잃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었다.

민족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공동언어의 사용이고 언어의 공용이 중요한 민족특성이라는 점에서, 민족 언어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국민이자 한민족이라는 이중정체성을 지닌 조선족에게 있어 한국과의 연대는 삶의 영역을 확장하고 민족공통의 생활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데 불가결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4. 나오는 말

개혁개방 특히는 중한수교 이후 흩어져버린 조선족사회가 하나의 민족사회로 생존하려면 계속 조선족의 민족적정체성과 전통적가치관을 유지해가야 한다. 중국에서 국적과 공민권, 참정권, 토지소유권을 취득했고 주류사회에 진입한 조선족으로서는 그 어떤 이론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조선족인구의 급격한 감소, 민족문화영토의 상실, 민족교육체계의 붕괴 등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재일동포 생활문화와 민족공동 생활문화

김봉양*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소감

이번에 통일인문학연구단이 실시한[재일조선인에 관한 설문조사]집계결과 중, 생활문화에 관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아주 흥미스러웠다. 제 감각으로서는 집계결과가 현실을 잘 반영했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상상하는 부분도 있다. 후자의 예로서는[한복을 입는다면 언제 입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입지 않는다]가50%미만이라는 점이나[일본에서 민족교육(학교, 강습회, 씨클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있다]라는 답변이68.5%이나 있다는 점이다. 재일동포들에게서 회답을 회수할 때 가급적 다양한 사람들이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인연이나 코리아계 행사를 활용해서 수집했으나 회답자는 적어도 평상 재일동포와 관계가 있거나 코리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며 자기 출신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재일동포들이나 한국과 연결이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근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족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꼭 받아야 한다.] “기회가 있다면 받아야 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총85%를 넘었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수긍될 수 있다. 아무리 자신이 코리아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자기 출신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재일동포가 젊은 세대에서도 많은 것은 제 경험적인 지식이다.

■재일동포의 생활문화

재일동포의 생활문화가 어떤 현황인지 이것은 당연히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다. 일상적인 생활문화 속에 민족적인 요소를 찾으려면 식문화에서 발견하는 것은 쉽다. 가령 이번 설문조사 중에 [가정 식탁에 김치는 나왔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면 아마 거의 모두가 Yes라고 대답했을 거라고 상상한다. 한편 앞으로는 그것을 재일동포의 생활이라고 부르기가 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 왜냐면 김치는 일본의 식탁에 나오는 것도 보통 일이 되었다고 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잡채]나[삼겹살]이 그대로 방송에서 사용되는 등 한식문화의 정착수준이 특히 이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재일동포가정에 특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더더욱 적어질 것이다.

그 외에 가족·친척 호칭에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경향도 거론할 수 있다. 할아버지(할배), 할머니(한매)를 비롯 삼촌, 고모 등 친척에 대해 사용될 경우가 많다 (반대로 양친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 고 느껴진다. 다만 이 경향도 세대가 내려갈 수록 약해지는 것은 확실하다.

전반적으로 현재에 있어 생활문화 속에 민족적 요소를 질게 가지는 사람은 본인 아니면 가족(특히 양친, 조부모)이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즉 자기 출신에 대한 인식=정체성과 불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가꾸어지거나 별 생각도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냥 그것에 가까운 경우가 있다면 동네문화로서 민족적 요소가[머조리티]가 되었던 재일동포 밀집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례다. 다만 그런 밀집지역은 더더욱 작아지고 있다. 반대로 한국(서울)이 그대로 이설된 느낌인 도쿄 오쿠보 같이 이 약 20년 사이에 일본에 온 한국인 이른바 뉴커머 코리아인이 새로운 생활문화거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까지 민족적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 주목했으나 실제로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일본인 가정과

* 코리아NGO센터 도쿄사무국장

별로 다르지 않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어른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인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당연히 일본인들과 만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그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나 예의는 역시[일본적 문화]가 된다.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하고 학교나 지역사회를 통해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과 [재일은 일본에 동화되었다, 일본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과 이퀄이 아니다. 적어도 그렇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재일동포는 아주 많다. 이 사실을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재일동포로서 매우 궁금하다.

■재일동포사회가 가지는 특징

원래[재일동포]라는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라는 문의가 재일동포문제를 생각할 때 꼭 나온다. 지금 일본에서 생활하는 동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본 법무부가 발표한 외국인등록자통계에 따르면 2010년말 한국·조선적자 수는 56만5989명, 그 중 식민지배기에 일본에 온 사람 및 그의 자손, 이른바 올드커머가 가지는 재류자격인 [특별영주]가39만5234명, 일반[영주]가 5만8082명이다. 일반영주에는 올드커머도 뉴커머도 포함되어 있으나 가령 전원이 올드커머라고 가정한 경우도 추수에서 특별영주·영주자 수는 제외한 약 11만명 정도는 적어도 뉴커머이다.

이 국적 및 재류자격통계에서 올드커머가 감소하는 반면에 뉴커머가 증가하는 경향이 계속되어 있는 것이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까지나 한국·조선적을 소유하는 자에게 한정할 얘기다. 한국·조선적자 중 일본국적으로 변경하는 자는 1952년부터2010년까지 누계32만명을 넘는다. 국적 변경 후에 태어난 2세, 3세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아진다.

또 일본의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1985년 이후 이른바 더블 아이들은 출생 후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소유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에서 거의 세어내지 않는다. 즉[조선반도에 뿌리를 가지는 자]라는 정의로 재일동포를 생각한다면 그 수는 100만명~200만명이 된다고 흔히 말한다. 더군다나 재일 중국조선적이5~7만명 정도 있는 것도 조금씩 주목을 받는다.

즉 일본에 거주하는 코리안의 구성이 바로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현황은[재일코리안] 등 단어를 사용할 때 어디까지 그 범위 내에 넣는지 명시할 필요성을 보다 높이고 있다.

재일동포사회의 변화를 가리킨 용어로서 [다양화]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그러나 1990년대는 아직 [재일]이라고 했을 때 먼저 한국·조선적을 소유한 올드커머를 가리킨 것으로 이해되었다. 지금도 [재일]이라면 한국·조선적을 가지는 올드커머가 맨 먼저 연상되는 경향은 변하지 않았으나 그것에 여러가지 주석을 붙이는 것 ~뉴커머를 포함하는지 일본국적자를 포함하는지 일본인과 코리안의 더블 [쿠워드더블](=조부모 4명 중 누구 한명이 코리안이라는 자)를 포함하는지 등~이 늘어나고 있다.

재일동포 구성에 있어서 다양화했다는 사실의 지적은 벌써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다양화의 내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교육이나 복지, 권리보장이란 사회생활 각 방면에서 “공통성”과 “차이”를 적당하게 판단하는 것~특히 재일동포사회에서 “마이노리티”가 될 존재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정리된 공통인식도 유익한 경험축적도 아직 전혀 부족하다. 재일동포사회 자체가 [다문화주의]적 사회가 될 수 있을지 시험을 받고 있다고 나는 느낀다.

■ 다른 재외동포사회와의 비교

원래 재외동포사회 자체가 일체화된 것으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생활문화 측면에서 다른 재외동포사회와 비교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힌 것은 한층 더 어려운 작업이다. 이자리에 동석하는 중국동포와 러시아동포에 대해 많은 재일동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 영성하게 말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다.

먼저 재일동포의 대부분은 다른 재외동포(사회)의 존재나 특징에 대해 모른다는 자성해야 할 현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수 적은 관심을 가지는 층은 중국 조선족은 조선족자치구를 비롯하여 각종 제도적 보장이 일본과 비해 아주 잘 되어 있고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잘 유지되어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강제이주를 당했고 제도적으로도 민족성 함양이 아주 억제된 속에서 조선민족으로서 살아가는 점에서 시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인상이 있다. 생활문화에 대해서는 중국동포는 전술한 대로 일본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고 도쿄에서는 조선족 음식점도 증가하는 상황 등을 통해 식문화를 비롯 여러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나 러시아 동포에 대해서는 그런 경로가 거의 없고 생활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거주국가간의 관계성의 강도(일-중 관계, 일-러 관계)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민족공통의 생활문화], 재일동포로서의 정체성

이번의 주제 중 또 한 가지를 구성하는 [민족공통의 생활문화] 말이지만 그 표현이 뻗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으나 반대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다. 나도 후자의 부분이 있다. 그것은 [공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불안이라 할 수도 있다. 같은 민족이오니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탐구하려면 만약 결과에 차이점이 크게 나와 그것이 판명했을 경우(실제로 차이도 크다는 것이다)[같은 민족]이라고 대응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이 상기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 한국, 북한, 각 재외동포 사회가 각자 소유하는 생활문화를 총합해서 [민족공통의 생활문화]라고 주장해 봐도 그것은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불안하다. 어디까지나 해도 본국에서 보고 재외동포사회는 소규모이고 머조리티와 마이노리티의 관계성은 변하지 않는다.[민족공통]이라 할 경우 그 주축이 될 것은 [본국], 이번에는 한국이 될 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본국의 진정한 문화]가 표준치가 돼 버리고 그에 대해 각 재외동포사회가 소유하는 문화가 심사 받다는 관계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한다.

반대로 한국의 사람들이 재일동포를 [일본인과 같다]고 삼는 것에 저항감이 있는 재일동포도 아직 많이 있다. 확실히 생활문화와 사고방식에 있어 일본인과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재일동포는 아주 많이 있다(아마 나도 그렇다). 그런 객관적인 측면이 있으면서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부정 받고 싶지 않는 셈이다. 이 심성은 일본사회가 전쟁 후 일관해서 재일동포를 [이질적인 자]로서 폐쇄해 왔던 역사가 크게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 자신도 주관과 객관의 차이에 대해 고민하고 상기 같은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으나 이것도 나의 연령세대에 강하게 나타난 경향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최근에는 한국에 유학 갔다 온 재일동포도 많고 거기서 [민족적인 것] (언어, 일상생활의 습관) 등을 취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일본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인연이 약하고 가 보지도 못한 재일동포보다 훨씬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생활문화가 한국에 가깝다는 일본사람도 적지 않다. 그런 일본인의 존재를 앞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민족적이냐 일본적이냐의 이분법으로 함부러 판단 받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심정이 있다.

즉 자기자신의 존재정의는 자기가 결정하고 싶다, 정체성은 자기결정권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또 재일동포의 생활문화를 (한국+일본) ÷2라는 형식으로 바라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위화감이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생활문화라는 바탕 위에 재일동포의 생활문화가 성립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그것을 두개 문화가 혼합한 아류로 보지 말고 재일동포 독특한 고유 생활문화이라는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고기집 등 재일동포의 생활문화도 존재한다. 각 사회가 가지는 고유성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문화의 개념으로서 [민족공통의 생활문화]를 내세울 수 있었으면 한다.

■ 설문조사활동을 하고나서

일본에서 설문조사회답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회답협력자들에게서 질문내용에 대해 엄한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것을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분석하면 [조국은 어디냐] [한국/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동북아시아 국가 중 좋아하는 나라는? 싫어하는 나라는?] 등 나라·국가에 대한 인식·평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는 점, 그런 내용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나오는 것에 대한 위화감이 아닐까 싶다.

[일본과 운동경기를 할 때면, 한국이든 북조선이든 반드시 이기기를 바란다.]라는 설문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이 전형적이다. 재일동포가 어느쪽을 응원하는지라는 질문은 궁금할 것이고 나도 다른 출신. 국적을 소유하는 자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일동포들은 일본에서 살면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받고 있다. 그 때 후미에(踏繪) (일본의 에도 시대에 기독교를 엄금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및 성모 마리아 등의 상을 새긴 목판/동판 등을 밟게 하여 신자가 아님을 증명하게 하던 일) 를 당한 느낌이다. 일본과 한국의 어느쪽에 설 생각이냐? 라는 종류의 질문은 지겹다, 라는 셈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자체는 물론 유익하지만 왜 이런 질문이 있는지 그 전에 취지설명이 좀 더 세심하게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재일동포는 식민지배기부터 이어지는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의 일그러진 그 중심부에 놓여 왔고 한편에 국가는 틀에서는 항상 주변에 놓여 왔기 때문에 특히 국가, 국민이라는 존재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도 재일동포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도 고려해서 조사활동 준비하는 것을 바란다.

고려인의 생활문화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

들어가는 말

현재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의 생활 풍습이 다 같지는 않지만 내가 살았던 중앙아시아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고려인들 생활 깊이 배여 있는 생활 풍습을 통해 한국인들의 삶이 그들의 삶 안에 깊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대부분 북방지역에서 생활이 어려워 고향을 떠난 사람들로 대부분 함경북도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른들 중에는 아직도 한국어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인들이 처음에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서 정착 할 당시 러시아 사람들이 고려인들의 생활을 보면서 좋은 조건들을 많이 제시했다. 그 당시 고려인들은 농사도 잘 짓고 부지런했기 때문이다. 하여 땅을 많이 주고, 세금도 감면해 주고 돈도 지원해 주었다. 그 당시 알렉산드르 2세는 다음과 같은 법을 고려인들을 위해 만들었다. 100헥타아르의 땅을 한가족이 가질수 있고 20년 동안 세금 없이 공짜로 그 땅을 쓸수있고, 10년 동안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조건은 러시아 국교인 성당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러시아 정부에서는 고려인 아이들을 위해 많은 학교를 열기도 했다. 신문잡지도 한국말로 나왔고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곳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스탈린 정부인 민족주의가 시작되면서 고려인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없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잃게 되었다. 그 시기는 1937년에 고려인들을 위한 학교가 시작되었고 그 후 3-4년 후에 학교가 폐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러시아 정부가 정치적으로 소수민족들의 자녀들의 언어에 억양이나 사투리가 포함되면 대학진학 등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러시아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자녀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후세들은 한국어를 잊게 되는 현실이 된 것이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한국어가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 후 1990년에 민족주의 사건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하게 된다. 그때 당시 연해주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모두 서울 말씨 즉 표준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당시 고려인들은 서울 말씨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표준말이 아님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사용이 줄어들면서 고려인들에게 한국어가 잊혀지게 되었다.

음식

고려인들의 음식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처음 1863년도 중앙 아시아로 이주 했을 때는 음식에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연해주로 오면서 그 당시 연해주에 살고 있는 많은 중국인들의 영향으로 음식이 섞이면서 새로운 음식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즉 새로운 음식 문화가 생기게 되는 시기이다. 그

리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을 당시에는 고려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을 많이 만나면서 소수민족들의 음식과 섞이게 되고 또 새로운 음식 문화가 만들어 진다. 그러나 고려인들의 음식에는

*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부회장, 러시아

간장과 된장은 중요한 음식중의 하나이고 빵을 먹으면서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꼭 밥을 먹는 생활을 했다 . 그 당시 고려인들에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집에 가면 예를 들어 식사시간이 1시 라면 그 전에 음식들이 다 만들어져도 캐종시계가 1시를 알리는 종을 치고 할아버지가 음식을 차려라 라는 말씀이 있어야 가족들이 상을 차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 그리고 어머니가 혹시 장례식에 다녀오게 되면 그 날에는 간장과 된장을 담그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 그날 장을 담그면 장맛이 없다고 고려인들은 믿고 있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한국에서는 누룽지를 아주 귀한 건강식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누룽지를 가마치라고 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워 누룽지가 많이 생기면 며느리에게 벌을 주는 의미로 누룽지를 다 먹게 했다 . 그리고 다시 밥을 해서 다른 식구들이 먹었다 . 만약에 며느리가 밥을 할 때 가마치를 만들지 않고 밥을 하면 알뜰하게 살림을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다 .

고려인들이 러시아에서 오랜 세월 살면서 러시아 음식과 합쳐지고 새로운 음식들이 생겨났지만 지금도 고려인들은 야채를 더 많이 먹고 러시아인들은 고기와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단것들을 즐겨 먹는다 .

결혼식

고려인들에게 결혼식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옛날에는 신랑 신부를 자기들이 맘대로 고를 수 없고 부모들이 정해주는 사람들과 결혼식을 하였다 . 하여 결혼식 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서로 사랑하면 결혼을 한다. 그러나 지금도 서로 사귀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본을 꼭 물어 봤다 .만약에 본이 같으면 절대로 결혼을 할 수 없었다. 지금도 철저히 지키는 편이나 임신을 했거나 특수 상황이 있을 때만 결혼을 허락한다.

결혼식은 다음과 같다

결혼을 한다고 하면 먼저 혼세말(허락)을 받으러 신랑이 신부 집에 먼저 간다. 신부 집에서 부모님들과 결혼 날자를 정하고 청치를 할 것인지를 정한다. 청치는 결혼식 며칠 전에 음식을 만들어서 만든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 신부집으로 가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반 잔치라고도 했다 .그리고 청치를 받은 신부는 결혼식 후 바로 다음날 음식을 준비하고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가지고 신랑 집을 가야 한다 이를 세밀이라고 했다 즉 청치를 받으면 세밀을 꼭 해야 하는 것이다. 서로 형편이 좋지 않으면 생략할 수도 있고 청치만 하고 결혼식은 그 후에 하는 경우도 있다 .

요즘은 서로 돈이 많이 드니까 레스토랑에서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결혼식날이 되면 신랑은 부모님들에게 절을 하고 술잔을 올리고 신부를 데리러 가겠다고 말하고 신부 집으로 가는데 우시꾼들과 함께 간다. 이 우시꾼들은 신랑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하여 우시꾼들을 택 할때는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뽑는다. 그리고 우시꾼들 중에는 이혼을 한 사람은 자격이 없고 우시꾼들의 숫자는 반드시 홀수로 가야 한다.

우시꾼들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신부 부모님은 나와서 우시꾼들과 신랑을 맞이 한다 . 신랑과 우시꾼들은 신부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된다 . 음식을 먹은 후 이번에는 신부 집에서 신부와 우시꾼들이 신랑 집으로 간다. 우시꾼들은 5명이나 7명 정도가 일반적이다 . 이때는 신랑 집에서 온 우시꾼들이 신부 집에서 준비한 예단을 가지고 가는데 그 예단을 가지고 가기 해서 신랑 어머니가 미리 준비하여 보낸 보자기에 예단을 싸가지고 가게 되는데 이 예단을 싹때 신랑 집안의 우시꾼들이 싸야 한다. 그리고 우시꾼들이 예단을 들고 나갈 때는 예단이 절대로 땅에 닿아서는 안되고 만약에 우시꾼이 이불 보파리를 들고나아가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 보파리를 다른 우시꾼들에게 주어서도 안 된다 . 고려인들은 우시꾼들이 이 규정을 어기면 신랑신부가 잘살지 못한다고 믿었다 . 그리고 신부가 준비한 예단 중에는 반드시

시 거울이 있었다 . 그리고 거울의 크기에 맞춰 만들어진 보자기에 거울은 따로 썬다 . 그리고 신랑 집에 도착할 때 바로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차가 서면 신랑 집에서 신랑 부모들과 친척들이 춤을 추면서 나와 신부를 맞이해야 한다 . 이때 춤을 추는 의미는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다 . 그리고 신랑 집에 도착하면 신랑 집에서 쌀 한포를 준비하여 신부 발 앞에 놓아 그 쌀을 신부가 밟고 지나가게 한다 . 그리고 신부가 준비한 거울을 신랑 어머니에게 주면 어머니가 신부를 안고 둘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 화목하게 잘 살자라고 말을 한 후 신랑 집으로 들어간다 . 이때 둘 이외에 누구도 거울을 봐서는 안된다 .

신랑 집으로 들어가면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양쪽 우시꾼들과 인사를 나누게 된다 . 그 후 신랑과 신부는 양쪽 우시꾼들과 나와서 차를 타고 그 시내를 돌면서 사진을 찍고 구경을 하게 된다 . 이때 러시아에서는 시내도로 자동차 규정속도가 40키로인데 결혼 차량만은 70-80키로로 달릴 수 있고 결혼차량들은 크랙션을 울리면서 시내를 달린다 . 그러면 지나가는 차량도 크랙션을 울리며 축하를 해 주기도 한다 .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에 결혼식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녀도 이날 만든 경찰이 차량을 잡지 않는 풍습이 있다 . 결혼식 날은 주위의 모든 것들이 축하를 해주는 것이다 .

그리고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잔치를 할 때 먼저 부모님들이 춤을 추면서 나와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축복을 해주면 신랑신부는 그분들에게 술을 따라주는데 친척들도 같은 순서로 춤을 추면서 나와 축하를 해 준다 . 이때 신랑 신부 상 위에는 꼭 닭 2마리를 준비 한다 . 그리고 두 마리 닭은 청색과 홍색 실로 감는다 그 의미는 오래 잘 살리는 의미이다 . 그리고 닭 입에는 고추를 물리는데 그 의미는 오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상징한다 . 닭은 신랑.신부 양쪽에서 한 마리씩 준비하고 식후에는 서로 가져온 닭은 바꾸어서 가져 간다 . 그리고 결혼식 다음날 신부는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아침을 준비해 가족들과 친척들을 대접한다 . 이때 누구도 도와 주어서는 안 되는 풍습이 있다 .

고려인들은 지금 3-4대를 거치면서 언어를 잊어 한국말을 하지 못해도 그리고 젊은 세대는 결혼식의 의미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주 중요한 풍습으로 여기고 반드시 지키고 있다 . 그리고 고려인들과 러시아인들의 차이중의 하나는 러시아인들에게는 여자가 남자보다 옷을 잘 입어야 한다 .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남자가 능력이 없다고 말 한다 . 그러나 고려인들은 그 반대이다 만약에 여자가 남자보다도 옷을 잘입으면 여자가 사치스럽고 살림을 잘하지 않는다고 말 한다 .

돌 잔치

고려인들은 백일은 차리지 않고 돌잔치만 한다 . 1980년 까지 만 해도 돌 잔치를 집에서 했다 . 그 이후에는 아침에는 집에서 친척들만 초대하여 하고

저녁에 레스토랑으로 가서 했다 . 이때부터 레스토랑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 돌상은 찰떡 3그릇, 콩 한그릇, 쌀 한그릇, 책한권,연필,가위,실,돈을 놓고 돌잡이를 세우고 그때 친척들은 상위에다 돈을 놓는다 . 그리고 돌잡이가 무엇을 먼저 잡는지 보았다 . 그 다음에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잔치를 했다 .

환갑

고려인들은 사람은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것처럼 인생에는 3번의 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돌잔치, 결혼식, 환갑 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 고려인들의 환갑은 60세가 되는 해에 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람은 환갑상을 받을 수 없었다 . 자식이 없거나 결혼식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었다 . 그 외의 특별한 이유 없이 환갑상을 받지 않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비판을 했다 . 그러므로 자식들의 삶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반드시 부모님들에게 환갑상을 해 드려야 했다 . 옛날에는 집에서 했으나 지금은 식당에서 하게 된다 .

환갑상을 받는 순서는 먼저 환갑의 주인공이 들어오고 만일 동갑들이 있으면 동갑들이 들어와 옆에 앉는다 . 이때 홀수로 들어와 옆에 앉아야한다 . 동갑들이 있을때 환갑상 앞에 동갑들의 숫자 만큼의 선물을 준

비해 둔다 그리고 사회자가 동갑들의 이름을 부르면 환갑자가 그 동갑자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준다. 그 후에 사회자가 큰 아들을 부르고 그외 자식들을 부르면 나가서 부모님들에게 술을 드린다. 아들이 다하고 난 후에 딸들이 나가게 된다. 술잔을 드리고 절을 한번씩 하게 된다.

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갑상 앞에 카펫트를 깔아 놓는다. 그러나 만약에 부부가 동갑일 경우에 아버지께 먼저 절을 드리고 어머니와 자리를 바꾼 후 절을 드리게 된다. 자식들과 친척들이 절을 드린 후 사회자가 환갑을 맞은 사람의 이력서 즉 그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축하연을 한후 거의 끝날 때 동갑자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환갑식이 끝난다.

장례식

고려인들의 장례 문화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다. 먼저 사람이 죽으면 큰아들이나 손자 등 그 집안의 장손이 죽은 사람의 옷을 들고 밖에 나가서 옷을 흔들면서 하늘을 보고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시신이 모셔진 방에 흰천으로 관을 막고 보이지 않게 한다. 시신을 관에 놓기전에 널위에 시신을 하루동안 모셔 놓았다가 하루가 지나면 관에 시신을 모시게 된다. 그리고 고려인들은 60세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났을때를 준비하는 이부자리를 만든다. 그 이부자리를 만들때 케메는 실에 매듭을 절대하면 안된다. 만약에 매듭을 하면 다른 세상에서 고생하고 편안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만들어진 이부자리를 관에 놓고 그 위에 시신을 모시고 이불을 덮어 드린다. 사람들은 시신에게 3번 절을 한다. 그리고 돌아가신지 3일 후에 장례식을 하게 된다. 그런데 관이 집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제사상을 크게 차리는데 결혼상이나 환갑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제사상을 받지 못한다. 만약에 결혼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결혼상을 차려 시신앞에 드리고 다시 치운 후 제사상을 올리게 된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화장보다는 매장을 많이 한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기도 한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죽은 후 첫번째 상을 올린 후 3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크게 제사를 지내고 친지들을 불러 크게 제사를 식당에서 지내야 한다. 3년 제사 이후에는 1년에 3번 산소에 간다. 한식, 단오, 추석이다. 이때 어른들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 밥을 먹는 것과 같이 1년에 3번 밥을 해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하고, 한식, 단오, 추서에 산소에 갔다. 요즘은 단오를 빼고 한식과 추서에 반드시 간다.

단오와 추서에 산소에 갈 때 3가지 음식을 차린다. 음식은 과일 3종류, 고기종류 3개, 통닭을 삶아서 한 마리, 찹쌀떡을 기름에 부치고 야채3가지를 준비 해 가지고 간다. 무덤에 가면 먼저 제사를 시작할때 동쪽에 작은 상을 만들어 놓고 큰아들이 대표로 절을 한 후 술잔을 3번 돌린 후 다시 산소 앞에서 큰상을 차리고 큰 아들을 시작으로 아들이 먼저하고 딸이 마지막으로 절을 3번하고 수를 드린다. 그때 밥을하고 물에 밥을 한순가락 떠서 물에 놓는다. 그리고 술잔을 올릴때 술잔을 3번 돌린 후 절을 한다. 제사 후 신문으로 봉투를 만들어 음식을 골고루 한가지씩 담고 그것을 무덤 앞에 놓는다. 결국 그 음식은 거지들이 다 가져간다. 그 후 가족들이 음식을 먹고 돌아오기 전에 꼭 절을하고 잘계시라고 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을 한 후 돌아 온다.

마무리

러시아에서 다른 소수민족들이 고려인들을 보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왜 꼭 이런 전통을 잡고있는가라고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키고있는가 묻는다. 어떤 의미로는 그 질문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었다. 나라는 언제나 없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역사는 계속 살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는 깎질이고 역사는 그 나라의 혼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무엇이 우리를 한국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한국사람으로 살게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 음식,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고

려인들이 한국사람으로 느끼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혼인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 한다. 고려인들이 한국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풍습을 지키고 행할 때 까지. 그때까지만 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이것은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강조해서 하셨던 말씀이다 .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와 민족공통의 생활문화

한정미*

1. 들어가는 말

-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산과 문화유통의 방향성

어떤 집단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는 그 집단만의 특색을 토대로 하여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외부로부터의 유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있다. 그런가 하면, 자생 문화와 유입 문화가 서로 유기적으로 섞여서 또 다른 문화를 재생산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도 이와 다르지 않다.

태어나서 살던 북한의 문화, 이주하여 살던 제3국의 문화, 현재 살고 있는 남한의 문화가 서로 복잡하게 섞여서 특유의 또 다른 제3의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계속 살고 있는 현재의 북한 주민들과는 또 다른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가야 할 부분이 있다. 문화 유통의 방향성(보급 경로)이다.

20세기 초 트로트가 처음 유입되었을 때 트로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향유했던 집단은 지식인이나 경제력을 갖춘 도시인들이었다. 일본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던 유학생이나 유성기를 소장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은 조선에 남겨진 사람들이나 시골의 빈농보다는 트로트를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에 마치 트로트는 세련된 감각의 소유자들이 누리는 노래인 것처럼 향유되었다. 배운 자가진 자들이 향유하는, 그래서 지금의 트로트 위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련된 문화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면 그 것을 향유하는 집단은 소위 지식인이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혹은 도시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향유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건이 다소 불리한 다른 집단으로 옮겨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일본에서 유입된 노래방도 이와 같은 보급 혹은 유통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처음 유입되었을 때 지리적으로 가까운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1993~4년에는 강원도 시골의 한적한 면소재지에도 노래방이 한 두 개씩은 꼭 있었던 기억이 난다.

물론 21세기의 문화 유통의 방향성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의 SNS 시대에는 이와 같은 문화 유통의 방향으로 우리의 문화를 논할 수는 없다. 유입 방법이 달라졌고, 유통 방법에 있어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이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듯한 문화 생산과 문화 유통의 방향성을 거론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와 문화의 유통은 우리의 20세기의 문화와 흡사한 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문화

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을 비교적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여건에 있다. 하나원에서 근무하면서 맺은 인연으로, 적어도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할 정도로 인연을 지속하고 있는 대상들의 사례를 이

* 우리말상담실

곳에 기록하려고 한다. 그런데 출신지역, 현거주지, 연령 등 기초자료 몇 개만 조합하면 이내 사례의 주인공을 추론할 수 있기에 출신지역 및 현 거주지역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름을 대신하여 제시한 대상을 순번으로 표시하였다.¹⁾

대 상	연령·성별	제3국 체류기간	입국연도	현 가족(출신)	현 직업
사례1	30대·여	7년	2009	남편(조선족), 아들1	생산직
사례2	40대·여	0년	2006	남편(북한), 아들1	아르바이트
사례3	30대·여	9년	2011	어머니, 여동생	회사원
사례4	30대·여	12년	2011	싱글	직업훈련생
사례5	70대·남	2년	2007	부인(북한)	경비원
사례6	40대·남	3년	2007	부인(남한)	연구직
사례7	40대·여	0년	2007	남편(북한)	자영업
사례8	40대·여	1년	2008	싱글	의사
사례9	20대·여	0년	2007	남편(남한), 아들1, 딸1	전업주부
사례10	50대·여	0년	2010	싱글	생산직
사례11	20대·남	9년	2008	어머니	학생
사례12	30대·여	0년	2006	싱글	공무원

2-1 가정 생활

혈연 관계에 놓인 대상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이 핏줄 중심의 전통적인 의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6촌 이상의 인척에 대해서도 혈연의 인연을 끌어 들여 서로의 일에 당연한 마음으로 앞장서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친인척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과 마음을 주고 받은 관계라고 확신한다면, 경제적 부분까지도 기꺼이 나서서 도와줄 정도로 끈끈한 정도가 크다. 사례 11의 어머니 경우는 18살 무연고 청소년을 딸이라 생각하며 돌봐 주고 있다. 다달이 용돈을 주는 것은 물론이며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일상생활이 곤란해지자 본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줄 정도이다. 쉽지 않은 정성이었는데, 이와 같은 의식은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혈연관계나 끈끈한 정으로 묶여 있던 친구, 직장동료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건이 있어서 서로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 그 관계는 갑자기 파국을 맞는다.

사례 1의 경우 입국을 도왔던 친정 오빠와 1년 만에 소원해진 상황이 되었고, 사례 2의 경우는 한국에 입국한 친가와 친정가족 거의 모두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남한의 부모와 다르지 않아 거의 필사적이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사례 1의 경우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부부가 버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아들 이름으로 적금과 연금을 들고 있고, 사례 2의 경우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아들 이야기로 통화 시간 절반을 사용할 정도이다. 교육방법의 문제까지는 파악하기 쉽지 않아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교육 열은 분명 대단하다.

음식 문화에 있어서는 중국 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중국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체류한 경우, 북한식 맛보다는 중국식 맛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진다. 사례 11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나물 무침에 기름이 흥건히 있을 정도로 걸쭉한 느낌을 주었던 기억이 있으며, 사례 1의 경우는 남한 입국 3년이 지난 지금도 조선족 노동자가 많은 안산이나 인천지역을 방문했을 때 중국식 양념을 사가지고 오거나 중국 남편의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중국식 짬뽕(남한의 황태포와 유사)을 구입해 오기도 한다. 남편이 조선족인

1) 이 곳에 실린 사례를 인용하고자 할 때는 사례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적극적인 인용을 자제해 주기를 부탁한다.

맛도 있겠지만, 사례 1도 이미 중국식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체류 유무와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배달음식이나 서양음식에 대해 그리 개방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가족을 면회하러 올 때 치킨이나 피자를 준비하여 오는 경우도 간간이 있지만, 3-4시간 걸려서 오는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삼계탕을 끓여서 들고 오거나, 밥과 명태국, 나물무침을 바리바리 들고 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한국에 막 입국한 가족들의 입맛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필자와 교류하는 북한이탈주민 거의 대부분은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배달이나 외식을 하기 보다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외식을 하는 경우도 남한식 맛의 영향을 크게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삼겹살이 좋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사례 6처럼 사례자가 먼저 청한 식사 약속의 경우는 항상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스파게티 전문점으로 안내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2-2 경제 활동

어떤 방법으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헐적으로 일을 하거나 직업의 선택에 다소 문제가 있어 공식적인 취업 통계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경우, 자아개발이나 경력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보다는 수입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제활동인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남한 출신일 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높은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필자가 선택한 여성 사례자 8명 중 배우자가 남한 출신인 사례 9의 경우만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사례 9도 결혼 전까지는 경제활동을 했으나 결혼 후에는 한 번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례 9의 경우는 남편이 본인의 경제활동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북한출신 아내와 살고 있는 남한 출신 남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북한 출신 아내의 단점을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아 북한이탈 여성의 경우, 누군가 경제적으로 제역할만 해 준다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경제활동은 직장 생활에 임하는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사례 3의 경우, 중국에서 체류할 때 잡지사에서 편집업무를 했던 7년의 경력을 인정받아 하나원 퇴소 3주만에 비교적 이름이 널리 알려진 출판사에 경력직원으로 취직을 했다. 직원 복지도 좋고, 근로 조건도 좋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분 좋은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던 어느 날, 7년 경력에 비해 편집 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어 월급을 하향 조정을 하겠다는 회사의 통보를 받은 뒤 회사의 입장은 이해하나 당초 언급한 월급보다 적다는 이유로 퇴사를 거론했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미래와 관련된 고민을 한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퇴사를 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으나, 월급 총액을 따라 이리저리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북한이탈주민이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경제개념은 가정 경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의 수입 창출에만 관심이 있기에 미래를 염두에 둔 수입 관리에는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례 2는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많은 부분을 지출하고 있으며 사례 6과 11은 본인의 학비와 생활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많아서 아직은 저금을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적은 돈이라도 조금씩 저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걱정을 하면, '문제없다, 자신있다'고 자신감을 표현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대안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2-3 사회 생활

북한출신 국회의원, 북한출신 연예인, 북한출신 기자, 북한출신 의사, 북한출신 공무원 등 정치계는 물론이며 언론·문화·의학계 등으로의 진출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질 정도로 북한이탈주민이 일상으로 들

어와 있다. 비록 반쪽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는 않지만, 땅의 통일에 앞서 사회적 분야의 통일을 이런 과정으로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면 쉽게 단정짓기 어려워진다. 업무처리 방법이 달라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과 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달라서 서로 서운해 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가 하면 대인관계 기법이 달라서 서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서로 어긋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직장에서 생산된 정보나 기술은 곧 직장의 존재 여부를 기능하는 요소이기에 직장의 공식 창구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는 이상, 외부로의 유출을 금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정보나 기술에 있어서는 공적 태도로 다루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의 태도를 보면 이와는 상반된 행동을 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공적으로 알게 된 정보나 기술을 사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본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서운한 감정을 극대화하여 표출하기도 한다.²⁾ 물론, 남한 출신 중에도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동에는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을 능력으로 해석한다든가, 상대방이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 노골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 등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남한 사람과 갈등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인간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유사한 문화적 체험을 한 남한 출신끼리도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여 동료와의 인간관계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물며 문화적 체험이 다른 북한이탈주민에게 있어 인간관계 형성은 이래저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직장 동료와의 마찰로 직장생활을 지속시키기 어려운 것 같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자주 만나게 되고, 2005년에 이루어진 국립국어원의 “새터민 언어적응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언어능력’, ‘대인관계’, ‘일하는 능력’ 순으로 대답을 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이 제시하는 직장동료와의 마찰의 원인이 무엇이나고 되물으면 한 마디로, 북한에서 왔다고 ‘무시한다’, ‘차별한다’, ‘왕따 시킨다’와 같이 다소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직장 동료와의 갈등에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때로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차별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예를 들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이 존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상사가 본인에게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차별의 증거로 제시하는 등 무시나 차별보다는 본인의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때문에 혹은 소속하고 있는 조직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례 1, 사례 2, 사례 12의 경우는 직장생활 1-2년 동안 이와 같은 문제로 내내 힘들어 했었다. 사례 2의 경우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르바이트 체제로 바꾸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다.

반면, 사례 10의 경우는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며 2여 년이 지난 지금도 출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한다. 그리고 사례 8의 경우는 북한에서 20여 년 이상 의학 공부를 하고,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한국에서의 수련의, 전문의 과정 2년 동안 배운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으며 뿐만 아니라 의술을 가르쳐 주면서 월급까지 주는데 어찌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느냐며 열의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례 8의 경우는 같이 근무하는 수련의들이 어린 20대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속에 흡수되어 일 이외의 호홉까지도 잘 해내고 있는 사례이다. 이처럼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로 인해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무리없이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직 내 갈등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혹은 극복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 사람들 사

2) 화법에 대한 이해는 한정미,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적 특징과 화법”(《새터민 언어적응을 위한 새터민 교사 연수(자료집)》, 국립국어원, 2010.),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소통은 민족공통의 생활문화를 창출하는가-남북한 언어문화 소통 준비를 중심으로-”(《남북한의 생활문화, 차이 속의 공통성》,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원, 2011.) 참고.

이에 발생하는 조직갈등 대비, 그렇게 판단된다. 남녀관계에 대해서는 진지함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벼운 만나기, 개방적 만나기와 유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녀관계는 상호, 특정 기능이 개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능, 성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능,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기능 등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해 주지 못하면 남녀관계는 해체된다. 설령 단순 남녀 관계를 넘어 가족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의 기능이 떨어지면 해체를 다소 빨리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유연애에 토대를 둔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60-70년대 우리의 조부모 세대에 존재했던 남녀관계 혹은 가족관계로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4. 문화 생활

북한에서도 여가활동은 존재한다. 다만 북한에서의 여가활동은 선진선동을 목적으로 한 예술소조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여가활동을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까닭에 남한에 정착한 이후의 여가활동도 개인적이거나, 계획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국내외 여행을 계획할 때도 여행의 개념보다는 관광의 개념이 강화되어 있고, 휴식의 개념보다는 놀이의 개념이 강화되어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는 사례 1과 제주도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2박 3일 내내 올레길을 걷는 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여행의 의미, 휴식의 의미를 설명하며 걸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가 하면 남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중의 관심이 다소 떨어진 경향이 있는 노래방 문화에 심취해 있는가 하면, 10-20대 어린 사람들도 댄스곡이나 발라드보다는 트로트를 애창하는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노래방의 경우는 북한에서는 일반 인민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공간적 접근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쉽게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기도 하지만, 북한은 김정일의 음악정치의 영향으로 ‘노래 부르기’는 남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널리 보편화된 문화이며, 트로트는 북한에서도 ‘계몽기가요’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장르이기에 쉽게 동화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³⁾

TV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도 거의 대부분 드라마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하나원에서 교육 중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공연관람을 1-2회 가량 실시하는데 공연장의 일정에 따라 연극, 뮤지컬, 개그 공연 등이 무작위로 잡힌다. 그런데 연극이나 뮤지컬의 경우는 그래도 반응이 적극적인데 개그 공연의 경우는 인술 직원만 웃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앞뒤 문맥 및 출연자의 표정, 행동 등으로 내용 파악이 가능한데 개그 공연의 경우는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웃음 코드가 달라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 남한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와 비교하면 감각의 문제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말 보다는 몸으로 웃기는 개그를 좋아하고, 휴식의 의미보다는 눈요기나 관광의 의미로 여행을 계획 하는 경향이 강한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남북 통합의 생활문화 생산을 위한 과제

흔히 말하는 남북통일은 땅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땅의 통일은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문제는 땅의 통일과는 또

3)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트로트 노랫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 만남과 이별의 사랑타령만 하는 노랫말이 많은 것이 문제이며 그래서 한국에서의 문예물 창작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도 한다. 문예물의 기능, 장르의 특징, 생산원리 및 유통의 문제 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여기에서는 현상 파악에 초점이 있기에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을 기약한다.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준비해야 한다. 땅의 통일과는 별개의 문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으나 작금의 상황은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출신들이 2만 3천 여 명이 있어 땅의 통일을 마냥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반쪽 땅이기는 하지만 북한출신과 남한출신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와 조건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세탁기 사용방법을 몰라 3개월 내내 손빨래를 했다는 사연도 있고, 물을 넉넉하게 사용해 본 경험이 없어 빨래를 충분히 행구지 않아서 비누 냄새가 그대로 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전철을 잘 못 타서 면접시간을 놓쳤다는 사연이나 은행 업무를 볼 때 창구직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창피했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실수 사례를 한 두 개씩 끌어안고 있다. 경험 부재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세탁기 사용방법을 알게 되면, 전철 타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은행 업무를 한 번만 해 본다면 금방 습득할 수 있다. 사용방법이나 이용방법을 몰라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이 아니기에 일정 시간만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노래방을 지극히 좋아하고, 댄스곡보다 트로트에 심취해 있는 젊은 사람들은 개인 취향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체육복에 운동화를 신은 성인 남자나 구두에 두꺼운 양말을 신은 아가씨, 키가 작아서 하이힐을 신었다고 하는데 구두의 높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릎도 펴지 못하고 어색하게 걷는 40~50대 아주머니들을 보면서 세련되지 않은 감각으로 평가는 할 수 있으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의 감각으로 보았을 때는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옛 모습 - 70~80년대를 생각해 보면 그리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세련된 감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음식문화도 마찬가지다. 지역마다 고유의 특산물로 만든 음식이 있듯이 온반, 인조고기, 북한순대를 맛보면 된다. 남한에도 퓨전음식이 있듯이 중국식 나물무침이나 짬뽕을 받아들이면 된다. 북한 출신 가정주부의 독특한 맛내기 비법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외부 환경의 문제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때로는 비용을 들여 세련되게 다듬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환경 차이로 달라진 가치관과 정서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는 그 접점을 찾을 수 없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출신의 행동양식을 중요도에 관계없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북한식 전체주의 · 집단생활의 영향으로 사생활 존중 의식 약화
 - 개인 인격 및 개인생활 존중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타인의 신상털기에 몰입
 - 성숙하지 않은 태도 일관, 유아적 인간관계 형성

- 나. 북한식 완장문화의 팽배로 공중도덕 준수, 준법정식 의식 약화
 - 기회 엿보기 · 일회성 일처리 지속
 - 복종적이거나 공격적인, 극히 이분법적인 방법의 의사표출 방식 노출

- 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방임주의적 태도 강화
 -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의 균형 잡힌 이해 부족으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이해만 강화되는 경향

이와 같은 행동양식을 지켜보는 남한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양식이어서 행여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로 확대될까 지극히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탈주민들은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북한에서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기에 문제로 삼는 남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태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동양식 중에는 남한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보장받기를 원하기도 한다. 인권 보장 문제를 자기식으로 해석, 본인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인권 문제로 해석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문제는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남북한 환경의 차이로 이해하며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해를 넘어 오히려 남북의 극복할 수 없는 거리감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과 정서의 변화를 위한 이론적·실천적 교육이 지원되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필자는 하나원에서 초기 정착에 필요한 문화와 언어 분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필자의 경우 가치관 정서적 괴리감을 좁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을 지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자가 선택한 북한이탈주민 교육의 방향성이며, 남북 통합의 생활문화 생산을 위한 과제로 대신하고자 한다.

1.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확인,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정주의식 심어주기
 - 타국살이가 아닌 타향살이로의 이주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떠나라 국민이었다는 의식이나 정착 초기 남한 간보기 의식을 갖지 않도록 유도
2. 북한식 전체주의·완장문화의 문제점을 확인, 올바른 민주주의 시민으로의 변화 모색
 - 근시안적인 시각, 일회성 일처리, 극단적인 방법으로서의 문제해결 태도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킨 선배들의 사례를 통해 사고의 전환이 없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부각
 -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 등 균형 잡힌 이해를 통해 민주주의 시민의 개념 확립하기 유도
3.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 이미지는 곧 통일의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라는 점을 깊이 인식, 남한 사람들과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
 - 북한환경과 경험에서 비롯된 습관적인 생활태도 및 어투는 사회진출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확인
 - 북한식 비호감 태도 및 어투를 제거함으로써 남한 사람들과 오해없이 대화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 주기
4. 하나원 교육은 말 그대로 초기정착 교육, 그 이후의 삶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생력 심어주기 교육 강화
 - 경험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불편한 요소이지 부끄러운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실수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
 - 정신적 풍요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물질적 풍요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도

한국인의 생활문화와 민족 공통의 생활문화*

정승안**

1. 일상성과 일상생활의 사회학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진행된 한국자본주의의 발달사와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세계화는 일상생활의 질서를 다양한 각도에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초들의 일상과 생활세계에 대한 재조명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늦은 감이 있지만 가히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생활이란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그의 삶의 살아가기 위한 모든 활동의 총체이며 순간 순간의 단편적인 과정들의 중첩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드러난 실재만을 중시하는 실증주의적 접근은 인간의 생활세계로부터 개인을 분리해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민초의 삶을 영위하는 그들만의 논리와 내부적 역동성이 존재하는 사회적 사실을 실제적인 삶으로서 그려내지 못하게 된다(박재환, 1994, pp.35-39).

그러므로 이러한 기존의 생활세계를 설명하는 논의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삶과 일상생활세계의 원리와 같은 삶의 본질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이 부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기층 민초들의 삶과 일상생활세계를 그대로 살펴볼 수 있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접근들과 자료들의 단절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 또한 전통사회의 생활관습과 일상생활의 문화들이 제국주의적 침탈과 압축적인 자본주의적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적 변용과 문화접변을 거치면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유양식과 문화적 틀들이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왔으며 무력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자본주의의 발달사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생활의례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리듬과 주기성에 바탕한 세시의례와 같은 생활의례는 무너지고 있으며, 신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 범신론적인 마을의례나 부락제와 생활신앙들이 근대성과 합리성을 무기로 한 실증주의적 비판들에 미신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빨리빨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과정은 한국인의 일상생활문화와 정서적 태도의 급격한 변질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거나 국가주도의 정책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기층 민중의 일상생활세계에서 작동하는 삶의 원리나 세시의례와 같은 생활문화는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기층 민중의 생활세계에서는 생활세계의 기본 원리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에 의한 법률적 통제와 삶의 지속성간의 갈등에서도 생활의례는 지속되거나 유지된다. 전통적 혼상제례에 대한 법률적 통제으로써 가정의례준칙의 제정 등을 통한 ‘근대화’의 ‘생활의 합리화’ 정책은 부분의 변화는 일어났을 수는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전통의 지속성 속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했다(오재환, 2001: 169)는 사실에서도 여실히 확인된다.¹⁾

일상생활이란 무엇인가? 매일 되풀이되는 삶, 그것이 일상이다. 따라서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들은 일상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들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일상이

* 논의에서는 애초에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발표자로 초대되었던 박재환선생님과 그 의도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원리’에 대한 박재환선생님의 여러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 동명대 자율전공학부

1)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관점은 일상생활에 대한 고찰이라는 새로운 시각은 유형지위진 사회관계들과 말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유형 지위되지 않고, 말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이다. 즉 일상생활의 사회학은 여러 종류의 기관(학교, 관청, 조직체 등)이나 여러 형태의 집합체(가족으로부터 결사체와 정당에 이르기까지), 또는 우리가 일이나 여가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순전히 기계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다루는 하나의 방법(Maffesoli, 1989: 1)으로서 일상생활의 사회학은 각광받고 있다.

갖는 이중적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일상생활처럼 더 이상 피상적인 것은 없고, 그것은 반복적이고 진부하며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그것보다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없다. 그것은 실존이며, 결코 이론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적나라한 삶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성은 반복적이고 예견할 수 있으며 진부하고 이미 알려진 ‘상계의 영역’과 독특하고 예견할 수 없고 특별히 주목되는 미지의 ‘사건의 영역’이 변증법적으로 경험되는 장소인 것이다(박재환, 1984: 243-45).

또한 일상이 갖는 이중적 성격은 ‘일상’을 되돌아보는 작업을 매우 중요하게 한다. 개인과 집단의 일상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에 의해 구조화되면서 동시에 사회를 구조화하는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다. 부단한 일상의 연속성, 규칙성, 반복적인 성격들은 습관이나 관행 그리고 의례를 통하여 개인의 일상성을 재생산하게 된다. 일상성 속에 존재하는 생활의 양식이나 생활세계의 리듬들은 대개는 무의식적이며 심층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이러한 일상생활의 심층을 형성하는 요인에는 이미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이미 개입되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민중의 일상생활은 매일 되풀이되는 삶, 진부하며 사소한 것들이면서 동시에 함부로 떠날 수 없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변화중에서 제일 느리며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그것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노력들이 끝내 그 속에 주저앉는 수렁이며 함정”(박재환, 1994, pp.26-27)이기 때문이다.

2. 한국 전통문화의 특질

개개인의 삶들이 전제되어야만 사회는 존재할 수가 있다. 개인들 간의 무수한 상호작용이 개인과 사회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 이러한 개인적 일상생활에는 무수한 반복성과 끊어지지 않는 지속성이 개인의 생활세계를 재생산해내고 있다. 이러한 반복성과 지속성이 없다면 개인적 재생산은 불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구조의 변화에 따라가는 존재이며, 특히 일상적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면 더욱 더 좌절하고 힘들어 하는 존재로 오해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그러한 역경을 넘어서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생존해 나가고 있으며 불행히도 삶을 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지탱해 나간다. 흔히 민초들의 삶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만의 논리와 내부적인 역동성이 존재(박재환, 1994:35-39)하고 있는 것이 기층 민중의 생활세계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일상생활의 원리가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층 민중들이 일상생활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통해 읽어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 중의 하나가 기층 민중들은 여전히 일상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현세중심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 현재적 ‘삶’과 현재적 상황에 대한 경사가 강하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한국인의 ‘삶’이 그 본래 양식에 있어서는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와 어우러지는 삶이라는 사실이다. 서양문명이 자연의 정복에 바탕을 두는 데 반해 한국인의 전통적 삶은 ‘존재’와 함께 하는 동양적 삶의 전형을 나타낸다”(박재환, 1990: 30-31).

서양이 소유의 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한국 전통문화의 핵심은 존재의 문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의식이 소유보다 존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언어생활에서 극명하게 입증된다. 영어에서는 소유동사 have와 존재를 나타내는 be동사의 용법이 엄격히 구별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 ‘I Have a book’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나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라는 말 대신에 ‘나에게는 책인 한 권 있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있다’라는 존재의 말이 ‘가지다’라는 ‘소유’의 영역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포괄성을 지닌다. … 영어에서는 ‘I Have a son’ 이라고 표현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 ‘나는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한

‘있다’와 ‘없다’라는 말이 독립적으로 있지만, 영어에서는 ‘없다’에 해당되는 별도의 말이 없고 ‘있다’의 부정형으로 그 뜻을 나타낸다. 이처럼 한국인의 삶은 ‘소유’로 치닫는 것이 아닌 ‘존재’와 함께하고 ‘존재’속에서 즐기는 삶이다”(박재환, 2004).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특징을 박재환(2004)은 기존의 논의들을 검토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인간본위의 문화(‘사람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났다’)
- 둘째, 주기적 시간구조와 순응양식(‘팔자 도둑질은 못한다’, ‘세월이 약이다’)
- 셋째, 가족주의와 내집단의식(‘피는 물보다 진하다’)
- 넷째, 범신론적상대주의적 세계관(‘다 떨어진 고무신에도 신(神)이 있다’)
- 다섯째, 비언적 교류를 중시하는 경향(‘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 여섯째, 전일적융합적 사고(‘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독부장군 없다’, ‘오지랖이 넓다’)
- 일곱째, 교류와 현재적 ‘삶’의 강조(‘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3. 한국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일상문화의 변형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화적 충격을 가져왔다. 국권침탈과 같은 식민지적 상황은 공적인 조직이나 기관보다 생존의 전락으로서의 가족과 친족같은 사적 영역에의 의존성을 유일한 선택이자 대안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것이 한국인 특유의 강한 가족주의와 내집단형성의 기초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한민족 전체의 염원이었음에도 광복이 세계의 역학 구도 속에 외부에서 주어진 결과, 잘못된 과거에 대한 엄정한 청산이 수포로 돌아갔다. 우리는 단적인 예를 1948년 10월 12일에 구성이 완료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좌절에서 볼 수 있다. 반민특위의 실패는 친일세력이 응징받기는커녕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6.25 전란을 통한 남북한 분단은 한국인의 생활문화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이른바 세계의 이념적 대립이 20세기가 지난 현재에도 한 국가와 한 민족을 동강나게 한 사례를 한반도를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는 찾지 못한다. 반세기가 넘는 남북분단은 언어사용은 물론이고, 의식주와 생활의식등 모든 분야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게 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남북한 각각의 주민들이 영위하는 생활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먼저 6.25전란과 남북분단은 일반 국민들에게 흑백논리를 생활속에 침투시킨 부작용을 낳았다. 극단적 대립의 장기화는 각각의 성원들에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물론이고, 이른바 제3의 시각마저 배신과 꾀절로 간주하여 용납하지 못하게 한다. 상대방과의 대립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기보다 물리적 힘이나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현재의 우리 생활문화는 그 연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1962년부터 시작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은 기존의 생활문화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민생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경제개발정책은 단순한 경제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재편성 과정이었다. 그것은 특히 한정된 물적 자원을 가동하기 위해서 수면상태의 인적자원을 동원하는 데서 첨예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인적자원의 동원은 의식의 변화를 비롯한 국민 각자의 생활상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는 과거와 현재에 안주해오던 국민들의 관심을 장밋빛 미래로 향하게 했다. 또한 그 미래는 국민 각자의 의식과 일상생활상의 변화를 통해 확실하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2) 3년만에 걸쳐 전국이 초도화되는 전쟁과 계속된 외국 의존적 상황은 기존의 사회계층구조를 근본적으로 와해시켜 새롭게 재편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러한 과정에 전통은 계승되기보다 단절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야 했다. 새마을운동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다. 사회전반에 깔려 있던 빈곤과 폐배의식을 극복하는 관건이 경제개발정책이었으며 이를 위해 사회의 모든 자원은 무엇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의 원리에 종속되어야 했다. 부족한 쌀 생산을 통일벼로 개량하고, 과밀한 인구를 산아제한으로 억제하는가 하면, 농가에는 해마다 지분을 슬레이트 지분을 없앴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생활관습과 전통적 가치를 몰아내기 위해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고 세시풍속에까지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했다.

1993년 2월 25일 제14대 대통령 취임식으로 공식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30년 이상의 군사정권이 마감되고 말 그대로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문민정부라는 데에서 일반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유례없이 높았다. 김영삼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른바 ‘신한국창조’를 국정지표로 제시하고 과감하고 중단없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취한 개혁작업은 흔히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라는 비판을 받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쌀 개방약속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 결과, 군부독재라는 말 대신에 문민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1998년 2월 25일 제15대 대통령 취임으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호남 지역에 중심적 정치기반을 둔 새정치국민회의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과 공동전선에서 현상상상 첫 여야 정권교체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국민의 정부라는 공동정부를 구성하였다. 김대중정부는 대통령취임사에서 총체적 개혁을 다짐한 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병행해서 실천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새 정부를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국민의 정부로 규정하였다. 국정 초기부터 국회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구여권의 국회의원을 대거 영입한 후 기업구조조정, 금융개혁, 외환위기 탈출등의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점은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교육개혁과 의약분업의 실패, 인사편중에 의한 신지역주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강행으로 민심이반이 심해져 정권 재창출의 꿈은 사상 초유의 여권 분열로 굴절되었다.

반면에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취임으로 시작된 노무현 정부는 여권 내의 후보단일화과정의 역전과 네티즌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행태를 연출했다. 노무현정부의 출범은 일정한 학력과 상당한 기간의 정치적 경륜이 당연시되던 대통령감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IMF이후 진행되어온 사회 각계의 구조조정과 상승 작용해 한국 사회에서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사회적 갈등을 현재화시키는 상징적 출발이 되었다. 새로운 대통령의 파격적인 언행은 호사기들의 끊임없는 비판의 표적이 되었지만 그와 아울러 한국정치가 그동안 누렸던 탈법적 보호막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더욱이 불법 정치자금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한국사회 상층부의 기득권이 거의 예외없이 탈법과 불법에 근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4. 현대 한국인의 삶과 일상생활의 원리

한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공유하는 심리적 특성을 일반적인 용어로는 ‘국민성’이라 하고 심리학적 논의에서는 ‘사회적 성격’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변화하는 실제적 삶의 동태를 파악하는 데 그 적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이 우리 자신의 개인적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사회전체의 분위기와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사회적 교류가 실제적 내용보다 상징에 의해 압도되는 1990년대 이후 두드러지게 발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전통문화의 특성 위에 작동되는 새로운 생활양식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국민성이라는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우리의 일상적 삶을 구성하게 하는 실제적 ‘원리’를 색출해내는 노력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재의 생활원리는 기존의 전통문화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역사적 체험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문화의 특성과 현대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새로운 조

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재환(2001)은 그의 ‘현대 한국사회의 일상적 삶의 구성원리’에서 이러한 급속한 자본주의화가 현대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삶의 원리를 구성해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금전만능주의와 상품화된 일상,
둘째, 성역부재의 극단적 평등주의,
셋째, 결과우선주의,
넷째, 속전속결주의,
다섯째, 현장주의.현세주의,
여섯째, 물개성적 합일주의가 그것이다.

이러한 원리들에서부터 현대 한국인의 대표적인 심리적 특징을 추출하고 있는데, ‘조급성’, ‘공격성’, ‘공개적 획일성’, ‘이기주의’, ‘현장성’ 등이 그것이다.

5. 한국인의 일상생활문화와 통일

3부 [16:20~18:00] 독일 통일 사례와 코리언의 문화통합 방향

: 신동훈 /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한국

동독인정체성

: 이동기 / 서울대 평화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국

토론: 이기식 / 고려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한국

남북한 생활문화의 현실과 통합 방향

발표자: 전영선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국

토론자: 전연숙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팀장, 한국

독일통일 후의 동독정체성: 오스탈기는 통합의 걸림돌인가?

이 동 기*

I. 독일통일 22년과 동독의 상황

독일 통일 20주년을 경과하면서 최근 한국의 많은 지식인, 학자 및 정치가들은 독일통일의 역사적 경험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의 답답한 분단 상황과 비교되어 독일통일의 경험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부분적으로는 이상화되거나 모범적 전례로 간주되기도 한다. 심지어 정부와 일부 학계에서는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를 통한 급속한 흡수통일’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며 ‘통일세니’ ‘통일대비 로드맵 마련’ 등의 논의로 서둘러 내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독일에서는 -최소한 학문의 영역에서는- 신중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전문 학자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독일통일은 여전히 그 위기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적인 논의가 드세다. 이 때 통일에 대한 평가 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동독 경제의 능력, 대규모 재정적 지원의 맥락 하에서 본 동서독간 “생활상태의 균등”, 제도적 질서와 선거행위 또는 가치 지향에서 나타난 동독 지역 신주들의 정치적, 정치 문화적 발전 정도 등이다. 그 외에도 동독의 과거, 즉 연방공화국이 구동독, 그 지배체제 및 일상생활을 어떻게 대면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어떻게 독일사의 일부로 다루어야 하는지도 관심의 중심에 놓여 있다.

기실 독일통일 평가 시에 중요한 전제는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사후 기억투쟁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필요한 일은 복합적 맥락을 찾아내고 역사적 구체성과 미세한 차이들을 감당하며 다양한 논점들에 개방적인 학문적 태도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이해 이루어진 최근의 독일학계의 연구와 토론은 이제 비로소 독일통일에 대한 기왕의 과잉 정치화된 해석을 버리고 역사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비판의 가능성을 예시한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동독의 변화과정 및 통일 과정이 결코 종결된 것도 아니고 특정 목표점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¹⁾

첫째, 현재 독일의 정치 경제 엘리트, 전문가들 및 대다수 주민들은 “경제적”, “내적”, “사회적” 통일의 “완성”은 1990년의 대다수 행위자들이나 관찰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1995년이나 2000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심지어 2008년 연방수상 메르켈도 “많은 영역에서 동서독간 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마도 4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이전보다 최근에 더 집중적으로 문제로 삼는 것은 그 “통일의 완성”의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하는지 이다. 두 가지 논점이 있다. 하나는 동서독간 생활상태의 ‘균일화’ 내지 ‘평등’이란 유토피아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기본법 72조 2항에서 언급된 “대등한 생활상태의 달성(Herstellung gleichwertiger Lebensverhältnisse)”에서 그 “대등함(Gleichwertigkeit)”이 곧장 지역들 사이의 균등분배, 조정(Angleichung)이나 평준화(Ausgleich)를 의미할 수 없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등함이란 내용적

*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

1) 이하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Raj Kollmorgen & Frank Thomas Koch & Hans-Liduger Dinl, ‘Diskurse der deutschen Einheit: Forschungsinteressen und Forschungsperspektiven des Bundes’, in ders., (Hg.), *Diskurse der deutschen Einheit. Kritik und Alternativen*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11), pp. 7~9을 참조하라.

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동서독간 차이보다는 동독과 서독의 내부 차이가 더 주목받고 있다. 이를테면 인구밀도, 경제력, 취업률, 수입, 공공설비 등에서 예나나 드레스덴과 바우첸이나 슈텐달 같은 지역의 차이가 중요해졌고 아울러 서독지역의 경우도 잘란트나 브레머하펜의 ‘빈촌’들에 대해서도 나란히 언급되었다. 무차별적으로 ‘동독 재건’이라고 뭉뚱그려 말하기 어려워졌다. 물론 동서독 지역 자체 내부의 차이와 불균형 발전을 지시하면서 동서독간의 엄연한 격차를 상대화하는 태도도 다시금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진지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동독 지역의 지체된 경제 회복 속도, 사회구조적 사회문화적 독특성과 아집으로 인해 동독의 변혁과 독일통일 문제를 보는 관점의 근본적 전환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이중적 변환”: 1989/90년 ‘전환’을 서독을 모델로 한 재건으로 보고 통일을 동독이 서독에 적응하는 것으로 보는 모든 구상과 정치 전략의 포기 및 동독의 변화를 20세기 포드주의적 산업사회의 일국적, 유럽적, 전 지구적 단절 과정의 열린 실험장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볼프강 앵글러(Wolfgang Engler)가 ‘아방가르드로서의 동독인들’²⁾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겠다.

아울러 이와 같이 복합적 맥락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지면, 통일 후에 발현된 동독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 정체성 문제도 새롭게 볼 필요가 생긴다. 그것은 단순히 통일 후의 동독 사회의 정체와 위기가 만들어 왜곡된 비민주적 정치정체성이 아니라 생존과 고집의 문화적 정향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양면적 상황을 그 전제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으로 현재 통일독일의 수상과 대통령은 모두 동독 출신이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은 2005년 11월부터 독일사에서 초대 여성수상이자 최초의 구동독 출신 수상으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요아힘 가욱(Joachim Gauk) 또한 ‘자유의 투사’라는 상징적 지위를 넘어 2012년 3월 연방대통령에 취임했다.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이미 동독은 서독과의 내적 통합을 이미 상당 부분 달성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렇지만 동독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본질적으로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고유의 집단적 정체성은 여전히 강고하다. 심지어 구동독을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동독정체성과 오스탈기가 확인된다. 그런데 동독정체성 및 오스탈기는 통일 후 독일 사회통합의 걸림돌이기는 할까? 이 글에서는 분단국가의 통일 후 다시 지역정체성이 강화되고 옛 분단국 시절에로의 향수가 등장하는 현상과 그 원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한반도 민족통일과 이질적인 사회통합의 관계에 대한 지적 논의의 새로운 근간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오스탈기 현상

1. 개념과 현상

오스탈기(Ostalgie)라는 개념은 오스텐(Osten: 동쪽, 동독)과 노스탈기(Nostalgie: 노스탤지어, 향수)의 조어로 ‘동독에 대한 향수’를 뜻한다. 이 창조적 용어를 1992년 처음 사용한 이는 우베 슈타임레(Uwe Steimle)라는 카바레 공연예술가다.³⁾ 이 용어는 곧 독일 통일 후 정체성 상실을 경험한 동독 주민들이 새롭게 찾아 나서는 심적 태도와 문화적 지향을 지시하는 개념으로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확산되었다. 오스탈기는 급속한 독일통일과 체제이식 과정에서 생겨난 동독 지역의 부정적 영향으로 다시 ‘좋았던

2) Wolfgang Engler, *Die Ostdeutschen als Avangard*, (Berlin: Aufbau-Verlag, 2002).

3) 용어의 등장과 의미에 대해서는 Thomas Ahbe, *Ostalgie. Zum Umgang mit der DDR-Vergangenheit in den 1990er Jahren*, (Erfurt: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hüringen, 2005), p. 7.

옛 시절'에 대한 기억의 함축적 표현으로 즐겨 사용되었다. 그것은 한편 오스탈기는 때로 구동독의 이름을 그대로 딴 DDR-형수로 불리기도 한다.

그 배경과 기원은 1989/90년 독일 통일과정의 방식과 과정과 관련 있다. 1990년 독일민주공화국(DDR,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BRD, 서독)로 편입함으로써 동독지역 주민들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정치, 경제 체제와 사회 문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서독의 제도와 삶의 방식은 너무도 급작스럽게 동독 지역으로 도입되었다. 적응과 재교육의 시간은 모든 세대와 직업의 동독 주민들에게 힘겨운 노력을 요구했다. 마찰과 갈등은 불가피했다. 사실 애초 동독 주민들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전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동독 주민들에 의해 개시되었던 것이고, 또 '순식간에' 이루어진 '흡수통일'도 최종적으로는 동독 주민들 다수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1989년 가을 이후 1990년 초반까지 그리고 1990년 두 번의 의회 선거가 명료히 보여 주었듯이, 국가연합의 틀 내에서 동독의 자율적인 민주화와 경제적 구조변화라는 대안은 동독 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렇기에 서독 체제 모델이 동독 지역에서 이식되는 데 있어 동독인들이 비판과 저항 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라는 서독인들의 기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구동독의 서독으로의 통합 과정에서 동서독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긴장이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분명 통일 전 동독 국가와 사회에 대해 서독인들의 인식이 부족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고 통일 후에도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동독인들의 경험과 시각들을 잘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독지역 주민들에게는 오스탈기의 대립 현상인 베스탈기(Westalgie)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 용어는 서독인들이 통일 후 가지게 된 감정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서독 지역 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좌파적 정치 지향을 가진 이들이 베스탈기라 부를 수 있는 정향을 더 뚜렷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독 출신의 상당수 비판적 지식인들과 좌파 세력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오랫동안 격렬히 비판하며 맞서 싸웠던 연방공화국과 1980년대 후반부터 점차 화해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즈음 동독의 다섯 주가 서독으로 편입해 들어옴으로써 관용과 해방에 의거했던 서독의 시민적 정치문화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더구나 그들은 사회주의 동독의 정치억압과 경제적 낙후성 및 사회적 비효율성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자아상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들은 동독의 정치적 억압 못지않게 그것에 수동적으로 조용하며 굴종했던 대다수 동독인들의 민주주의의 결핍을 질타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보수 신문인 FAZ보다도 대표적 좌파신문 taz가 오히려 동독과 동독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나 논평을 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독일 통일 후 10여 년간 동독 지역에서 생겨난 다수 동독주민들의 집단적 정체성은 의사-민족적 경험, 기억, 이야기공동체적 성격을 띤다. 현실에 존재하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한 해석 또는 미래 전망과 연관되기 보다는 이미 몰락한 동독 국가와 사회에서의 집단적 경험과 기억에 의거한 재 '좋았던 옛 것'과 그 문화적 요소의 전유와 확인 및 전승에 의거한 것이다. 심지어 구동독(DDR)은 그 국가가 사라진 뒤에 비로소 탄생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⁵⁾ 그것은, 동독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구동독 지배정당의 오랜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소통과 교호의 과정에서 독자적인 "경험과 담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조건을 가졌고 실제 그것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4) 내용을 긍정, 부정, 중립, 특이로 나눈 조사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3년까지 FAZ의 긍정적 보도는 21%, 부정적 보도는 23%였는데 비해 taz는 긍정 보도가 7%에 불과했고 부정보도는 30%였다.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기간에서도 FAZ의 경우 긍정 보도가 28%로 상승했는데(부정보도는 22%로 큰 차이가 없었다), taz의 경우 긍정보기도 상승했지만(22%) 부정보도 또한 35%로 계속 증가했다. 이에 대해서는 Raj Kollmorgen & Torsten Hans, 'Der verlorene Osten. Massenmediale Diskurse über Ostdeutschland und die deutsche Einheit', in Raj Kollmorgen & Frank Thomas Koch & Hans-Liduger Dinel (Hg.), *Diskurse der deutschen Einheit*, p. 121.

5) Klaus Christoph, "Ostalgie" - was ist das eigentlich?, in *DA*, 39(2006), 4, p. 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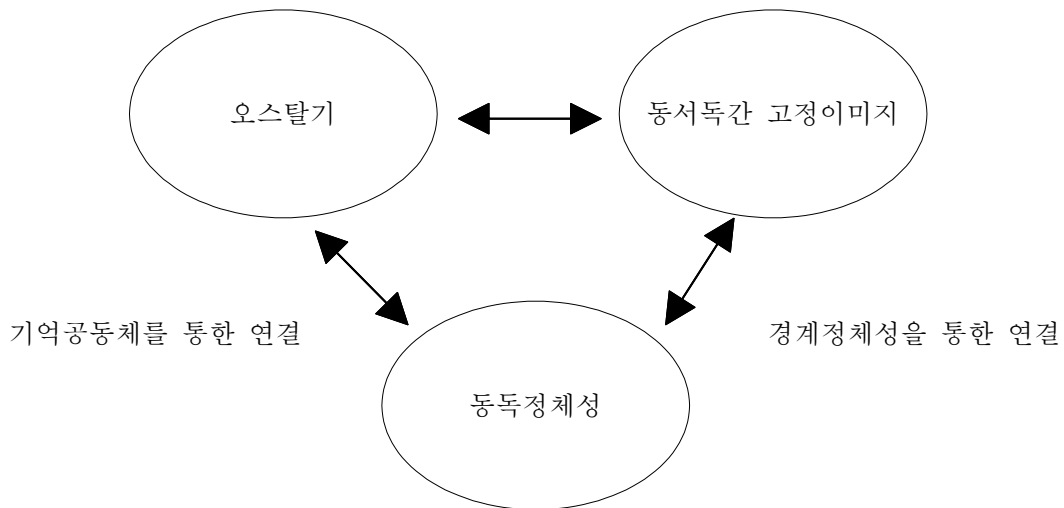


표1: 오스탈기, 동서독간 고정이미지와 동독정체성⁶⁾

오스탈기 또는 구동독(DDR)-향수는 동독주민들이 구동독(DDR) 자체 또는 구동독의 특정 삶의 영역에 대해 갖는 긍정적 평가나 이상화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에 반해 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동독정체성은 동서독간 고정 이미지 내지 타자상을 매개로 해서 경계 짓기를 통해 집단적 자기상을 강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동독정체성은 바로 그 ‘경계정체성’을 통해 만들어지는 집단적 자기인식과 자기규정이다. 직접적인 접촉과 언론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타자상은 타집단과 자집단의 차이를 거듭 주목하게 만든다. 이때 개체나 소집단의 문화적 자기긍정의 기제인 오스탈기 또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동의 경험과 기억에 의지해 ‘기억공동체’를 강화한다. 그 두 차원의 결합에서 바로 집단적인 동독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타집단과 자집단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해석 못지않게 공동의 기억은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집단적 동독정체성은, 그것이 긍정적 기억들로 구성되는 한, 다시 역으로 오스탈기의 일부이면서 그 배경이 된다.

2. 오스탈기의 구체적 양상들

오스탈기는 구동독 소재의 영화나 동독인 주제의 소설의 성세, 구동독 시절의 팝음악이나 유행가, 동독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를테면 에리히 호네커의 대역이 등장하는 오스탈기-파티, 오스탈기-쇼, 청소년들의 록음악 축제, 동독시절 텔레비전 프로그램, 옷, 신호등인 관련 상품들, 특히 구동독 시절 상표의 물품들, 이를테면 담배 에프 쾅스(f6)와 카비넷, 론도(Rondo) 커피, 클럽-콜라, 로트캡센 샴페인 같이 구동독시기 소비했던 식료품과 기호품들, T-셔츠나 가방 등의 물품들에서 동독 지역 주민들의 일상문화와 생활세계에서는 오스탈기를 보여주는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⁷⁾

6) Katja Neller, ‘DDR-Nostalgie? Analysen zur Identifikation der Ostdeutschen mit ihrer politischen Vergangenheit, zur ostdeutschen Identität und zur Ost-West-Streotypisierung’, in Jürgen Falter/Oscar W. Gabriel/Hans Rattinger (Hg.), *Wirklich ein Volk? Die politischen Orientierungen von Ost- und Westdeutschen im Vergleich* (Opladen: Leske + Budrich, 2000), p. 573.

7) 종류의 오스탈기 현상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동독제품’들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무엇보다 Nina Tatter, *Verortung durch Geschmack. Aspekte ostdeutscher Identitätskonstruktion*, (Bremen: Institut

특히 음식물과 기호품 류의 ‘동독제품(Ostprodukte)’⁸⁾은 ‘잃어버린 고향(조국)’을 대체하며 연속성과 자존을 보장해 주며 새로운 기억과 경험 공동체의 생성을 가능케 해주었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다시 말해 동독제품은 대다수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한 복고적 기호의 차원을 넘어 동독에 대한 긍정적 기억의 창출(“모든 게 다 나쁘지는 않았어!”)과 현재적 공유를 통한 집단적 소통과 자의식의 강화를 보조했다. 담배 West의 광고 ‘서쪽 맛을 봐(Test-the-West)’에 대해 ‘Ich rauche Jewel, weil ich den Westen schon getestet habe, Jewel eine für uns! 같은 대응의 광고에서도 동독제품에 대한 자의식과 고집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때 동독 지역 주민들은 동독제품들의 ‘순도’와 ‘진실성’을 자랑스러워했고, 일종의 신도불이식의 ‘우리 것’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룬도 커피는 1990년대 초 100-200톤 정도에서 1998년 5000톤으로 판매가 급증했는데 다른 동독 제품들도 인기를 누렸다.

게다가 동독제품은 실제 사용과 기호의 차원을 넘어 그것에 대한 ‘이야기’와 ‘기억’의 전유와 확산을 통해 더 퍼져나갔고, 심지어 젊은 세대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된다. 동독의 청(소)년 세대들도 또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나 가족적 지역적 일체감과 결속의 강화를 위해 동독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⁹⁾

동독의 고유한 ‘경험’과 ‘기억’에 ‘이야기’의 전달과 관련해서라면 언론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동독지역 주민들은 정보 취득과 소통을 위한 매체로 서독인들이 만드는 전국일간지나 주간지가 아니라 주로 ‘동독 신문들’을 구독한다. 이를테면 튀링엔주신문(TLZ), 오스트튀링엔신문(OTZ), 중부독일신문(MDZ), 심지어 구동독 지배정당인 사통당(SED)의 당중앙기관지였던 좌파일간지 신독일(Neues Deutschland)도 ‘사회주의신문’으로서의 성격 못지않게 지방지적 성격도 또한 강하게 갖고 있다. 서독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류의 구독률은 매우 낮다. 동독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간 잡지는 단연 슈퍼일루(SUPERillu)다. 가족용 주간지를 표방하는 이 주간지는 1990년 여름 독일통일 직전 동베를린에서 창간된 잡지로서 동독인들의 관심과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¹⁰⁾ 이 주간지는 동독인들의 일상생활과 동독 역사와 기억문화에 지면의 상당부분을 할애하면서 동독인들 사이의 소통의 매개가 되고 있다. 당연히 서독에서는 이 잡지의 독자는 드물고 심지어 그것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도 흔치 않다.

für kulturwissenschaftliche Deutschlandstudien, 2008), pp. 17~23; Thomas Ahbe, *Ostalgie. Zum Umgang mit der DDR-Vergangenheit in den 1990er Jahren* (Erfurt: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hüringen, 2005), pp. 41~61.

8) ‘동독제품’의 개념 규정에 대해서는 Nina Tatter, *Verortung durch Geschmack*, pp. 17~22를 참조하라. 음식물은 인간으로서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되고 기호품은 기억과 감정과 연관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둘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동독제품’은 자연제품이 아니라 가공된 상품으로서 식탁이나 부엌으로 전달된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과일이나 채소, 고기나 어류들은 모두 제외된다.

9) 이에 대해서는 Marlise Huijzer, *Der moderne Ossi und sein Ostprodukt. Die Bedeutung ehemaliger DDR-Produkte für Jugendliche in Ostdeutschland* (Marburg: Tectum Verlag, 2008)을 참조하라.

10) ‘슈퍼일루’측은 슈퍼일루가 매주 40만부가 팔리며 동독지역 주에서 300만 명의 독자층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슈퍼젤이나 슈테른, 포쿠스 등 “서독” 주간지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읽히는 것은 사실이다. 주간지로는 20%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 주간지의 발간인 이자 오랫동안 편집장을 역임했던 이는 서독 출신 출판 사업가 요헨 볼프(Jochen Wolff)다. 그와 ‘슈퍼일루’에 대해서는 ‘Wo die DDR noch ganz bei sich ist’, taz, 2007.10.02; Raj Kollmorgen & Torsten Hans, *Der verlorene Osten. Massmediale Diskurse über Ostdeutschland und die deutsche Einheit*, in Raj Kollmorgen & Frank Thomas Koch & Hans-Liduger Dinel (Hg.), *Diskurse der deutschen Einheit*, pp. 144~145.

III. 새로운 동독 담론의 등장과 기능

1990년대 동독 국가와 동독인들에 대한 담론을 이끌었던 행위자들은 두 부류였다. 구연방공화국(서독) 출신의 지식인, 정치가와 언론인들이 그 하나고, 구 동독 체제로부터 억압을 받았다가 새로운 정치 엘리트가 된 동독인들이 다른 한 부류다. 서독 출신의 담론 참여자들은 동독을 ‘인권유린의 범죄적 독재’이자 ‘과멸적 경제’로 환원시켰다. 서독에서 과거 체제를 격렬히 비판했던 이들도 이제는 동독의 상황을 보면서 뒤늦게 구연방공화국과의 일체감을 갖게 되었다. 바로 그 과거의 반체제 세력이자 대안적 사회를 꿈꾸었던 많은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을 독재에 의해 ‘기형화되고, 권위적이며 민주주의 능력이 부재한’ 신민쯤으로 보았다. 그들이 보기에 동독인들은 1950년대 서독인들같이 아직 정치의식이나 문화가 저열했다.

동독 출신의 담론참여자들이 동독국가에 대해 논할 때 강조한 것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현실과 자신들을 동독 체제의 반대자로 이끌었던 것들, 이를테면 국가의 폭력 행사들과 정치적 사상적 간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당시 현실에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한 많은 동독인들의 태도 등이다. 동독 국가와 동독인에 대한 이 두 담론들은 거의 모든 언론과 공론장을 지배했고 통일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것만을 접했다. 그러나 이 때 구동독에서 정권의 희생자나 저항투사로 자신의 생애이력을 가지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일상과 경험 및 의미세계는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주변적으로만 다루어졌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새로운 목소리, 특히 관련 주체들의 불만에 찬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조용하게 일어난 대응은 무엇보다 지식인 같은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담론의 영역에서였다. 바로 그것이 오스탈기이란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 동독인들의 자기인식이었다. 오스탈기라는 용어를 통해 평범한 동독 주민들의 일부는 전문가들의 동독-담론의 일면성과 결함들을 지적하며 그것을 보충했다.

토마스 아베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오스탈기는 세 가지 기능을 행사했다. 첫째, 오스탈기는 대다수 동독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몰아내는 일종의 ‘상대화 기능’을 행사했다. 다음으로 오스탈기는 1990년대에 지속되었던 동독인들에 대한 식민화의 영향을 보상하는 ‘자가 치료’였다. 마지막으로 오스탈기는 그것으로 시장을 만들고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해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구상’이다.

동독인들이 지배담론에서 만들어진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나 그것을 교정하면서 확인한 긍정적 자아상은 단연 ‘노동’과 노동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문제였다. 볼프강 앵글러(Wolfgang Engler)가 이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다. 그는 1970년대부터 통일 직전 동독사회를 ‘노동자적 사회(arbeiterliche Gesellschaft, 노동자 중심의 사회)’로 규정했다.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집권 직후 사유기업이 최종적으로 국유화되고 중소기업자들이 사라지면서, 노동자들과 하층 사무원들은 동독의 사회적 삶과 일상 문화적 영역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작가나 예술가, 의사 또는 종교인들은 반체제 운동으로 일부 기우는 것을 빼면 국가나 사회 모두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즉 ‘노동자사회’(‘해방된 프롤레타리아 사회’, ‘발전한 현존 사회주의’)라는 공식적 지배이데올로기의 논리로나 사회문화적 실체로나 ‘노동자적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노동’으로 표현되었다. 수공업이나 농업, 행정이나 서비스, 심지어 학문과 문학, 예술, 놀이와 사랑도 노동이 되었다. 노동의 규범과 가치가 존중되었다. 그 결과 생각이나 의견, 소비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 관습이 노동자들의 이상과 규범에 맞춰졌다. 바로 이와 같은 동독 사회에서 소시민 내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공유되었던 가치와 규범인 공동체적 연대와 책임성, 순수함과 인도성 등은 통일 후에 새롭게 동독에 대한 향수의 근원적 요인으로 재전유되었다. 특히 통일 후 동독 지역의 실업률의 증가로 동독인들은 옛 ‘노동자

적 사회'와 통일 후 실업 시대로의 전락을 비교해 과거 '노동'에 대한 기억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결국 그와 같은 오스탈기는 동독 국가가 사통당과 타협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장해주었던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을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재 전유된 '동독 고유의 업적과 성과'는 곧장 정치적 지향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독인들의 잘난 척하는 오만과 이기주의, 표피적이고 형식적인 인관관계, 그리고 물화된 자본주의적 관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자유주의적/사민주의 합의 민주주의, 국제적, 개방적 시민문화, 사회적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거부는 제한적이거나 주변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아울러 단일한 정치적 지지나 사회적 저항으로 동원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생필품과 기호품 등의 상품 구매 시나 소비적 대중문화와 여가 문화 등에서 나타는 동독주민들의 '고집(Eigensinn)'이다. 동독지역 주민들은 구 동독시절의 제품명의 물건들 또는 동독시절의 생필품에 대한 소비 기호를 강화하고 있다. 동독인들 고유의 소비문화를 통한 자기 확인과 집단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라진 국가에 대한 보상을 자신들에게 익숙한 고유의 생필품과 기호품을 소비함으로써 갖게 된 것이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만세, 나는 아직 살아 있어(Hurra, Ich lebe noch)"('클럽 콜라'의 광고) 같은 류의 동독 제품 광고가 유행하고 있다.

물론, 동독의 특수성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비판적 평가보다는 우호적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지닌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줄기쳤다. 특히 그 동독을 끊임없이 희생자로 내세우는 방식 공적 주제화가 사실은 경제적 썩수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다. 누가 동독정체성의 담지자이고 아닌지의 질문과는 무관하게, 비판가들은 이리저리하게 나선 동독의 '대변인'들이 사실은 분배투쟁에서 희생자-지위가 제공할 이점을 일찍부터 잘 알아채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 '대변인'은 민주적 선거로 권력과 관직을 차지한 정치가들이기도 하고, 많은 독자를 가진 소설가들, 텔레비전의 쇼프로그램 진행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 동독 제품의 생산 회사들은 사실상 서독 자본과 경영인들의 지배하에 있다. 그와 같은 '동독보너스'를 활용하는 전략적 행위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생존 동기와 이해관계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 근원에는 통일 과정에서 사라져버리고 짓밟힌 자신들의 삶의 경험과 기억을 가진 갑남을녀의 동독인들이 고집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체성의 담지자들 내지 담론의 행위자들의 주체적 의미 부여와 집단적 사회화이고, 그 필요와 동기 및 효과가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오스탈기를 매개로 한 동독정체성이 동독의 지배정당인 사통당(SED)의 후신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당(PDS)이나 현재의 좌파당(Die Linke)에게 정치적 지지의 조건을 만들어 낸 것은 사실이다. 다르게 말한다면 기민련이나 사민당 같은 '서독' 정당은 이 기이한 동독정체성에 제대로 대응할 전략을 찾지 못했다. 다만 민사당과 좌파당은 스스로 구동독과의 연속성을 지닌 정치세력으로 그 스스로 동독정체성의 일부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다.¹¹⁾ 1998년 총선에서 PDS를 지지한 동독지역 주민들의 85%는 PDS를 무엇보다 '동독 정당'으로 인지했고 동독지역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인식했다. 다른 정당들이 계속 동독 주민들의 오스탈기나 동독정체성을 견제하고 비판하려고만 한다면 이와 같은 정치적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1) Detlef Pollack/Gert Pickel, 'Besonderheiten der politischen Kultur in Ostdeutschland als Erklärungsfaktoren der Bundestagswahl 1998 und die Rückwirkung der Bundestagswahlen auf die politische Kultur Ostdeutschlands', in Jan van Deth/Hans Rattinger/Edeltraud Roller (Hg.), *Die Republik auf dem Weg zur Normalität? Wahlverhalten und politische Einstellungen nach acht Jahren Einheit*, Opladen: Leske + Budrich, p. 136. 정치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Alexander Thumfart, *Politische Kultur in Ostdeutschland*, *APuZ*, B 39-40/2001, pp. 6~14.

IV. 결론: 오스탈기는 사회통합의 과정이자 전략?

1990년대 이후 현재 통일독일의 동부에서 보이는 오스탈기와 동독정체성은 독특한 문화적 현상으로서 얼핏 보면 ‘내적통일’의 장애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본질에 있어 오히려 통일 후의 여러 사회적 위기와 개인적 차원의 생애사적 곡절 속에서 자기위로와 자기확인을 통한 사회 통합의 한 매개 과정이다. 그것은 하나의 동질적 의식과 지향 및 단일한 집단정체성(독일민족정체성)의 강화와 충돌하며 오히려 그것을 거슬러 간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통일 국가 내 사회의 이질성을 촉진하거나 분열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독의 억압 체제를 변호하거나 사회주의 체제 시절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정치문화와 가치를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며, 현존 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하거나 서독인들에 대한 배타성이나 적대성을 조장하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구동독 과거의 의미 있었던 ‘좋은 경험과 기억’을 통해 현재의 자의식을 강화하며 고유한 자기해석을 통해 현 정치공동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다.

특히 오스탈기는 위로부터 주입되거나 조종된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생한 일반인들 사이의 동독 담론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한 지역의 집단적 역사와 전통 및 경험과 문화에 대한 담론이 개별 인간들의 정체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지니는 정체성은 개인적이고 특수한 교유의 생애 속에서 발화 내지 구성되지만, 그것의 형성과 지속은 항상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이야기들 내지 담론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은 개인적 정체성을 찾아 나서지만 곧 그것은 민족, 문화, 지역, 가족 등 더 큰 사회적 차원의 담론, 특히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과 만난다. 그런 의미에서 오스탈기는 “과거”, 또는 “우리 민족, 문화, 지역”, 즉 여기서는 “동독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배 담론 및 흔한 이야기들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낀 동독인들이 스스로 그와 같은 평가들이나 결합들을 주체적으로 수정하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스탈기는 일종의 통합전략으로 기능한다.

물론, 오스탈기는 다시금 서독출신들이 지배하는 주류 담론에서는 동독인들이 다시 ‘구동독’을 원한다는 지 통일을 물리려고 한다든지 통합에 저항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오해되었다. 오스탈기는 사실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지시한다. 오스탈기는 다만 동독주민들의 일부는 통합 시에 서독인들의 다수와는 완전히 다른 고유한 경험과 기억과 가치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문제는 1989/90년 서독의 정치엘리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통일을 법제도나 사회경제체제의 통합 내지 이식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는 관점과 태도를 되찾는 일이다. 구체적 삶의 공간에서 대중들이 고유하게 발전시키고 공유, 확산한 기억과 경험을 하찮은 것으로 보고 배제하지 않는 태도 말이다. 결국, 통일은 공식적 정치 무대에서 양복 입은 중년의 신사들(남자들)이 모여 의논하고 서명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 가치와 지향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게 하고 그 삶의 자락들을 연결시키고 소통시키는 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선거나 의회 연단이 빚어내는 민주적 공정성을 높이 평가하되, 거리와 시장에서의 왁자지껄 그리고 카페와 다체(Datsche)에서의 소근거림들이 지닌 의미를 되새길 줄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오스탈기를 통해 확인된 동독정체성의 발현과 지속은 단순히 ‘통일의 후유증’이니 ‘통일위기’라는 말로 주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자체가 새로운 통일의 ‘과정’이자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땅은 합쳐졌지만 아직도 ‘하늘은 갈라져’ 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정상적 역사’일지 모른다. 1990년의 통일로 독일 분단의 역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었고, 동독사 또한 애초부터 ‘세계사의 주석’(슈테판 하임; 한스 울리히 벨러)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역사는 지속된다!

남북한 생활문화의 현실과 통합 방안

전영선*

1. 들머리

이 글은 남북한 생활문화의 현황을 분석하고 통합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치적 의미에서 남북 분단의 역사는 곧 남북의 정치적 분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경의 분단은 곧 문화의 분단을 의미했으며, 남북의 적대적 대립은 생활문화의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방송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북한의 생활은 집단주의와 정치로 무장된 ‘이상한 나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남북한의 생활문화 차이는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정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남북의 문화적 차이도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남북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차이는 곧 일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일상적 차이는 문화적 차별로 이어지고, 문화적 소통과 연대의식 없이는 문화적 차이가 곧 집단적 차이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가 소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문화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생활문화는 남북한 주민을 이해하는 본질적인 영역이다. 남북한의 생활문화는 민족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광복이후 체제적 차이에 의해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기초하여 남북한의 생활문화 현실을 분석하고 통합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현장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는 우회적으로 북한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생활문화의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풍습의 변화를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디아스포라의 경우에는 소속국가의 민족정책, 소속국가의 생활문화적 토양, 그 사회의 주류 민족과의 문화접변 등에 의해 모태적 생활문화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가 유의미하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사이에는 근원적인 문화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차이는 남한 사회 내의 지역적 차이, 예컨대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차이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의식은 제도적 차이에 의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피상적으로 남북한의 문화적 기층이 비슷할 것이라는 추상적 접근에 대해 경고한다. 동시에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면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북한 주민의 문제로 적용할 수는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문제와 남북한 주민의 생활문화 통합은 논의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 연구는 북한 주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일반정인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비록 구체적인 생활문화의 현상이나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지라도 생활풍습이나 생활의식, 의례풍습이나 의례의식에 대한 개괄적인 현상을 알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화적 갈등을 통해 통일 한국 사회가 겪을 문화충돌과 문화갈등의 양상을 제시한다. 이 글은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문화 현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문화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¹⁾

* 통일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이 글에서 의미하는 생활문화는 코리언의 원형 생활문화 또는 모태 생활문화가 식민지배, 강제이산, 근대 산업화 등을 계기로 다양하게 변용되어 갔다는 전제 하에 코리언이 거주하는 사회의 정치경제 구조와 그 영향으로 생성된 생활문화와 코리언이 거주하는 사회에 영향을 미친 외래 생활문화를 포괄한다. 김진환은 생활문화의 영역을 일상과 의례를 한 축으로 풍습(행위)와 의식(사고)를 한 축으로 하여 4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일상생활은 일상적 풍습(행위) 영역, 일상적 의식(사고) 영역, 의례적 풍습(행위)의 영역, 의례적 의식(사고)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다.

2. 생활문화의 개념과 소통의 지점

남북한의 생활문화의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한의 생활문화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더욱이 그 차이가 극복 가능한 것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원천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내부의 문건을 통해 생활문화를 재구성하거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한 우회적 접근이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생활문화와 관련한 연구는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문화구조적 접근이다. 북한 문화에 대한 연구는 북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그러한 차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오기성은 문화의 개념과 변용을 통해 남북한 문화연구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문화구조적 접근을 강조한다. 남북한의 문화를 위해하기 위해서는 내재적(비판적) 접근이 중요하지만 자칫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데올로기적 접근에 따라 비판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전환으로 문화를 유형과 구조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²⁾

둘째, 민속학적 접근이다. 주강현은 남북의 문화를 생활사와 인민사로 나누어 접근한다. 남북의 생활문화 차이에 대한 접근에서 주강현은 북한의 문화를 ‘우리식 문화’로 규정하면서 독자성을 강조한다. 남한의 생활문화를 ‘민중생활사’로 명명하고 대응어로서 북한의 생활사를 ‘인민사’로 명명하였다. 인민사는 인민대중들의 구체적인 생활을 중심으로 정리한 개념이다.³⁾

셋째, 일상생활은 현재성에 중심을 둔 접근이다. 통일교육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으로 발간한 『사진으로 본 북한 주민의 생활』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4부분으로 구분하였다.⁴⁾ 일상적 생활공간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활동을 포함하여 경제활동과 주거 공간, 종교, 교육, 전통문화, 병원 등을 광범위한 생활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정창현은 『북녘의 사회와 생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적 상황을 생활의 문제로 접근한다. ‘여행과 만남의 길잡이’라는 부제가 설명하듯이 북한의 주요 참관지, 유적지, 음식 문화 등의 인문학적 자료를 생활의 영역으로 보았다.⁵⁾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사회』에서는 “북한의 사회구조와 정책(계급구조와 계급정책, 사회통제정책, 사회복지, 의료보건), 이데올로기를 통한 사회화(노동 동원 이데올로기, 노동영양연구), 주민의 삶(일상생활, 여가생활과 체육활동), 문화(종교, ‘우리식 문화’), 인권 등의 북한 사회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⁶⁾

넷째, 사회구조적 연구이다. 사회학에서 의미하는 일상생활이란 사회체제와 관련되는 삶의 문제, 주로 사회의 구조적 시스템의 차원으로 접근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 등 체제나 법제도의 통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작동되는 사회적 문제와 연관된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는 일상생활을 정치적 이념보다는 전통적 생활방식에 초점을 둔 접근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위계, 젠더, 계층, 사회체제, 법제도 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⁷⁾

2) 오기성, 『남북한 문화통합론』(교육과학사, 1999), 43쪽 : “연구대상이 되는 사회나 집단의 내재적 작동 논리(이념)를 이해하고 그것의 현실적합성과 이론, 실천적 특징의 한계를 규명해 내는 접근이다. 이 접근 방법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신체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자라면 누구나 활용해야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인 접근법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연구 방법에 있어 이 접근법이 강조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북한연구가 북한의 내재적인 논리가 완전히 무시되는 맹목적인 전체주의적 접근이나 표피적인 선정주의를 띠는 경향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3) 한편 주강현은 북한의 생활문화를 ‘민중생활풍습’으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민족생활풍습』에서는 북한 인민의 생활을 2부로 나누었는데, 1부는 의식주와 관련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입고, 먹고, 집쓰고 살기’, ‘의생활 풍습’, ‘식생활 풍습’, ‘주생활 풍습’으로, 2부는 명절풍습, 혼상제풍습, 민속놀이 풍습, 여가생활로 나누었다.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민속원, 1999).

4)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진으로 본 북한 주민의 생활』(통일교육원, 2006)에서는 4 부분으로 나누어 북한 주민의 생활을 소개하였다. ‘part 1’은 생활터전이 되는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농촌·경제·경제’로 구분하였다. ‘part 2’는 ‘학교생활’로 취학전, 학교, 방과후 활동, 단체생활로 구분하였다. ‘part 3’은 ‘명절’로 민속명절과 사회주의 명절로 세분하였다, ‘part 4’는 ‘일상생활’을 주제로 생애, 사상학습생활, 생활경제, 직업세계, 주택, 문화시설, 종교, 병원·휴양소로 세분하였다.

5) 정창현, 『여행과 만남의 길잡이 북녘의 사회와 생활』(민속원, 2007).

6)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사회』(경인문화사, 2006).

7) 이우영, 「북한 사회연구 혹은 사회학적 북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김진환은 북한생활문화의 특성을 집단주의에 두고 조선노동당이 집권초기부터 집단주의를 토대로 한 집단주의 생활문화를 인민대중에게 정착시키는 과정을 논증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일상생활에 집단주의적 생활문화를 침투시키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천리마운동 등을 통해 집단주의 생활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시도하였다고 보았다.⁸⁾ 조한범은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은 국가소유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북한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통제라는 세 가지 공식적 구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소유의 문제, 생산과 분배의 문제, 사회통제의 차원에서 삶이 작동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내적인 변화의 동력으로서 자유로운 일상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것으로 파악하였다.⁹⁾ 노귀남은 북한의 일상생활을 양식적 측면, 즉 생활양식의 차원에서 접근한다. 생활양식이란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 활동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사상의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노귀남은 북한의 일상생활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도입과 확립의 과정을 거쳐 정치사회적 변화 속에서 생활양식이 변화되어 왔다고 본다. 북한 주민들에게 일상생활의 역사적 과정은 사회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질서, 봉건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과정, 인민들을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확립되었고, 최근에는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인해 불안정하고 기형적인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¹⁰⁾ 이미경과 김석향은 일상과 여성의 차원에서 사회적 변화와 속에서 변화되는 여성의 삶에 주목한다. 특히 경제난을 비롯하여 전통적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북한 여성의 생활 변화에 주목하였다.¹¹⁾

사회학의 관점에서 북한 사회를 분석대상으로 할 때는 북한 사회에 대한 경험적 접근이 어렵고, 방법론적인 접근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이나 심층면접 등을 통한 연구가 활용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연구는 주민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¹²⁾

이상의 논의에서 보이듯이 기존의 ‘생활문화 연구’에서 ‘생활문화’는 분명한 개념적 정의보다는 북한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폭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실제 생활문화와 관련한 연구에서 생활문화는 다양한 범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의 개념을 공통의 본질적 요소보다는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가진 생활문화로 정의한다. 이런 가족 유사성의 개념을 차용하면 남북한의 생활문화도 폭넓은 의미의 코리안 생활문화가 된다.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코리안을 아우르는 생활문화의 공통성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지만 교차 비교해 보면 유사성이 발견된다.¹³⁾ 생활문화가 변용되어 달라졌지만 쉽게 변화되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생활문화 통합 역시 남북한 생활문화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공통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소통의 지점을 넓히는 의미를 갖는다.

2005), 벗들,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정토출판, 2001),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나남, 1995), 박현선, 『현대북한 사회와 가족』(한울, 2003) 등이 있다.

8) 김진환,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북한연구학회, 2010), 23-48쪽

9) 조한범, 「김정일의 일상생활관」, 통일연구원 편 『김정일연구(II): 분야별 사상과 정책』(통일연구원, 2002), 243-270쪽.

10) 노귀남, 「북한의 일상생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사회』(경인문화사, 2006) 참고.

11) 이미경, 「경제난이후 북한여성의 삶과 의식변화와 한계」,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여성과 가족』(경인문화사, 2006)의 3장 ‘북한여성들의 생활 및 생존방식’, 김석향, 「일상생활에서 본 북한의 성평등 실태와 여성인권의 문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여성과 가족』(경인문화사, 2006).

12) 최완규 외,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영역연구』(한울, 2008),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통일연구원, 2008), 박순성·홍민 엮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 외침과 속삭임』(한울, 2010) 등이 있다.

13) 생활문화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김진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 참고.

3.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본 문화 분단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한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신분을 획득하기까지 제3국에서 ‘난민’ 및 ‘이주민’으로서 생활하다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복잡한 신분상의 변화를 겪는다.¹⁴⁾ 이 과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반적인 이주민의 특성도 갖고 있으며, 남한 사람들과는 한민족, 동포라는 특성도 갖고 있다.¹⁵⁾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취득하였지만 이것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과는 너무나 다른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⁶⁾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탈북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에 기초한다. 그러나 정착과정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적응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해 겪는 어려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조사에 의하면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보다 사회적응과정에서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탈북 전후 과정에서 경험한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은 남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국내거주 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남한사회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¹⁷⁾ 적응과정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충분한 귀속감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새터민의 일부는 정착에 실패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떠나 영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유랑생활을 하고 있다.¹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문제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기보다는 남북한의 생활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에 의한 적응문제가 되었다.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북한이탈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북한이탈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들의 국가정체성은 여러 차례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있을 때는 국가는 곧 어머니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탈북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탈북하기 이전 북한에 살았을 때 국가는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긍정적 정체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상호 관계를 통해 집단을 중시했던 국가이미지가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는 중국에 있으면서 국가관 인민들에게 ‘경제적 보장’은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탈북대학생들은 ‘국가는 진취성이 없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받고 살고 있는 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남한 사람들은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¹⁹⁾

2012년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의 민족공동성 조사에서도 남북한 주민의 문화적 갈등의 단초를

14) ‘ ’에 대한 용어 사용은 여러 가지로 변화되어 왔다. 북한지역을 이탈하여 남한에 온 사람에 대해 ‘귀순용사’, ‘귀순자’, ‘탈북자’, ‘월남자’,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가지로 호칭하여 왔다. ‘귀순자’와 ‘귀순용사’는 국제적 냉전질서 하에서 북한 인민군으로 군복무중 부대를 이탈하여 한국에 온 사람, ‘월남자’는 6·25 전쟁을 계기로 남한에 정착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에 대한 법제에 있어서도 국가 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지원법(1963.6.11) 등을 제정하여 지원해 왔다. 그러나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주민에 대한 법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르고, 2004년 7월부터는 ‘새터민’이라고 불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탈북자란 용어를 쓰고 있다.

15) 최대석·조은희,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2호(북한연구학회, 2010), 190쪽.

16) 「동아일보」, “새터민 대다수 우울증 앓는다”, 2012년 4월 2일.

17) 한샘·남석인·김윤경,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가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1호(북한연구학회, 2011), 190쪽.

18) 「한국경제」, “정착 실패한 새터민 일부 다시 떠나...영국캐나다서 유랑생활”, 2012년 4월 3일.

19) 최대석·조은희,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2호(북한연구학회, 2010), 190쪽.

발견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정체성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남한 사회에 대한 충분한 긍정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어디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을 선택한 답변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난다. 북한에 대한 강한 부정이 곧 남한 사회에 대한 강한 긍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살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선택한 비율이 월등히 높기는 하였지만 ‘통일한반도’를 택한 비율도 33%나 되어서 세 명중에 한 명은 북한도 남한도 아닌 ‘통일한반도’에서 살고 싶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남한 사회 정착기간이 오래될수록 높게 나타났다. 2006년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2006년 이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보다 ‘통일한반도’에서 살고 싶다는 답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채워줄 만큼 남한 사회의 정체성이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이탈 주민이나 다문화 가족은 지금까지 살아 온 환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들의 적응 문제는 정서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다. 특히 탈북자들은 북한에 있을 때는 물론 탈북 이후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이나 부정적 경험 등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고 있다. 탈북자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내의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기아 체험, 아사자나 총살 현장 목격으로 인한 충격이나 부정적 경험이 있으며, 탈북 이후에도 강제 송환, 재 탈북 과정에서의 신변 위협, 구타, 고문 등을 경험하고, 제3국에 머물면서 신변 위협, 인신 매매 등을 경험한다. 대한민국 정착 이후에는 ‘자신이 남한 사회에 잘 와 있는가’, ‘남한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남한 사회 구성원들과 소속감을 잘 형성하고 있는가’ 등의 불안감을 겪고 있다.²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착 서비스와 남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자주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심리적 갈등도 크다.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죄의식과 심리적 불안으로 정착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인 대한민국의 교육 및 자본주의 체제 등에 대한 부적응을 겪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든 것을 물어보고, 정부의 손길에 의지해야 하기에 자존심을 잃고 주민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자포자기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탈북자들이 겪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다. 탈북자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에서 가졌던 직업을 구하거나 학력에 적합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장을 구한 경우에도 직장 내 문화적 차이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의 이질화로 인한 어려움도 크다. 원래 가졌던 직업보다 낮은 직업을 택하게 되고 사회적 지위의 하락에 따른 자존심의 손상을 경험하고,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쳐지면서 부적응 현상을 보인다.

문화적 차이에 의한 어려움 역시 탈북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다. 남북의 분단체제로 인해 형성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으로 인한 갈등도 겪는다. 초기 경제활동의 주도권을 여성이 갖게 되면서 가정의 힘과 권위는 줄어들고 자식들과 부인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가족 폭력이나 이혼 등의 불화가 발생한다. 더욱 큰 문제는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높아지는 정신적 불안감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어 간다는 점이다.

통일을 대비한 시험대로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은 여전히 경제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어 종합적인 적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우리 사회 적응 문제는 향후 통일시 남북의 문화적 차이 극복 문제, 북한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를 풀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따라서 탈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이외에 문화적 갈등 해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탈북자들의 문화적 갈등에 따른 사회 일탈로 인한 사회적 문제 즉, 범죄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20) 많은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비롯하여 초기 정착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심(suspiciousness), 불안(anxiety), 우울(depression), 신체적 호소(somatic complaints)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탈북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어려움은 북한에서 있었던 기간이나 북한을 이탈하여 해외에 머물렀던 기간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통일과정에서의 소통과 치유가 병행되지 않은 급변의 통일이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한다.²¹⁾

4. 남북한 생활문화 소통의 의미

남북한의 생활문화의 소통은 남북 사이에 공통적인 사회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나아가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간의 차이를 우열 관계가 아닌 대등 관계의 차이로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존중과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코리언의 생활문화는 통일을 원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하게 영토의 통일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남북의 통일이 한반도 지형을 넘어 한민족의 글로벌 네트워크 민족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연구와 정책개발이라는 의미가 있다.

남북의 주민들인 차이를 인식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문화적 갈등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남북의 통일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60년 넘게 지속해 온 적대적 대타성이 극복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이질적인 체제 하에서 생활했던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국가의 새로운 체제 속으로 동시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문화적 차이는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문화적 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부정적인 현상은 통일 독일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통일독일이 독일 통일 이후에도 문화적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은 정치적 통일, 경제적 통일과 달리 문화적 통합은 단기간 내에 이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편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다른 문화를 온전히 통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제도나 경제제도는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갈 수 있지만 문화는 소통과정 없이 통합에 이를 수 없는 속성이 있다. 통일 독일이 겪고 있는 문화적 갈등 역시 서독의 제도와 문화의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된 지 10년 만에 동독주민의 경제적 수준이 서독 주민의 80%에 이를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였지만 내적인 장벽은 오히려 더 높게 형성되었다. '무능한 동쪽사람(Ossis)'와 '오만한 서쪽(Wessiss)'이라는 의식이 되풀이 되고 있어서 통일직후에 나타난 동서독인의 거리감이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이후 구 동독지역에서 태어난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자신을 통일독일이 아닌 동독인으로 인식한다는 결과도 있다.

통일한국의 경우에도 독일 통일의 경험이 재연될 여지가 크다. 남북의 문화는 수 십 년 동안 이질화의 길을 걸어 왔다. 문화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고, 정책 목표의 차이도 크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제2국민'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남북의 통합 준비도 대단히 미약하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남북통합지수'를 보면 남북한의 통합정도를 수치로 표시할 경우 통합수준은 20% 정도로 나타났다.²²⁾ 이 정도의 낮은 통합수준 상태에서는

21) 정착 문제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문제 차원을 넘어 일상화된 문제가 되었다. 탈북자 문제를 다룬 소설도 여러 편 나왔다. 탈북자 문제를 다룬 소설로는 김지수, <무거운 생>(『창작과비평』, 1996년 가을), 권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문학수첩』, 2007), 김남일, <중국 베트남어 회화>(『실천문학』 2004년 여름호), 문순태, <울타리>(소설집 『울타리』, 이룸, 2006), 이대환, 『큰돈과 큰돈』(실천문학사, 2008), 전성태, <강을 건너는 사람들>(『문학수첩』, 2005년 가을), 정도상, 『짚레끼』(창작과비평사, 2008), 정용병, <남과 북>(소설집 『꽃과 그늘』, 개미, 2001), 정철훈, 『인간의 악보』(민음사, 2006), 김정현, 장편<길 없는 사람들 1,2,3>(문이당, 2003), 리지명, 『삶은 어디에』(아이엘엔피, 2008), 박덕규, <노루사냥>(『한국소설』, 1996년 가을호), 박덕규, <세 사람>(『동서문학』, 1998년 봄), 박덕규,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소설집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당신들』, 웅진, 1999) 등이 있다. 이들 저서들은 북한으로부터의 탈출과 월경, 중국이나 제3국에서의 피신, 남한 사회에서 강요된 소수자로 살아가기 위한 문제들을 탈북자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22) '남북통합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통합율은 21.4%, 20%, 20.1%로 나타났다. 남북통합지수에 대해서는 김병연·박명규·김병로·정은미, 『남북통합지수, 1989-2007』(서울대학교출판문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이 대단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²³⁾

통일한국의 사회 통합이 남북의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가치와 연대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본다면, 제도나 구조의 통합보다는 미시적이고 문화적 통합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정부에서 제기하는 통일의 미래상은 낭만적이고 환상적이다. 통일한국의 미래 비전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토대 위에서 정치적 자유의 보장, 경제적 풍요, 그리고 다양성과 자율성의 신장이 실현되는 조화로운 공동체”가 될 것이며,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정치적 시민적 자유의 신장을 가져올 것이며,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고 전망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풍요로운 국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자원과 시설, 그리고 역할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복지정책과 분배제도가 정착될 것이다”, “구성원 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문화적 다원주의가 정착될 것이다”는 것을 제시한다.²⁴⁾ 통일한국의 구체적인 사회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한국의 비전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수많은 도전이 극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북 사이의 가치관과 문화적 통합, 생활문화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적 통합은 정치나 제도처럼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잠재적 요소로서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통일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에도 동서독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회통합의 장애가 되고 있다. 동서독의 불신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각인 효과’, ‘사회주의 추락의 경험’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²⁵⁾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각인 효과’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체화된 강력한 ‘사회적 지향’이 동독인들의 ‘불변적인 가치모형’으로 온존하게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던 규범적 표준들이 통일 후에 새로운 사회질서 하에서도 신속하게 바뀌지 않고 계속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 통일 이후에도 문화적 갈등과 가치관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로 표출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추락의 경험’이란 서독의 제도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메커니즘과 신속한 체제전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상실경험’을 겪게 되면서 사회주의 가치관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되면서 동독인의 자부심에 대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통일독일에서 동독은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격차 등의 ‘물질적 저해책’과 함께 사회주의 유산에 대한 일반적 경멸에 기초한 ‘인정(認定)의 결여’를 경험하게 된다. 독일 통일은 실패한 동독이 승리한 서독으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통일은 곧 동독인들이 서독인으로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동독인들이 통일이전까지 유지했던 모든 것들의 포기나 서독인의 것들에 의한 구성을 의미한다.²⁶⁾ 독일 통일은 동독주민들이 선택한 결정이었지만 통일의 결과는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동독인의 삶이 전근대적인 가치로 탈가치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실의 경험이 구동독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남으로써, 상실의 경험이 구동독인들 사이에 강한 내적 결속의 고리가 된 것이다. 남북의 통일과정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험은 한반도에서 재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의 문화적 이질성은 동서독의 경우보다 한층 심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근대화 과정을 겪은 이후 강대국에 의해 분할되었다. 통합 이후의 모델도 분명하였고, 통합에 대한 거부감도 적었다. 반면 남북한은 식민 상태에서 전혀 이질적인 정치체제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남북은 근대화의 경험에서 상당한 차이

, 2009) 참고.

23) 갈등의 생성, 증대, 감소, 그리고 소멸의 양상은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갈등은 끊임없이 생성된다. 갈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감소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 포기, 타협, 초월 등,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감소 또는 소멸하게 될 수도 있다.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217-223쪽 참고.

24)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1』 (통일교육원, 2012).

25) 전태국, 「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 - 변화를 통한 접근」 『한국사회학』 제41집 6호(2007)

26) 김병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이념」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 선진 통일한국의 이념과표 모색』 (사회통합위원회 “선진 통일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 모색” 1차세미나 자료집, 2011. 10. 7), 37쪽.

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졌다.

남한은 민주주의사회에 기초하는 다원주의체제로서 개인주의에 입각한 합리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개인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로 발전하여 왔다. 문화정책에서도 다원주의를 기초로 국가에서 문화예술에의 접근 기회를 증가시켜 배분하는 문화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남한에서 실질적인 문화 활동은 개인이 담당하고 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남한의 문화정책 목표는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자체의 자율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 남한의 문화는 국민의 공동체의식의 함양, 국민정서의 순화를 통한 바람직한 가치관으로의 계도, 국민의 정서적 욕구의 충족, 순수예술론의 관점에서 예술 그 자체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²⁷⁾

북한은 주체사상과 ‘사회정치적생명체론’, 그리고 이에 토대하고 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론’과 ‘조선민족제일주의론’이라는 이념적 토대를 통해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가치를 지배하는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사회를 구축하였다. 북한의 문화는 정치적 산물로서 최고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이념문화)이 표방하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집단주의적 사상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²⁸⁾ 이러한 북한의 정치교육을 경험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정치교육은 익숙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으로 체득됨으로써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다.²⁹⁾

문화적 차이에 더하여 전쟁을 통해 상호 적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체제 차이와 적대감은 통일 이후에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민족적 이질화에 대한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북한은 민족문화의 범주에 김일성 주석의 혁명적 문화예술을 편입시켜, 민족 정통성에 김일성 가계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아리랑민족’을 강조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차별화하고 있다.³⁰⁾ 남북 사이에는 단일민족의 신화가 깨어지고 있다. 남한에서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형질적 특성에 근거한 민족주의가 제도 중심의 민족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민족의 근거가 되는 것이 꿩, 피부색 등의 형질적인 요소와 함께 역사적 경험, 단일 언어, 전통문화의 요소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단일 언어와 혈통성에 근거한 민족의 개념에서 점차 문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옮겨지고 있다. 단일민족의 신화가 깨어지면 통일에 대한 대중적 동력을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5. 문화통합의 방향

남북은 분단 이후 문화적 소통과 교류없이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질적인 문화체제와 심성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로 인해 통일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적 갈등은 통일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통일한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27) ,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예술논총』 제5집 (1993), 53-55쪽.

28)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8권2호 (북한연구학회, 2004), 103쪽 : “북한에서 인민대중이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상문화적 조건을 마련하려는 인간개조사업의 본질 역시 결국은 북한주민이 부르조아적 개인주의에서 탈피하여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사상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 사상의식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강제적 평준화’에 집중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29) 조용관은 북한의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정치교육이 인민들을 외부세계와 단절시키고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함으로써 북한에서 학습한 여러 정치교육의 내용이 남한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오랜 기간 체득화 된 북한식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쉽게 바꿀 수 없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

30) 이에 대해서는 진영선, 「북한 ‘아리랑’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4권 1호(북한대학교, 2011) 참조.

남북 통합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갈등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갈등을 해소되지 못한다면, 문화적 갈등은 사회문화 통합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의 문화적 갈등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과정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문화갈등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적 갈등은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갈등으로 재연될 여지가 매우 높을 것이며, 이에 따라서 문화적 통합은 통일한국의 핵심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 시민사회를 통해 국가폭력에 대한 치유와 함께 민주적 가치체제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수 십 년 동안 내면화된 집단주의적 생활방식을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교양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로 전환되어야 하고, 남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야 한다. 정치제도와 달리 사회적 차원의 통합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포용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에서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 주민들이 문화적 차이를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남북한의 문화통합의 방향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한국의 보편적 가치 창출이다. 남북문화의 통합은 무엇보다 통일한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남북이 분단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유무형의 고통과 상처를 성찰함으로써 통일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확산해야 나가야 한다. 기존의 통일논의가 민족사적 당위론에 근거한 통일론이나 실용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적 삶의 문제, 분단으로 인해 받았던 고통을 해소하는 문화적 차원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민족적 단일성에 기초한 통일논의는 우리 사회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가치는 민족사적 문화유산을 넘어서는 가치와 제도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세계사적 흐름은 민족적 단일성에 근거한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 다문화 현상은 한국사회의 현상만이 아니다. 세계는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문화적 경계를 초월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민족적 우월성에 입각한 배타적 민족주의는 다문화시대, 문화다양화 시대를 맞아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동서냉전체제의 해체와 함께 진행된 정보통신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의 소통도 동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³¹⁾ 민족적 단일성의 신화에 의존한 통일문화 논리는 원초주의적인 동질화로서 민족적 배타성을 드러내기 쉽고, 힘의 우위에 입각하여 다른 한편을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쉽다. 즉 힘의 우세가 곧 민족적 정통성으로 표현되어 힘의 논리로 다른 한편의 문화를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쉽다. 즉 민족적 단일성이나 민족문화의 순수성에 대한 집착은 자신이 생각하는 전통을 잣대로 상대의 이질성을 변질로 단죄하는 배제와 폭력의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둘째, 분단 체트라우마의 극복이다. 통일한국의 문화정체성은 분단으로 인해 겪었던 갈등의 우리 생활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문화적 가치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근원적인 트라우마를 해소하고, 사유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이 낳은 심리적 상처와 분단적 장벽은 인식의 영역에서 합리적 판단을 거부하고 무의식적 거부반응으로 내면화되었다. 남북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인식과 판단이 일상화 되었고, 극단적인 적개심과 증오심이 표출되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분단인식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면화된 분단체제의 인식이 우리 삶의 깊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 분단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않는다면 분단이 생산한 '사회적 무의식'이 통일한국 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 주민의 상호적응성 제고이다. 통일한국의 문화정책은 남북 주민의 상호적응성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통일한국의 문화적 통합은 사회가 공유한 문화적 자산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규범, 가치 등은 사회구성원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다. 일정한 유형의 의사소통, 규범, 가치 등을 공유

31) 김형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서석사회과학논총』제1집 2호(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292쪽 : “문화공동체는 정치적, 경제적 관심사를 중심 주제로 하지 않고 문화적, 정신적, 지역적 협력을 지향하는 공동체라고 하루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공동체는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문화적·정신적 공동을 기반으로 하고, 서로의 문화적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을 모색하면서 보다 밀접한 문화적 상호이해와 문화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공식적·비공식적 문화연대 체제를 말한다.”

하고 있어야 사회적 소통과 문화적 통합이 가능해 진다. 통일한국은 상호 이질적인 집단의 대규모 통합이라는 전무후무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국회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남북 어느 한쪽이 겪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남북 주민이 상호적으로 겪어야 할 문제가 된다. 이 과정은 당연하게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적응이 아니라 상호 적응이 필요하다.³²⁾

넷째, 문화통합 심화를 위한 전략과 콘텐츠 개발이다. 남북한 문화가 교차하였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독일통일에서 나타났듯이 통일이후에 직면하게 될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차이, 심리적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통일전후 사회적 갈등에 대한 예측 및 갈등지형도를 구축하여 갈등관리 및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책매뉴얼 구축해야하며 이에 맞는 상징체계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모든 사회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 존재한다. 갈등은 사회에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며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확립하는 순기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통한 연대감 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상호간에 존재하는 편견과 주관적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가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들은 비록 언어와 인종은 같지만 분단현실에서 살아온 체제와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통일 이후 이들이 경험할 문화적인 충격을 해소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원만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전략을 통해 원만한 문화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통문화예술의 복원과 심성체계 통합이다. 통일한국에서는 이질화 된 남북 문화예술의 이론체계와 감성체계를 복구하여 남북한의 소통과 융합의 이론체계와 감성체계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문화정책의 기본으로 추진하면서 전통문화를 사회주의식으로 개조하였다. 북한 지역의 민족문화의 원형을 복원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는 향토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북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복원한다.

또한 남북 주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문화의 민족상징 통합이 필요하다. 남북한은 정치적 이념적 지향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정치체제로 인해 이질화된 남북한의 문화적 DNA의 원형을 찾아 통일시대 한민족 문화의 정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남북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재정립, 평화통일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즉 민족상징물의 통합을 통한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역사공동체이다. 통일국회의 정체성 형성한다는 것은 역사를 공유한다는 것이다. 역사통합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에 대한 정리 문제가 아니다.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통합, 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통합은 과거에 대한 정리를 통해 현재의 의미를 살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 체계에 대한 통합도 필요하다. 통일한국 시대에는 남북한 문화예술의 통합을 위한 체계적 접근 및 전략이 요구될 것이므로, 남북한의 예술체계, 문화체계 통합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문화예술 교육을 표준화 할 수 있는 커리큘럼 및 학습 프로그램 연구하고, 한국 문화예술 전문가 교육 체계화, 전문가 자격의 표준화, 전문가 재교육을 위한 제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은 남한 중심적 사고식이다. ³³⁾ 남한 중심적 시각은 국제사

32) ‘ (adaptation)은 생물학적 용어로서 생물유기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는 능력으로서 특히 개인과 환경간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다루는 개념이었던 것을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정치사회학에서는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에 적응해 나가는 재사회화 과정(re-socialization)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적응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서 여러 차이로 인식되고 있다. 알포트(Allport)는 ‘환경에 대한 자발적, 창조적 행동으로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가치, 규범, 질서에 합치되는 상태로 규정하고, 게이츠(Gates)는 ‘개체가 환경과의 조화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행동을 발전시키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라자루스(Lazarus)는 적응을 ‘두 가지의 과정 즉,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인자, 『적응심리』 (정민사, 1986) 참조.

33) 코리언 디아스포라의 생활문화적 소통을 위해서는 민족 문화의 근간이 되는 바탕을 찾아보고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코리언의 생활문화가 얼마나 달라졌으며, 어느 정도로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이의 대상, 중심과 주변, 원

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와 연관된 부정적 현상의 하나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국가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세계 10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서 북한을 비롯하여 해외 코리언들과는 다른 차별의식이 강하게 작동되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이나 러시아의 고려인들에 대한 정책을 시혜의 차원이나 저개발 국가의 노동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여기에 북한 경제가 급격한 침체를 겪으면서 통일되면 져야 할 부담스러운 짐으로 인식한다. 여기에 더하여 한류현상을 대표되는 남한 문화의 세계 진출은 문화적 우월감을 확산하는 요인이 되었다.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는 이면에는 이런 부담스러운 코리언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일등국민과 이등국민의 시각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통일관은 물론 통일에 대한 동력과 동의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통일은 막연하게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다. 통일은 노력을 통해 만들어가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통일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동조, 가치에 대한 공유, 생활문화의 소통을 통한 인간적 유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명옥, 「조선민복의 피줄의 공통성을 부인하는 사대매국행위」 『민족문화유산』, 2009년 1호.
- 길은배,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 김갑식·오유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의식의 단층」 『북한연구학회보』 8권2호, 2004.
- 김병로,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이념」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 선진 통일한국의 이념좌표 모색』, 사회통합위원회 “선진 통일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 모색” 1차세미나 자료집. 2011. 10. 7.
- 김병연·박명규·김병로·정은미, 『남북통합지수, 1989-2007』,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 김인자, 『적응심리』, 정민사, 1986.
- 김진환, 「조선노동당의 집단주의 생활문화 정착 시도」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0.
- 노귀남, 「북한의 일상생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사회』, 경인문화사, 2006.
- 독고순,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9.
- 류지성·김형수, 「동북아문화공동체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2호,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 박순성·홍민 역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 외침과 속삭임』, 한울, 2010.
- 박현선, 『현대북한 사회와 가족』, 한울, 2003.
- 박형중, 「통일국가의 정치체제와 이념」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 선진 통일한국의 이념좌표 모색』, 사회통합위원회 “선진 통일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 모색” 1차세미나 자료집. 2011. 10. 7.
-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사회』, 경인문화사, 2006.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나남, 1995.
- 오기성, 『남북한 문화통합론』, 교육과학사, 1999.
-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도서출판 세명, 2001..
- 윤인진, 「탈북과 사회 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2호 2000.
- 윤인진, 「탈북자문제의 실태와 분석: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모델」 『통일논총』 제18호, 2000.
- 이두원,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와 이념」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 선진 통일한국의 이념좌표 모색』, 사회통합위원회 “선진 통일국가를 위한 국가정체성 모색” 2차세미나 자료집. 2011. 11. 11.
-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3.

변형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화적 차이는 한민족 생활문화의 지역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코리언 생활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이 확장될 수 있으며, 문화적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 이우영, 「북한 사회연구 혹은 사회학적 북한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5.
- 전영선, 「북한 ‘아리랑’의 현대적 변용 양상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4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1.
-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권2호, 1997.
- 전태국, 「사회통합을 지향한 한국통일의 개념전략 - 변화를 통한 접근」 『한국사회학』 제41집 6호, 2007.
- 전태국, 「한국통일의 사회통합 문제 : 북한사회화의 효과」 『정책과학연구』 15권1호,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2005.
- 정창현, 『여행과 만남의 길잡이 북녘의 사회와 생활』, 민속원, 2007.
- 정판룡, 「세기교체와 중국조선족 가치관의 변화 및 민족전일체성문제」, 『중국조선족 현상태분석 및 전망 연구』, 연변대학교 출판사, 1997.
- 정홍익,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 『문화예술논총』 제5집, 1993.
- 조용관,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
-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통일연구원, 2008.
- 조한범, 「김정일의 일상생활관」, 통일연구원 편 『김정일연구(II): 분야별 사상과 정책』, 통일연구원, 2002.
- 좋은 벗들,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정토출판, 2001.
-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민속원, 1999.
- 주강현, 『북한의 우리식 문화』, 당대, 2000
- 최대석조은희, 「탈북대학생들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14권2호, 북한연구학회, 2010.
- 최완규 외,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영역연구』, 한울, 2008.
-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진으로 본 북한 주민의 생활』, 통일교육원, 2006.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11』, 통일교육원, 2012.
- 한만길 외,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의 실태』, 통일연구원, 2004.
- 한샘남석안김운경,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태도가 남한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1호, 북한연구학회, 2011.